

정책보고서 2009-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 연구

연구진

김수봉
김진수
도세록
김미숙

국 가 보 훈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국가보훈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머리말

우리나라는 20세기를 전후하여 일제에 의한 침략과 지배로 주권을 상실하고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이러한 식민·점령체제가 36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철저한 계략과 억압과 함께 침략세력에 직·간접적으로 결탁하여 민족을 억압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개인이나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광복이후 부적절한 역사의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친일파의 기득권 유지와 부적절한 재산 축적, 각계각층인사의 친일논란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제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재산은 환수되지 않고 후손에게 상속되어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뒤 늦은 감이 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9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이나 독립정신 선양정책사업 등의 용도에 우선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1,700여억 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기금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독립정신 계승 사업에 활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특별법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3.1운동의 헌법정신을 구현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종전과 동시에 반대세력의 방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나치재산의 환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1998년 워싱턴 선언, 2009년 테레즈선언 등을 통해 유대인 몰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는 한 차원 높은 선양사업들을 전개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함은 물론, 민족의 우월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유럽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정신 선양정책 사업들이 발굴·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 연구위원 책임 하에, 도세록 연구위원, 김미숙 연구위원과 외부 연구진으로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가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 연구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과 김유경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 |
|----------------------------------|-----|
| 제1장 서론 | 12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3 |
| 제2장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및 독립정신 선양정책 | 15 |
| 제1절 독립유공자 현황 | 15 |
| 제2절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 18 |
| 제3절 독립정신 선양정책 | 24 |
| 제4절 사업수행의 재원 | 35 |
| 제3장 친일귀속재산 활용 의식조사 | 38 |
| 제1절 독립유공자 후손 의식조사 | 38 |
| 제2절 국민의식 조사 | 61 |
| 제3절 전문가 의식조사 | 72 |
| 제4절 조사결과의 시사점 | 77 |
| 제4장 외국의 반민족재산 환원사례 | 83 |
| 제1절 나치재산 환원 사례 | 83 |
| 제2절 외국의 주요 선양프로그램 | 104 |
| 제3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 110 |
| 제5장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 115 |
| 제1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115 |
| 제2절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 127 |
| 제3절 친일귀속재산에 의한 기금조성 | 132 |
| 제4절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 136 |

| | |
|-------------------------------|-----|
| 제5절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및 시사점 | 152 |
|-------------------------------|-----|

| | |
|----------------------|-----|
|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의 | 156 |
|----------------------|-----|

| | |
|------------|-----|
| 참고문헌 | 159 |
|------------|-----|

| | |
|----------|-----|
| 부록 | 162 |
|----------|-----|

| | |
|-----------------------------------|-----|
| 1. 독립유공자 후손 친일귀속재산 활용 의식조사표 | 164 |
|-----------------------------------|-----|

| | |
|--------------------------------|-----|
| 2. 일반 국민 친일귀속재산 활용 의식조사표 | 171 |
|--------------------------------|-----|

| | |
|---------------------------------------------------|----|
| <표 II-1> 독립유공자 훈격별 포상자 현황 | 16 |
| <표 II-2>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현황 | 16 |
| <표 II-3>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적용범위 | 17 |
| <표 II-4> 독립유공자 등록현황(수권가구 기준: 2009년 11월말 기준) | 18 |
| <표 II-5> 독립유공자 가구원 등록현황(2009년 11월말 기준) | 18 |
| <표 II-6>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 급여체계 | 19 |
| <표 II-7> 2009년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월 보상금 지급액 | 19 |
| <표 II-8> 2009년도 사망일시금 지급액 | 20 |
| <표 II-9> 특별예우금 지급 기준 | 21 |
| <표 II-10> 학습보조비 지급액(학기당 1인 기준) | 23 |
| <표 II-11> 독립유공자 국비가료와 감면가료 | 23 |
| <표 II-12> 보훈문화교실 | 30 |
| <표 II-13>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 30 |
| <표 II-14> 나라사랑 정신선양 연수 교육 | 31 |
| <표 II-15> 교육대상별 중점 교육내용 | 31 |
| <표 II-16>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영주귀국 정착금 | 32 |
| <표 II-17> 독립유공자 본인 보훈수혜 내용 | 33 |
| <표 II-18>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수혜 내용 | 34 |
| <표 II-19> 2009년도 보훈예산 사업비 총괄표 | 35 |
| <표 II-20> 독립유공자 가구당 지원액 추계(2009년도 예산기준) | 36 |
| <표 II-21> 2009년도 보훈선양 사업비 | 36 |
| <표 II-22> 2009년도 기금 사업비 | 37 |
| <표 III-1> 독립유공자 후손 분포 현황 | 38 |
| <표 III-2> 지역별 독립유공자 후손 분포 및 의식조사 표본수 | 40 |
| <표 III-3> 독립유공자 후손 의식조사 조사결과 | 41 |
| <표 III-4> 독립유공자 후손의 연령분포 | 41 |

| | |
|----------------------------------------------|----|
| <표 III-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후손) | 42 |
| <표 III-6> 독립유공자 후손의 분포 현황 | 43 |
| <표 III-7>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 여부 | 44 |
| <표 III-8> 학부모로써의 어려움 | 45 |
| <표 III-9> 경제활동 상태(후손) | 46 |
| <표 III-10> 주관적 경제생활수준(후손) | 46 |
| <표 III-11> 생계 곤란의 주요 사유 | 47 |
| <표 III-12>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자부심 | 48 |
| <표 III-13> 후손의 자부심 사례 | 49 |
| <표 III-14> 독립유공자 지원의 당위성 | 50 |
| <표 III-15> 국가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후손) | 51 |
| <표 III-16> 국가 지원 선호유형 | 52 |
| <표 III-17> 제수비 지원 확대(후손) | 54 |
| <표 III-18>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후손) | 55 |
| <표 III-19> 독립정신 계승 중점 사업(후손) | 56 |
| <표 III-20> 독립유공자 개별지원(후손) | 57 |
| <표 III-21> 일반국민 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후손) | 59 |
| <표 III-22> 독립정신 계승 교육·연구사업(후손) | 60 |
| <표 III-23> 조사대상 가구의 인구구성 | 61 |
| <표 III-2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일반) | 62 |
| <표 III-25> 경제활동상태(일반) | 63 |
| <표 III-26>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일반) | 64 |
| <표 III-27> 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일반) | 65 |
| <표 III-28> 친일환수 재산의 독립정신 계승 사업 타당성(일반) | 66 |
| <표 III-29> 독립정신 계승 중점사업(일반) | 67 |
| <표 III-30> 독립유공자 지원 수준(일반) | 68 |
| <표 III-31> 국가 지원 유가족의 범위(일반) | 69 |

| | |
|--------------------------------------------------|-----|
| <표 III-32>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 지원(일반) | 70 |
| <표 III-33> 일반국민 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일반) | 71 |
| <표 III-34> 독립정신 계승·발전 중점 교육·연구사업(일반) | 72 |
| <표 III-35>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전문가) | 73 |
| <표 III-36>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범위(전문가) | 73 |
| <표 III-37> 제수비 지원 확대(전문가) | 74 |
| <표 III-38> 독립정신 계승 중점사업(전문가) | 74 |
| <표 III-39> 일반국민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전문가) | 75 |
| <표 III-40> 독립정신 계승·발전 중점 교육·연구사업(전문가) | 75 |
| <표 III-41> 친일귀속재산으로 별도의 기금 조성·운영에 대한 의견 | 76 |
| <표 III-42>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한 국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 | 76 |
| <표 VI-1> 협력자재판소와 시민재판부의 형선고 | 85 |
| <표 VI-2> 단계별 특징 | 92 |
| <표 VI-3> 1945년 2월까지 연합군 점령지역에서 체포된 나치협력자 수 | 92 |
| <표 VI-4> 1955년까지 오스트리아 특별재판소의 재판 결과 | 93 |
| <표 VI-5> 국가사회주의자법에 의한 오스트리아 나치 분류(1948) | 98 |
| <표 VI-6> 나치협력 죄목으로 해고된 오스트리아인 나치의 통계 | 98 |
| <표 VI-7> 주요국의 공훈선양정책 | 109 |
| <표 V-1> 순애기금재원 | 117 |
| <표 V-2> 순애기금조성 현황 | 118 |
| <표 V-3> 연도별 대일청구권 자금 전입현황 | 118 |
| <표 V-4>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 118 |
| <표 V-5> 친일귀속재산 전입현황 | 119 |
| <표 V-6> 순애기금사업 유형 | 119 |
| <표 V-7> 주요사업 내용 | 120 |
| <표 V-8> 연도별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121 |
| <표 V-9> 연도별 제수비 지급액 | 121 |

| | |
|------------------------------------------------|-----|
| <표 V-10> 연도별 사망조위금 지급액 | 122 |
| <표 V-11> 연간 생계부조금 지급액 | 123 |
| <표 V-12> 국내 산재묘소 단장 및 국립묘지 이장 현황 | 124 |
| <표 V-13> 지목별 친일재산 전입현황 | 132 |
| <표 V-14> 지역별 친일재산 전입현황 | 132 |
| <표 V-15> 지목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대비표 | 134 |
| <표 V-16> 지목별 기금조성 규모 | 134 |
| <표 V-17> 친일재산 연도별 매각 전망 | 135 |
| <표 V-18> 제3자 매각 부당이득금액 현황 | 135 |
| <표 V-19> 연도별 전체 기금조성 전망 | 135 |
| <표 V-20> 기금과 예산의 차이 | 137 |
| <표 V-21>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예산 | 138 |
| <표 V-22>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사업 | 142 |
| <표 V-23>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정착금 | 144 |
| <표 V-24>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수혜대상자(최저생계이하자 기준) | 146 |
| <표 V-25> 4~5대 후손 장학사업 소요예산 | 146 |
| <표 V-26> 독립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 | 147 |
| <표 V-27>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 운영하는 정부기금 | 148 |
| <표 V-28> 비영리재단과 공익재단의 차이점 | 150 |
| <표 V-29> 연도별 기금운용수익 및 개별지원사업 소요예산 추계 | 151 |
| <표 V-30> 주요 정책 아이디어 | 153 |
| <표 V-31> 최종 당선작 | 155 |

그림 목차

| | |
|--------------------------------------------------|-----|
| <그림 Ⅲ-1> 적절한 국가 지원 유가족의 범위 | 77 |
| <그림 Ⅲ-2> 독립유공자가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78 |
| <그림 Ⅲ-3> 친일환수재산 활용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 지원 사항 | 78 |
| <그림 Ⅲ-4> 친일환수재산 활용의 중점 사항 | 79 |
| <그림 Ⅲ-5> 일반국민 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 | 80 |
| <그림 Ⅲ-6> 교육/연구사업 중점 사항 | 81 |
| <그림 V-1> 친일귀속재산의 활용유형: 사업기준 | 140 |
| <그림 V-2> 친일귀속재산 활용의 기본방향 | 142 |
| <그림 V-3> 영주귀국자와 국내 독립유공자 유족과의 생계수준 비교 | 144 |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입되고 있음
- 전입된 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에우법 제30조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지원,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및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되어있음
 - － 광복회등 관련단체에서는 그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후손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 목적

- 귀속재산의 특성과 사업기금의 목적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를 위한 기존사업을 계속 수행함은 물론 시대변화에 맞는 차별화된 신규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 이를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수준, 복지욕구 등에 부합하는 지원방향이 마련되어야 함
 - － 또한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및 민족정기 선양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함
- 이와 같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 본 연구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의 복지증진은 물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할 수 있음

○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임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연구 방법

○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후손들의 생활상태 및 지원욕구를 파악

- 독립유공자후손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손자녀(3대손)의 지원현황 분석고찰
- 추가지원 유형과 유형별 소요재정 추계

○ 일반 국민 의식조사

- 생활수준 및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의식

○ 전문가조사

-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 및 기금운용

○ 외국 사례 연구

- 나치귀속재산 등의 활용
- 외국의 선양정책사업

○ 독립유공자 및 후손, 국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 친일귀속재산의 성격을 반영하여 기존 순애기금 운용과 차별화 필요성

- 효율적 기금활용을 위한 관리운영방안 모색

□ 연구 내용

- 독립유공자 예우지원과 선양정책의 이해를 통해 향후 예측가능한 지원 및 선양사업의 방향을 설정함
-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독립유공자 후손 및 일반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실시
 - 조사표 내용

| 대상자 | 조사내용 | 대상자 |
|----------|-------------------------------------------------------------------|-------|
| 독립유공자 후손 | 일반사항,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후손의 의식 및 욕구에 관한 사항, 친일환수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 1000명 |
| 일반 국민 | 경제활동, 친일환수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 1000명 |
| 전문가 | 친일환수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 37명 |

- 유럽 각국의 나치 재산의 환수사례와 주요국의 선양프로그램 운영수행을 분석하여 통해 향후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도출
- 순애기금의 사업과 친일귀속재산의 전입과정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

II.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및 독립정신 선양정책

□ 독립유공자 현황

-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은 2009년 11월 말 현재 11,766명으로 이 중 등록자는 생존 애국지사 본인은 178명이고 나머지 6,588명은 독립유공자 유족임

□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은 보상금, 사망일시금 등 현금급여와 교육·의료·취업 등 현물급여로 이루어고, 독립유공자 유족은 타 보훈대상자보다 수혜범위가 더 넓음

□ 독립정신 선양정책

- 독립유공자 선양정책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공훈선양, 사망시 예우, 교육·학술회의 지원, 국제보훈활동 등이 있음

□ 사업수행의 재원

- 2009년도 세출예산 보훈사업비는 총 3조 1200억 원 규모로 그 중 보훈선양 사업비는 545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7.4%이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요사업은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보훈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III. 친일귀속재산 활용 의식조사

1. 독립유공자 후손의식 조사

-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의식조사를 위해 약 12.3만 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1000명을 조사함
 - 우선 모집단의 남녀구성비는 55:45정도이며, 후손들의 경우 3대손이 약3만8천명, 4대손 5만 8천명, 5대손 약 2만 6천명임
 - 전체대상자의 연령별로는 10대손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5대손의 36.6%가 이 연령층에 속하기 때문임. 그러나 대손별로 보면 3대손의 경우 40대가 25.2%로 가장 많고, 4대손은 20대 25.8%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및 표본오차
 - 표본으로 추출된 3,000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숙련된 전화조사원 CATI 시스템으로 진행
 - 추정값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로 추정됨
 - 표본추출확률과 응답률로 기본가중치를 산출한후, 독립유공후손의 연령을 고려하여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하여 최종가중치 산출
- 후손들이 일반국민보다 국가로부터 좀 더 많은 지원 여부
 - 전체 응답 비율은 ‘그렇다’가 77.0%, ‘아니다’가 12.5%, ‘모르겠다’가 10.5%의 순으로 나타났음
- 국가의 제도적 지원확대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 ‘고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가 37.2%, ‘증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가 26.4%, ‘현재처럼 손자녀까지 타당하다’가 20.0%,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해야 한다’가 15.0%의 순으로 나타났음
-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국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부분

- ‘교육지원’ 59.6%, ‘주택지원’ 19.1%, ‘의료지원’ 16.1%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제수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
 - 제수비 지원확대에 대한 응답이 ‘고손자녀대까지 지원해야 한다’ 43.3%, ‘현재가 적당하다’ 28.4%, ‘증손자녀대까지 지원해야 한다’ 27.7%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환수에 대한 생각
 -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가 85.9%, ‘생각해 본 적 없다’가 8.2%, ‘그저 그렇다’ 4.7%, ‘잘못된 일이다’ 1.1% 순으로 응답하였음
- 환수한 친일재산이 독립정신을 기리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사업’이 37.0%,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연구’가 27.1%, ‘독립정신을 후세에 기억시킬 수 있는 상징시설 건립’이 18.0%,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이 17.3%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 친일귀속재산의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 필요 부분
 - ‘경제상황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 인상’이 40.4%, ‘4~5대 후손 장학금 지원’이 37.5%, ‘제수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가 13.3%, ‘해외 거주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이 7.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일반 국민 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 적당한 것
 - ‘젊은 세대에게 독립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상시캠페인 시행’ 30.0%, ‘위대한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다양화’ 22.0%, ‘많은 국민에게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추진’ 20.8%,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같은 상징시설물 건립’ 13.8%, ‘정부 기념식 규모 확대’가 12.9% 순으로 나타났음
- 교육·연구 사업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이 40.2%,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교육 실시’가 31.0%,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실시’가 15.0%, ‘학술회의, 문헌발간 사업 강화’가 12.5%의 순으로 나타났음

2. 국민 의식조사

□ 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의견

○ 전체적으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하여 매우 잘된 일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 전체 응답자 중 68.8%가 ‘매우 잘된 일이다’, 15.3%가 ‘생각해 본적 없다’, 13.3%가 ‘그저 그렇다’, 2.6%가 ‘잘못된 일이다’ 순으로 응답함

□ 환수한 친일재산을 사용하여 일제에 항거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것에 대한 생각

○ 친일재산을 사용하여 독립정신을 기리는 것에 관하여 타당(84.0%)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있음

－ 전체응답자 중 48.9%가 ‘타당’, 35.1%가 ‘매우타당’, 13.3%가 ‘그저 그렇다’, 2.6%가 ‘타당하지 않음’ 순으로 응답함

□ 친일환수재산을 활용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사업추진에 중점 사항

○ 친일환수재산을 활용하여 독립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사업과 독립정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연구사업이 다음으로 나타났지만 둘의 차이는 미비하였음

－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33.5%)’,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사업(25.5%)’, ‘독립정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연구(25.3%)’, ‘독립정신을 후세에 기억시킬 수 있는 상징시설 건립(15.7%)’순으로 나타남

□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가지원 필요 여부

○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가로부터 일반국민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전체 응답자중 74.4%가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가로부터 일반국민보다는 좀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13.7%가 ‘지원 받지 않아야 한다’, 11.6%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함

□ 국가가 지원하는 유가족의 범위

○ 국가가 지원하는 유가족의 범위를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확대한다면 증손자까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타당(57.6%)’, ‘증손자까지 확대해야 함(19.3%)’,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해야 함(13.0%)’, ‘고손까지 확대해야 함(10.2%)’ 순으로 나타남

□ 친일환수재산 활용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적당한 개별 지원

○ 현행 월 3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를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은 적은 편이었음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가계 지원비 인상(62.0%)’, ‘4·5대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20.6%), ‘해외거주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10.6%)’, ‘손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제수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6.8%)’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대상으로 적당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 독립유공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정부기념식등과 같은 기념사업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상징시설물 건립은 적당하다는 의견은 매우 적었음

- 젊은 세대에게 독립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상시 캠페인 시행(27.5%), 위대한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다양화(21.9%), 많은 국민에게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기회 제공 행사 추진(18.9%),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기념식 규모확대(17.1%),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과 같은 상징시설물 건립(13.2%) 순으로 나타남

□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사업에 중점 두어야 할 부분

○ 청소년을 위한 교육 분야 및 독립운동에 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46.0%)’, ‘독립 운동사 및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실시(27.5%)’,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실시(15.4%)’, ‘학술회의/ 문헌발간 사업 강화(11.1%)’ 순으로 나타남

3. 전문가 조사

- 전문가의 친일귀속재산의 활용한 독립정신 계승사업에 대한 의견은 독립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40.5%,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 사업 37.8%, 국민 참여 기념사업 16.2%, 독립정신을 후세에 기억시킬 수 있는 상징시설 건립이 5.4% 순으로 나타남
- 예우지원에 대한 의견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 인상이 81.1%로 가장 많았으며, 4~5대 후손에 대한 장학금지원이 8.1%, 해외 거주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지원이 5.4%, 기타가 5.4%로 나타남
 - 연령별 선호를 살펴보면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인상’을, 40세 이상의 경우는 ‘4~5대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상대적 우위를 보임.
 - 한편 지원 유가족 범위는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56.8%,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녀까지 21.6%, 증손자녀까지 확대가 16.2%, 고손자녀까지 확대 5.4%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제수비 확대 지원에 관한 의견은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0.3%, 증손자녀 24.3%, 고손자녀 5.4% 순으로 나타남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는 ‘위대한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한 선호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독립정신을 잊지 않도록 상시 캠페인 시행 21.6%,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18.9%, 정부 기념식 규모 확대 9.5%, ‘명예의 전당’과 같은 상징물 건립 8.1% 순으로 조사됨
- 독립정신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사업에 중점 두어야 할 사항
 - 책, 영상물 등을 통한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37.8%), 학술회의·문헌발간 사업(29.6%),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실시(18.9%),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13.5%)순으로 나타남
- 친일귀속재산으로 별도의 기금 조성·운영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7.6%, 반대가 32.4% 나타남
 -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한 국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는, 교육기관·도서관

건립 40.5%, 장학사업 27.0%, 출판·홍보사업 24.3%, 기념관·기념시설
건립이 8.1% 순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와 시사점

-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의 대상은 현행 손자녀까지가 타당하나, 장학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 및 일반국민까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함
- 독립정신계승사업은 젊은 세대에게 역점을 두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장학사업 등 친일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함

VI. 외국의 재산환원 사례

-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과 재산몰수는 직접적 관련성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협력자 처벌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함
- 오스트리아는 나치과거의 극복을 위하여 나치에 협력한 자를 처벌하여 사회적으로 퇴출시키는 인적청산에 매진하는 한편 이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시행함
- 외국은 전쟁 직후 친나치 대상에 대한 강력하고 직결적 처분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제거되었음
 -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배상 및 지원에 투입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음
- 다만 Hard ware적 사업과는 달리 Soft ware적 사업으로 숨겨진 애국지사의 미담이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회분위의 환기 및 교육에 접목
- Soft ware적 사업을 문화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친숙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를 통한 국제연화제 등의 참가를 통하여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함
- 장기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사업은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사회보훈)차원에서 일반화된 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한시적인 재정 확보는

기금을 통하여 국민적 애국심 등의 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음

V.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주요 사업은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국내 산재묘소 단장 및 국립묘지 이장사업과 국외 묘소 유해봉환, 현지 묘소단장 사업, 독립운동문헌발간사업이 있음
 -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연간 약 62억원이 소요되지만 실제 운용하는 유동자산 기금 규모는 2008년 12월 말 현재 9,176백만 원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매년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사업을 수행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29일 제정됨으로써 2007년 5월부터 친일재산이 순애기금으로 전입되고 있지만 이는 부동산(토지)으로 전입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을 전환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
- 2009년 12월 친일재산 전입은 881필지, 831만㎡, 공시가격으로 763억이나, 이 재산의 면적대비 66%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제기 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 주택재개발 등 토지수용으로 기 매각한 토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토대로 향후 순애기금 조성액을 추정한 결과
 - 매각 가능한 재산은 모두 처분한다는 가정 하에 2013년까지 1467억 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여기에 독립법이 개정되어 친일행위자 후손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은 부당이득반환금이 기금에 전입예정인 258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기금조성액은 1,725억 원에 다다를 것임
- 친일귀속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의 활용방안은 특별법을 입법취지를 살려 종전의 순애기금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친일귀속재산 활용의 기본방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지원, 제수비 지원, 영주귀국 정착금을 받지 못한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착금 지원 등 예우지원사업의 현실화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독립정신 계승 교육·연구

기관의 확충과 장학지원 등 선양정책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음

- 재단법인, 예를 들어 “독립정신계승·발전 재단(가칭)” 설립하여 순애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함으로써 기금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어 수익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전문인력의 자체채용 등으로 기금증식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친일재산이 기금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재산의 처분·수익사업 등에 자율성 부여 필요
 - 또한, 정부와 단체(광복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기금 목적사업수행에 전력할 수 있어 획기적 기금증식 가능
- 국가보훈처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여 친일귀속재산 활용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결과를 보더라도 역사적 의미를 살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지원과 모든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양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위한 기념재단을 설립할 것을 주문하는데도 잘 나타나고 있음

VI. 요약 및 정책건의

□ 요약

- 친일귀속재산은 어느 누구의 몫도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시대를 초월한 독립정신 계승사업에 활용되어야 함.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예우 및 생활지원 사업들도 객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정부의 세출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책건의

- 귀속재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으나, 가능하면 기금이식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왜냐하면 친일귀속재산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독립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임
- “독립정신계승·발전 재단(가칭)”법인을 설립하여 순애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함으로써 기금의 자율성을 확대 및 기금증식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일제강점기하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이 늦게나마 국가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친일재산 국고귀속 작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0년 7월 12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되고, 귀속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30조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지원,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및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 등 여러 관련단체에서는 그간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한 후손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으로 친일귀속재산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귀속재산의 활용은 입법정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귀속재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변화를 고려한 신규사업의 발굴은 필연적이며, 무엇보다도 미래세대를 위해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친일귀속재산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친일재산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한민족 모두로부터 착취된 것이므로 사용범위 또한 보다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용도에 사용되어야한다. 그러므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의 복지증진은 물론 모든 국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향후 순차적으로 기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친일귀속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활용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일제와 맞서 투쟁하던 독립유공자 및 그 자녀들의 고통이나 생활의 어려움이 보다 가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영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 이후의 후손에게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화조사를 통해 독립운동자의 후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친일귀속재산 활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부가적으로 자녀의 교육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한편 보다 균형있는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양 전화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과 기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활용방법 및 사업내용 등을 고찰해보았다.

친일귀속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전입되어 독립유공자 예우법에서 정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 및 기금운용방법 등에 따라 그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이하 ‘순애기금’)에 대해 고찰해보고, 향후 전개될 사업을 고려하여 귀속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귀속재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를 위한 기존사업을 계속 수행함은 물론 시대변화에 맞는 차별화된 신규사업 추진이 요구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수준, 복지욕구 등에 부합하는 지원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및 민족정기 선양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내용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및 독립유공자 선양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하여, 향후 예측 가능한 지원 및 선양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독립유공자 현황과 지원내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3대인 손자녀 및 생활지원내용들을 살펴보고,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한계점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및 일반 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 각 대상자들이 느끼는 친일귀속재산의 활용방안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공평한 대안을 모색한다.

제4장은 유럽 국가의 나치재산 환원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친일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외국 주요국의 선양프로그램의 실태와 국가에 귀속한 친일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망해 본다.

제5장은 본 보고서의 핵심부분으로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방안마련에 앞서 그동안 순애기금의 설치목적 등을 알아보고 기금설치 이후 지금까지 수행해 온 사업의 분석과 아울러 친일귀속재산 기금의 전입과정과 향후 자금추이를 전망해본다. 또한 조사결과 나타난 욕구를 기준으로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수요 및 소요재정을 추계해 보고,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구상해 본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금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및 독립정신 선양정책

제1 절 독립유공자 현황

1. 독립유공자 유형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애국지사(愛國志士)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경우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편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독립유공자로의 포상여부와 훈격은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운동에의 참여 정도와 조직에서의 위치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의 일반적인 포상추천기준은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이상은 8년 이상 활동 또는 8년 이상 옥고,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은 5년 이상 활동 또는 4년 이상 옥고, ㉢건국훈장 애족장 (5등급)은 2년 이상 활동 또는 1년 이상 옥고, ㉣건국포장은 1년 이상 활동 또는 10개월 이상 옥고, ㉤대통령표창은 6개월 이상 활동 또는 3개월 이상 옥고 등이다.

2009년 11월말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자 현황을 보면 전체 11,766명으로 훈격 별로는 건국훈장 8,894명, 건국포장 804명, 대통령표창 2,068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건국훈장 중 1등급 30명, 2등급 93명, 3등급 800명, 4등급 3,557명, 5등급 4,414명 등이다.

<표 II-1> 독립유공자 훈격별 포상자 현황

| | 계 | 건국훈장 | | | | | | 건국 포장 | 대통령 표창 |
|----|--------|-------|-----|-----|-----|-------|-------|----------|-----------|
| | | 소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 합계 | 11,766 | 8,894 | 30 | 93 | 800 | 3,557 | 4,414 | 804 | 2,068 |

포상자 11,766명 중 실제로 포상을 전수받은 인원은 8,438명으로 독립유공자에
우범의 적용대상인 본인 또는 유족이 수령한 경우가 7,181명이며,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상 유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손자녀까지이므로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법상 유족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이 아닌 증손 이하 또는 방계혈족이
포상을 수령한 경우가 1,257명이나 되고 여기에는 외국인 포상 수령자도 43명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포상을 수령할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찾지 못한 포상자도 2,068
명이 있다.

<표 II-2>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현황

| 계 | 포상 전수자 | | | 미전수자 (외국인) |
|--------|--------|--------|-------------------|---------------|
| | 소계 | 법 적용대상 | 법 적용 비대상 (외국인) | |
| 11,766 | 8,438 | 7,181 | 1,257 (43) | 2,068 (2) |

2. 독립유공자 현황

독립유공자예우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즉,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표 II-2>과 같은데, 1순위는
배우자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는 제외 된다. 2순위인 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의미하며 단,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한정한다. 3순위는 손자녀로서,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의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마지막으로 4순위인 며느리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표 II-3>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적용범위

| 구분 | 적용 또는 인정범위 |
|--------------|-----------------------------------------------------------------------------------------------------------------------------|
| 배우자 (1순위) | ○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녀 (2순위) |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 |
| 손자녀 (3순위) |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 |
| 며느리 (4순위) |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로서 -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 2인 이상일 때에는 남편의 보상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으로 한정 |

이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에 등록된 수권가구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본인과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으로 구성되는데, <표II-4>에서와 같이 독립유공자 본인 가구는 178가구이며, 유족 등록가구는 총 6,588가구로 배우자 553, 자녀 3,477, 손자녀 2,558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손자녀는 연금대상이 되는 1,429가구와 연금비대상인 1,129가구로 나누어진다.

훈격별 유공자 등록현황은 표에 제시된 바처럼 건국훈장 5등급이 46.4%인 3,16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통령표창 21.5%, 건국훈장 4등급 17.4% 순으로 나

타났다.

<표 II-4> 독립유공자 등록현황(수권가구 기준: 2009년 11월말 기준)

(단위: 명, %)

| 구분 | 합계 | 본인 | 유족 | | | | | |
|-------|--------------|-------------|-------|-------|-------|-------|-------|-------|
| | | | 계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 |
| | | | | | | 소계 | 연금대상 | 연금비대상 |
| 계 | 6,766(100.0) | 178 | 6,588 | 553 | 3,477 | 2,558 | 1,429 | 1,129 |
| 건국훈장 | 1-3등급 | 464(6.9) | 5 | 459 | 25 | 173 | 261 | 149 |
| | 4등급 | 1,177(17.4) | 22 | 1,155 | 101 | 464 | 590 | 385 |
| | 5등급 | 3,137(46.4) | 114 | 3,023 | 329 | 1,701 | 993 | 510 |
| 건국포장 | 535(7.9) | 13 | 522 | 40 | 287 | 195 | 111 | 84 |
| 대통령표창 | 1,453(21.5) | 24 | 1,429 | 58 | 852 | 519 | 274 | 245 |

※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법적용 대상 유족이 없는 가구(제적) : 382가구

한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가구원 등록자 수는 총 57,791명으로 본인 178명, 배우자 553명, 자녀 11,170명, 손자녀 45,890명 등이다.

<표 II-5> 독립유공자 가구원 등록현황(2009년 11월말 기준)

(단위: 명, %)

| 합계 | 본인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
| 57,791 | 178 | 553 | 11,170 | 45,890 |

제2절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에 합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일반예산에서 지출되는 보훈급여금과 순애기금에서 지급되는 특별예우 가계지원금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전자는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으로 연금형식의 보상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으로 세분되고, 후자는 유공자, 유족 등을 특별예우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가. 보훈급여금

1) 보상금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본인 보상금과 유족 보상금으로 나눌 수 있다. 유족 보상금 지급대상은 배우자-자녀-손자녀 순으로 승계되며, 자녀의 경우 순차적으로 모든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유족 보상금 중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광복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의 손자녀 중 선순위 손자녀 1인에게만 지급된다.

<표 II-6>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 급여체계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비 고 |
|-------------|-----|-----|----------------------------|-----------------------------------|-------------------------------|
| 보상금 지급대상 | 본인 | 미망인 | 자녀 (사망시 차순위 자녀에게 승계) | 손자녀 (광복이전 사망한 순국선열의 손자녀 1인) | 광복이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는 미지급 |

한편, 보상금은 훈장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매월 지급한다.

<표 II-7> 2009년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월 보상금 지급액

| | | | | | (단위 : 천원) |
|------------------|---|---|-------|-----------|-----------------------------------|
| 대 상 별 | | | | | 보상금 |
| 애 국 지 사 | 건 | 국 | 훈 장 | 1~3등급 | 3,861 |
| | 건 | 국 | 훈 장 | 4등급 | 2,056 |
| | 건 | 국 | 훈 장 | 5등급 | 1,626 |
| | 건 | 국 | 포 장 | | 1,143 |
| | 대 | 통 | 령 표 창 | | 751 |
| 애 지 유 족 | 건 | 국 | 훈 장 | 1~3등급 배우자 | 1,709 |
| | 건 | 국 | 훈 장 | 1~3등급 유족 | 1,480 |
| | 건 | 국 | 훈 장 | 4등급 배우자 | 1,260 |
| | 건 | 국 | 훈 장 | 4등급 유족 | 1,233 |
| | 건 | 국 | 훈 장 | 5등급 배우자 | 1,026 |
| | 건 | 국 | 훈 장 | 5등급 유족 | 1,002 |
| | 건 | 국 | 포 장 | 배우자 | 707 |
| | | | | 유족 | 702 |
| | 대 | 통 | 령 표 창 | 배우자 | 411 |
| | | | | 유족 | 403 |
| 생 활 조 정 수 당 | | | | | 가족 3인이하 : 90천원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

2)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연금대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모두에게 해당된다. 생활조정수당은 희생도와 공헌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체계에서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저소득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보완적 급여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가족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기본생계비를 설정하고 보상금과 자가소득을 포함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충적 급여로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 성격의 보상금이다. 그러나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다른 후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차이가 있다.

<표 II-8> 2009년도 사망일시금 지급액

(단위 : 천원)

| 대 상 별 | | | | | 사망일시금 |
|------------------|---|---|-------|-----------|-------|
| 애 국 지 사 | 건 | 국 | 훈 장 | 1~3등급 | 3,068 |
| | 건 | 국 | 훈 장 | 4등급 | 3,008 |
| | 건 | 국 | 훈 장 | 5등급 | 1,504 |
| | 건 | 국 | 포 장 | | 1,008 |
| | 대 | 통 | 령 표 창 | | 927 |
| 애 지 유 족 | 건 | 국 | 훈 장 | 1~3등급 배우자 | 2,061 |
| | 건 | 국 | 훈 장 | 1~3등급 유족 | 2,000 |
| | 건 | 국 | 훈 장 | 4등급 배우자 | 1,789 |
| | 건 | 국 | 훈 장 | 4등급 유족 | 1,789 |
| | 건 | 국 | 훈 장 | 5등급 배우자 | 927 |
| | 건 | 국 | 훈 장 | 5등급 유족 | 927 |
| | 건 | 국 | 포 장 | 배우자 | 927 |
| | | | | 유족 | 927 |
| | 대 | 통 | 령 표 창 | 배우자 | 927 |
| | | | | 유족 | 927 |

나. 독립유공자 예우지원금

독립유공자 숭모사업은 생존애국지사에게 특별예우금을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제수비는 수권유족에게 지급되고 단순수급권자 생계부조금 계속 지급하며, 독립유공자 등의 위문·격려행사 실시하고 있다.

우선 특별예우금은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 방문지급이 가능하지만 매월 보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9> 특별예우금 지급 기준

| 대상 | 지급기준 | 시기 |
|---------|-----------|----|
| 3등급애국지사 | 월 1,000천원 | 매월 |
| 4등급애국지사 | 월 800천원 | " |
| 5등급애국지사 | 월 700천원 | " |
| 건국 포장자 | 월 600천원 | " |
| 대통령 표창자 | 월 600천원 | " |

가계지원비는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05. 1.1 이후 보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계는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순위는 광복이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지급 순위와 동일하다. 지급액은 매월 35만원이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정 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독립단순수급권자 생계보조금은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적용 비대상자인 독립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1~3등급 훈장자유족은 90,000원, 4등급훈장자유족은 84,000원, 5등급훈장자유족은 78,000원 기준으로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제수비는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25만원이다. 매월 1일을 지급 기준일로 하되 실제 기일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2. 현물급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의 예우를 위한 현물지원은 교육, 취업, 생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수용시설·고궁 등의 이용 및 주택 우선 분양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가. 교육지원

독립유공자의와 그 유족은 모두 교육보호의 대상이 되며, 교육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우선 취학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학생정원의 3%범위 안에서 교육보호 대상자를 취학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입학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에는 보훈대상자들의 진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현재는 의미가 없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비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이다. 교육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그 밖에 학비를 면제하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국가가 보조해 준다. 학비면제와 함께 면학지원을 위하여 학용품비 성격의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중에서 배우자에게는 대학까지 학습보조비가 지급되며 자녀에게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된다. 법상으로는 기숙시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

셋째, 특수교육의 지원이다. 심신장애나 학업성적의 불량 및 기타 사유로 교육보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며, 마찬가지로 학비가 면제되고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5조 3항에 근거하여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와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와 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과 ④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다.

<표II-10> 학습보조비 지급액(학기당 1인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 중학교 | 고등학교 | | 대학교 | 특수 | |
|-----|-----|------|-----|-----|--------|--------|
| | | 인문계 | 실업계 | | 유 · 초등 | 중 · 고등 |
| 지급액 | 110 | 134 | 169 | 218 | 490 | 660 |

나. 의료지원

독립유공자는 국가의 비용으로 행하여지는 국비가료대상자로서, 국비가료대상자는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가료할 수 있다. 보훈병원은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단위로 위탁병원 (2009년 현재 254개)을 지정하여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정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은 국가의 의무적 의료보장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그 진료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가료는 본인부담 60% 범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도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표II-11> 독립유공자 국비가료와 감면가료

| 구분 | 가료대상 | 의료체계 | 보장내용 |
|------|---------------|---------------------------------------|---------------|
| 국비가료 | 독립유공자 | · 보훈병원(5개) · 민간위탁병원(254개) · 요양원 | · 입원 · 외래진료 |
| 감면가료 | 독립유공자의 유족, 가족 |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 본인부담 60%범위내 |

제3절 독립정신 선양정책

1. 선양정책의 대상

공훈선양정책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애국애족정신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현창하고 나라위한 헌신을 존경받고 명예로운 국민정신을 고양하는데 있다. 직접적으로는 추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기억으로 전승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가치를 재창출하는 데 있다. 선양정책의 소재는 보훈관계법이 규정하는 보훈대상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국권침탈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적 위기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헌신한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표출했던 사상이나 정신이 소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독립유공 관련 공훈선양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독립운동 외에도 항일투쟁 또는 민족운동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민족운동이 일제 강점하에서 제 분야에서 전개된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라면 항일투쟁은 압제와 수탈에 대응한 물리적인 수단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행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용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독립운동은 넓은 범위의 민족운동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한 직·간접적인 저항운동을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8·15}는 광복이나 독립(independence) 또는 해방(liberation)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광복은 되찾았다는 회복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용어로서 정통주의 역사관과 관련이 있다. 독립은 제2차 대전 이후의 신생국에서 주로 사용되며 해방은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남을 강조하는 보편적 학술적 용어라는 특징이 있다.

2. 선양정책의 수행체계와 지향점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훈선양과 보훈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보훈발전계획에 공훈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실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각 계의 민간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등 10개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중요한 선양정책에 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징적 언어는 선양정책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당시의 표방된 모토일 수도 있고 후세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함축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징적 언어는 ‘민족정기’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독립, 광복, 건국, 호국, 자유, 민주 등 시대마다 다른 말로 표현되었지만 이런 시대적 가치 또는 모토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적 언어이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가 공훈선양정책을 특히 강조하는 의미로 민족정기 선양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훈선양사업의 지향점은 첫째,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것으로서 바른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지난날 민족정기가 독립정신, 호국정신, 민주정신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3. 선양정책의 내용

가. 기념일 및 기념행사

우리나라의 국가의식은 크게 국경일과 기념일로 구분된다. 국경일은 3·1절과 8·15광복절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다. 기념일은 정부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념일의 성격에 따라 각 부처별로 관장한다. 또한 이밖에 2·8독립운동기념일, 독립군대첩기념일, 다부동전투기념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행사 등과 같은 독립운동이나 전투와 관련된 많은 행사가 있다.

나. 기념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념시설물에는 독립운동이나 호국 그리고 민주운동과 관련된 국내외의 기념공원, 기념관, 기념탑(비), 조형물, 사적지 등이 모든 형태의 시설과 장소가 포함되며 선양정책의 핵심적 수단이다. 이러한 시설물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충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으

며, 특별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 또는 등록 될 수 있다. 시설물은 국내 1,616여 개소, 국외 788개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관리자 지정, 보수, 활용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인 만주 용정, 청산리, 봉오동, 블라디보스톡 등지에 표지석과 기념물을 설치하여 해외동포의 민족정신을 고양하는데 상징적 장소가 되도록 한다.

대표적 독립기념시설물로는 독립기념관, 서대문독립공원, 백범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도산공원, 매현기념관, 유관순기념관, 송재기념공원, 광복단기공원등이 있다. 해외 독립운동기념 시설물로는 상해 임시정부청사, 중경임시정부청사, 하와이독립운동기념관, 김좌진장군 기념공원(흑룡강성 해림시), 이준열사기념관(네덜란드 헤이그) 등이다.

다. 사망 시 예우 및 국립묘지 관리·유해봉환

국립묘지 안장은 사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이기도 하지만 선양정책적 기능이 더 강하다. 국립묘지는 안장업무에 그치지 않고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설치하여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묘지는 서울 현충원, 대전 현충원, 4·19민주묘지, 5·18민주묘지, 3개 호국원 등이 있다.

특히 중요한 사업은 순국선열 유해봉환사업이다. 일제치하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묘소를 확인하고 국내로 봉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현지에 보존하는 일은 선열들에 대한 위령과 추모는 물론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독립유공자 관련 사망 시 예우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애국지사 사망조위금 전달 및 조화 근정

사망조위금 지급이 지급 되는데 그 기준은 건국훈장 독립장 본인은 100만원, 애국·애족장 본인은 50만원, 포장·표창자 본인은 30만원, 건국훈장자 유족은 30만원, 포장·표창자 유족은 20만원이 지급된다. 단 현지 조문이 불가능한 해외 거주자

사망조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전달방법은 지방보훈관서장이 직접 조문하여 처장명
의의 조위금이 전달된다. 또한 애국지사 본인 사망 시에는 대통령 및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조화가 근정된다.

2)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규격 290cm x 140cm의 영구용 태극기를 처 본부에
서 일괄 제작하여 청 단위기관에 배부하여 증정한다. 지원대상자 사망 시 관할 보훈
관 서장 또는 간부 직원 등이 방문하여 증정하며(지역 실정에 따라 보훈단체장으로
하여금 방문, 증정하도록 할 수 있음), 사망사실 지연 통보로 부득이하게 직원조문이
불가한 경우 보훈관서장의 명의로 된 위로 서한문이 발송된다.

영구용 태극기의 사용요령은, 입관 후 영구 윗부분의 오른쪽에 건괘(☰), 왼쪽에
이괘(☷)부분이 오도록 하여 완전히 덮고, 영구용 태극기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
여 국기의 존엄성 유지하도록 한다. 매장 또는 화장 할 때 영구용 태극기를 관에서
분리하여 유족의 희망에 따라 보관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으며,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매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 근조기 근정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하며, 보훈병원 영안실에 빈소 마련 시 보훈병원장이 처장
명의로 근조기를 근정하고 장례의식 종료 후에 회수하여 보관한다. 보훈병원 이외의
경우 각 시·군·구 단위로 이미 배부한 근조기를 활용하되 전·공상군경, 무공수훈
자 등의 국가 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근정할 수 있는 관리·운용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4) 묘비제작비 지원

묘비 제작비 지원은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기당 30만원 범위
내이다. 관할보훈관서에서 묘비지원신청서 접수 시 규격, 비문내용 및 설치시기 등
이 포함된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여부 결정한다.

5) 지방산재 독립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이장

국립묘지 이장은 지방산재 독립유공자 묘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장 기수는 200기이다. 이장신청이 200기를 초과할 경우 긴급한 대상을 우선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기당 30만원이며, 단장지원을 받는 묘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장은 연중 실시되며, 지원방법은 해당 유족이 자력보유 또는 묘소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한 이장 희망 의사 표시하여 이장을 신청하고 해당 보훈관서에서 이장 희망 독립유공자의 묘소 진위여부(묘소 실태조사서 등) 및 희망 유족과의 관계 등 확인하여 이장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장신청서 접수 후 해당 국립묘지로 이송·안장 한다.

6) 지방산재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지방산재 독립유공자 묘소 중, 비·상석 설치 등 묘소단장을 희망하는 묘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기당 150만원이다. 묘역보수와 석물제작을 내용으로 한다.

라. 명예선양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은 대표적 독립기념사업으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찾아 그 공적 심사를 통하여 정부에서 서훈(훈·포장)하거나 대통령표창을 수여한다. 포상은 명예를 현창하는 의미도 있지만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총 11,766명(2009. 12)에게 서훈 또는 표창을 하였으며, 훈격별로는 건국훈장 8,894명, 건국포장 804명, 대통령표창 2,068명 등이다.

이밖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보훈문화상 시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 계열을 고려하여 유공자의 탄신, 의거, 서거, 기념일 등을 참고하고, 보훈(지)청, 독립기념관, 광복회 및 관련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업적 중심의 보도자료 주요 일간지를 배부하고 청소년층을 겨냥한 각종 온라인 홍보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들이 선호하는 캐릭터 등의 디자인으로 포스터 제작 각급 학교 배부, 독립유공자 기

념 사업회 등 민간주도 선양사업 추진 이달의 독립운동가 특별전시실 운영(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내)등을 주요관련 사업으로 한다.

보훈문화상은 예우증진 부문, 기념사업 부문, 문화예술 부문, 교육홍보 부문을 시상부문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마. 사료수집 및 편찬

독립운동사 등에 관련된 사료를 수집하여 사료집을 편찬·보급하고, 관련학계의 연구를 지원하거나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역사인식을 높인다.

독립운동사의 경우에는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민족운동사연구회, 근현대사연구회 등의 학술단체와 협력하여 학술연구 및 사료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바.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대상의 국내외 사적지 순방교육과 보훈문화교실 및 보훈캠프 등을 운영하고 교육용 자료를 발간·배포한다. 보훈관련 학술논문을 공모·시상함으로써 보훈문화의 학문적 저변을 넓히는 한편,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훈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각종 보훈행사를 계기로 문예물 창작 등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악회 또는 연극 등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고 있으며, 사이버 민족정기 선양센터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1) 학교 교육에서의 선양교육 확대 추진

연구용역, 나라사랑 교수학습 경진대회 개최, 교육과정 개편 시 선양교육이 반영된다.

2) 나라사랑 체험교육 참여 활성화

나라사랑 체험교육에는 보훈캠프 · 보훈문화교실 및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 있다.

<표 11-12>보훈문화교실

또한 독립유공자 본인 및 후손 대학생, 일반 대학생, 초·중등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 있다. 중국, 러시아 지역에서 실시되며 탐방 주관 단체는 광복회, 보훈교육연구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II-12>와 같다.

| 행사명 | 주관단체 | 시기 | 참가대상 | 인원 | 탐방지역 |
|-------------------|---------------|--------|-------|------|------|
| 야!장준하 구국장정6천리 | 장하준선생기념사업회 | 매년1월7일 | 대학재학생 | 40명 | 중국 |
| 청산리 역사대장정 |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 매년7월 | " | 60명 | " |
| 안중근의사독립투쟁지탐방 | 안중근의사숭모회 | 매년7월 | " | 40명 | " |
| 해외항일유적지답사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매년7월 | " | 100명 | " |
| 독립군적전지탐방 | 철기이벌석장군기념사업회 | 매년7월 | " | 50명 | " |
| 운암선생 항일운동사적지탐방 |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 매년8월 | " | 40명 | " |

나라사랑 정신선양 연수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은 다음의 <표 II-13>와 <표 II-14>와 같다

<표 II-14> 나라사랑 정신선양 연수 교육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회수 | 교육인원 | 교육기간 |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국 국가유공자 | 1 | 110 | 2박3일 |
| 국가유공자 미망인 | 전국미망인 | 1 | 110 | " |
| 고교생(남·녀) | 전국고교생 | 1 | 150 | " |
| 중학생(남·녀) | 전국중학생 | 1 | 150 | " |
| 어린이 나라사랑학교 | 전국대학생 | 4 | 160 | 1일 |
| 봉사단체임원 (남·녀) | 초등학생 | 2 | 300 | 2박3일 |
| 초·중등 교원(교감·교사) | 초·중등 (교감,교감) | 10 | 400 | 10일 |
| | (교장) | 1 | 50 | 5일 |
| 합계 | | 18 | 1,430 | |

<표 II-15> 교육대상별 중점 교육내용

| 교육대상별 | 중점교육내용 |
|-----------------------------------|------------------------------------------------------------------------------------------------------------------------------------------------------|
| 공통 | ○국가의 근본은 국가보훈과 나라사랑 정신 ○교육대상별 현장견학 실시 |
| 학생 (호우회, 고교생, 중학생, 봉사단체 임원) |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자긍심과 책임의식 부여 ○토론과 대화, 참여학습을 통한 현실인식과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민족정기 선양의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 |
| 초·중등 교원 | ○나라사랑정신(독립+호국+민주정신) 중요성 인식 ○일선교육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부여 ○나라사랑정신선양 과제의 주역으로서의 역할 ○분임별 연구발표과제는 일선교육현장의 나라사랑선양 길라잡이로 활용강조 ○보훈문화 확산주체로서의 역할 증대 |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제고 ○공동체 생활과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각오와 정신적 사회적 재할의욕 고취 |
| 국가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으로서의 긍지제공 ○체험사례 소개 등 참여식 대화를 통한 보훈가족 공동체의시기 함양 ○가정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설계 도모 |

사. 국제보훈 활동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초청과 영주귀국 및 현지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유엔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과 유대의 강화를 위하여 참전용사 재방한사업을 비롯한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 참전용사 및 가족을 초청하거나 현지를 방문하여 위로·격려하며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서 혈맹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중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자녀·자녀·손자녀·증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상에는 증손이하는 해당되지 않으나, 법무부와 업무 협조하여 증손 이하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정착을 위하여 정착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자녀·손자녀에게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표 II-16>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영주귀국 정착금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 애국지사 | | 7천만원 |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1.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7천만원 |
| | 2.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 | 가.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 4천 5백만원 |
| | 나.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 5천 5백만원 |
| | 다.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 7천만원 |

<표II-17> 독립유공자 본인 보훈수혜 내용

| 종목별 | 세부수혜내용 |
|-----------|---------------------------------------------------------------------------------------------------------------------------------------------------------------------------------------------------------------------------------------------------------------------------------------------------------------------------------------------------------------|
| 보훈 급여금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생활조정수당(저소득자에 한함) ◦사망일시금 및 사망조위금 ◦독립유공자 국내정착금(영주귀국자에 한함) |
| 교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료 등 면제 : 본인, 자녀, 손자녀(중·고·대학교) ◦학자금 지급 : 본인(대학교), 자녀, 손자녀(중·고등학교) |
| 취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고용명령 : 본인, 배우자, 35세 이하인 자녀·손자녀 3인까지 ◦가점취업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직업훈련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의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병원 진료 : 본인(국비) ◦위탁진료지정병원 진료 : 국비 ◦본인 응급진료 시 진료 7일 이내 보훈관서 신고 시 진료비 지원 ◦등록신청 시부터 결정 이전 : 보훈병원 진료신청 (필요시 외부 전문병원 진료 의뢰) |
| 대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토구입·사업대부 ◦주택구입·임차대부, 아파트 우선분양 등 ◦생활안정 대부 |
| 기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로보호 : 무의탁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보훈요양원 이용 : 급여비용 100% 감면 ◦수송시설 감면이용 ◦고궁 등 무료이용 ◦국립묘지 안장 ※ 배우자 합장 가능 ◦영구용 태극기, 묘지단장 |
| 타법에 의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개인택시 우선 면허 ◦전기요금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20% 할인 ◦무료진료증 발급 : 서울·인천·경기 거주 본인 및 배우자 ◦의료급여증 발급 : 생활등급 해당 시(실태조사서상 동거가족 전원) ◦국내항공 요금 50% 할인(동반가족 1인 포함) (항공사별 할인요율 다를 수 있음) ◦도시가스 요금 할인(취사용, 개별난방용) ◦엘피지 세금 인상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 특별 예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예우금 지급 : 생존애국지사(월 600~1,000천원) ◦사망조위금 지급 및 조화 근정 : 애국지사(300~1,000천원) |

<표II-18>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수혜 내용

| 종목별 | 세부수혜내용 |
|-----------------|---------------------------------------------------------------------------------------------------------------------------------------------------------------------------------------------------------------------------------------------------------------------------------------------------------------------------------------------------------------------------------------------------------------------------------------------------------------------------------------------------------------------------------------------|
| 보훈 급여금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지급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 1인에게 한함 • 며느리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생활조정수당(저소득자에 한함) ◦연금수급권자 사망시 사망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일시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유족 국내정착금(영주귀국자, 가족에 따라 차등지급) |
| 교육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료 등 면제 : 배우자, 자녀, 손자녀(중·고·대학교) ◦학자금 지급 : 배우자(대학교), 자녀, 손자녀(중·고등학교) |
| 취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고용명령 : 배우자 및 35세 이하인 자녀·손자녀 3인까지 ◦가점취업 :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직업훈련 : 배우자, 자녀,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
| 의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병원 진료 : 유·가족(60% 감면) |
| 대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토구입·사업대부 ◦생활안정 대부 ◦주택구입·임차대부, 아파트 우선분양 등 |
| 기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로보호 : 무의탁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보훈요양원 이용 : 급여비용 60% 감면(선순위 수권 유족1인과 그 배우자) ◦고궁 등 무료이용 ◦국립묘지 안장(배우자 합장 가능) |
| 타법에 의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개인택시 우선 면허 ◦전기요금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20% 할인, 선순위유족 ◦무료진료증 발급 : 서울·인천·경기 거주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 ◦의료급여증 발급 : 생활등급 해당 시(실태조사서상 동거가족 전원) ◦국내항공 요금 30% 할인(항공사별 할인요율 다를 수 있음) ◦도시가스 요금 할인(취사용, 개별난방용) |
| 특별 예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수비 지급 : 순국선열·애국지사유족(연 2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일이 속한 달의 1일 ◦사망조위금 지급 : 애국지사 유족(200~300천원) ◦가계지원비 :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녀의 자녀 1인(월 350천원) |

제4절 사업수행의 재원

1. 일반회계 재원

일반회계에 의한 독립유공자 예우 및 독립정신 선양을 위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훈처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보훈행정예산을 제외하고 사업비만 보면 총 3조1008억원이다. 그중에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선양정책 관련 사업예산을 보면, <표 II-19>에서와 같이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면 우선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보상금은 보훈보상 항목에, 독립유공자에 우지원 및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은 보훈선양, 각종 의료지원은 보훈복지에 포함되어 있다.

<표 II-19> 2009년도 보훈예산 사업비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 '09 예산 | 세부내역 |
|-------|-----------|--------------------------------------------------------------------------------------------------------------------------------------------------------------------------------------------------|
| 사업비 | 3,108,385 | |
| ○보훈보상 | 2,497,313 | 보상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영주권 국정착급, 보상금지급관리 |
| ○보훈관리 | 21,091 | 보훈단체지원등, 4.19도서관, 우정의마을건립, 보훈심사, 신체검사 |
| ○보훈선양 | 54,571 |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애국지사등 위문, 독립운동사적지순방, 독립유공자예우지원, 현충시설건립·관리, 백범김구기념관관리,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보훈기념행사, 호국·보훈의달행사, 독립운동관련행사등지원,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안중근의사100주년기념사업, 독립유공자발굴·포상, 나라사랑 정신연구, 이달의독립운동가홍보, 독립유공자발굴시스템구축 |
| ○국립묘지 | 26,248 |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민주묘지(3개소), 국립호국원(3개소), 국가유공자 사망시 지원 등 |
| ○보훈복지 | 495,994 | 국비진료, 위탁진료, 감면진료, 고엽제환자검진, 고엽제2세 역학조사, 고엽제4차 역학조사, 고엽제특별지원, 보철구지급, 고엽제단체지원, 보훈중앙병원건립, 부산보훈병원시설확충, 취업지원, 직업훈련, 민영교통시설이용보조, 보훈대상자학자금지원, 대부재원이차보전 |
| ○제대군인 | 13,168 |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참전용사재방한사업등, 제대군인수업료 보조 |

2. 독립유공자 가구당 지원액 추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되는 순예산을 살펴보면 보상금 예산이 703억 원, 교육지원 예산이 56억 원, 의료지원 예산이 7억 원 정도이다. 1가구당 연간 지원액으로 보면 34백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표 II-20> 독립유공자 가구당 지원액 추계(2009년도 예산기준)

(단위: 백만원)

| 대상구분 | | 인원 | 보상금 | | 교육 | | 의료 | | 계 | |
|-------|----|-------|--------|------|-------|-----|-----|-----|--------|------|
| | | | 규모 | 가구당 | 규모 | 가구당 | 규모 | 1인당 | 규모 | 가구당 |
| 독립유공자 | 본인 | 211 | 4,239 | 20.1 | 190 | 0.9 | 330 | 1.6 | 4,759 | 22.6 |
| | 유족 | 6,421 | 66,044 | 10.3 | 5,382 | 0.8 | 362 | 0.1 | 71,788 | 11.2 |

일반회계의 보훈선양사업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09년 연간 24,007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II-21>를 보면 선양사업 예산 중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국내외 독립운동관련 행사 지원사업도 예산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21> 2009년도 보훈선양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분 | '09 예산 | 구분 | '09 예산 |
|----------------|---------------|--------------------|--------|
| 합 계 | 54,571 | | |
|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 1,833 | 독립운동관련 행사 등 지원 | 3,945 |
| 애국지사등 위문 | 120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 547 |
| 독립운동사적지 순방 | 862 | | |
|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 5,300 | 안중근의사의거 100주년 기념사업 | 1,000 |
| 현충시설 건립 | 5,276 | | |
| 현충시설 관리 | 4,888 | 기념사업계기행사 | - |
| 백범김구기념관 관리 | 1,400 |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 943 |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 24,007 | 나라사랑정신 연구 | 332 |
| 보훈기념행사 | 1,885 |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 278 |
| 호국보훈의달 행사 | 1,455 | 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 구축 | 500 |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금 사업비는 약 62억원이다.

주요 기금 사업으로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광복이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지원하는 가계지원비·독립유공자의 제수비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과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사업,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등이 있다.

제5장에서 순애기금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09년 사업비 총액만 간단히 정리하였다.

<표 II-22> 2009년도 기금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 '09 예산 | 내 역 |
|--------------|--------|---------------------|
| 합 계 | 6,192 | |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 5,989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가계지원비 등 |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 60 |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
|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 143 | 묘소 단장, 이장 지원 |

제3장 친일귀속재산 활용 의식조사

제1 절 독립유공자 후손 의식조사

1. 독립유공자 후손 현황

독립유공자의 3~5대손인 후손들은 현재 약 12.3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우선 모집단의 남녀구성비를 보면 남자 54.5%, 여자 45.5%였으며, 후손들을 구분해보면 3대손인 손자녀가 31.6%, 4대손인 증손자녀가 47.0%, 5대손인 고손자녀가 21.5%로 나타났다. 한편 후손들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전후손의 연령별 분포는 10대가 20.9%로 가장 많았다. 한편 대손별로는 3대손인 손자녀는 40대 중년층이 25.2%로 가장 많았고, 4대손인 증손자녀는 20대 청년층이 25.8%, 5대손인 고손자녀는 0-9세의 유소년층이 44.9%로 가장 많았다.

<표 III-1> 독립유공자 후손 분포 현황

| | | (단위: 명, %) | | | | | | |
|----|----|------------------|------------------|------------------|------------------|------------------|-----------------|------------------|
| 구분 | | 0-9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이상 |
| 성별 | 계 | 20,335 (16.5) | 25,744 (20.9) | 22,997 (18.6) | 20,634 (16.7) | 16,070 (13.0) | 10,225 (8.3) | 7,329 (5.9) |
| | 남자 | 10,561 (15.7) | 13,675 (20.3) | 11,947 (17.8) | 10,885 (16.2) | 8,981 (13.3) | 6,355 (9.4) | 4,871 (7.2) |
| 대손 | 여자 | 9,774 (17.4) | 12,069 (21.5) | 1,150 (19.7) | 9,749 (17.4) | 7,089 (12.6) | 3,870 (6.9) | 2,458 (4.4) |
| | 3대 | 143 (0.4) | 1,648 (4.2) | 4,147 (10.7) | 7,602 (19.5) | 9,815 (25.2) | 8,475 (21.8) | 7,091 (18.2) |
| 대손 | 4대 | 8,289 (14.3) | 14,415 (24.9) | 14,935 (25.8) | 12,133 (20.9) | 6,176 (10.7) | 1,746 (3.0) | 238 (0.4) |
| | 5대 | 11,903 (44.9) | 9,681 (36.6) | 3,915 (14.8) | 899 (3.4) | 79 (0.3) | 4 (0.0) | 0 (0.0) |
| | | | | | | | | 계 |
| | | | | | | | | 123,334 (100) |

2. 표본설계

가. 표본 규모 및 조사 방법

독립유공자 후손의 「친일귀속재산 활용 의식조사」를 통하여 신뢰도 높은 정보가 수집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조사 대상자를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조사 기간에 제약을 받는 현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0명을 조사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조사 방법은 경제성과 조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전화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전화조사의 경우 관리하는 전화번호의 불명확, 장기간 부재로 통화 불가능, 응답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표 응답자 1,000명의 3배에 해당하는 3,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대상 명부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명부로부터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나. 조사대상 모집단 및 표본수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은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DB를 활용하였다. 독립유공자 후손 DB는 수시로 정보 갱신이 이루어지는 파일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의 표본 틀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표본추출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 연령, 거주지(시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우선 수집하여 표본추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독립유공자 후손 DB에 수록된 독립유공자 후손 수는 123,334명 이었고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38,921명, 증손자녀 57,932명, 고손자녀 26,481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4,644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 지역은 1,245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은 모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의식조사를 위한 전화조사 대상자 3,000명에 대한 표본추출은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층화변수로 하여 각 층별로 손자녀 900명, 증손자녀 1,800명, 고손자녀 300명이 추출되도록 하였고 각 층 내에서는 단순 확률추출(simple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이 가장 많은 서울이 826명, 가장 적은 제주는 38명이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표 Ⅲ-2> 지역별 독립유공자 후손 분포 및 의식조사 표본수

(단위:명)

| 지역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 | 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 | 전 체 |
|-----|------------|--------|--------|---------|------------|------|------|-------|
| | 손자녀 | 증손자녀 | 고손자녀 | | 손자녀 | 증손자녀 | 고손자녀 | |
| 서울 | 11,748 | 16,298 | 6,598 | 34,644 | 280 | 467 | 79 | 826 |
| 부산 | 2,551 | 3,432 | 1,314 | 7,297 | 57 | 94 | 20 | 171 |
| 대구 | 2,233 | 3,600 | 1,774 | 7,607 | 54 | 107 | 20 | 181 |
| 인천 | 1,762 | 2,843 | 1,486 | 6,091 | 45 | 84 | 16 | 145 |
| 광주 | 1,156 | 1,862 | 915 | 3,933 | 28 | 53 | 4 | 85 |
| 대전 | 1,081 | 1,701 | 749 | 3,531 | 23 | 60 | 6 | 89 |
| 울산 | 590 | 1,015 | 458 | 2,063 | 17 | 36 | 4 | 57 |
| 경기 | 8,884 | 14,215 | 6,986 | 30,085 | 203 | 450 | 82 | 735 |
| 강원 | 773 | 1,081 | 548 | 2,402 | 14 | 45 | 9 | 68 |
| 충북 | 669 | 1,083 | 592 | 2,344 | 10 | 40 | 5 | 55 |
| 충남 | 1,596 | 2,403 | 1,290 | 5,289 | 35 | 78 | 17 | 130 |
| 전북 | 908 | 1,406 | 680 | 2,994 | 17 | 46 | 7 | 70 |
| 전남 | 830 | 1,055 | 448 | 2,333 | 24 | 41 | 5 | 70 |
| 경북 | 1,615 | 2,412 | 1,177 | 5,204 | 35 | 75 | 14 | 124 |
| 경남 | 2,078 | 2,929 | 1,265 | 6,272 | 49 | 100 | 7 | 156 |
| 제주 | 447 | 597 | 201 | 1,245 | 9 | 24 | 5 | 38 |
| 전 체 | 38,921 | 57,932 | 26,481 | 123,334 | 900 | 1800 | 300 | 3,000 |

다. 조사결과 및 표본오차

표본으로 추출된 3,000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받아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화조사는 숙련된 전화조사원이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으로 진행하였으며 나이가 어리거나 연로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대리응답 하였다. 따라서 조사결과 분석 시 사용된 연령은 해당 연령의 후손이 거주하는 가구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조사 완료된 1,000명의 지역별 분포는 <표 Ⅲ-3>과 같으며, 본 조사는 전체 모집단으로 부터 1,000명이 조사 완료됨에 따라 추정값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로 추정된다.

<표 III-3> 독립유공자 후손 의식조사 조사결과

(단위: 명)

| 지역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 | 전 체 |
|-----|------------|------|------|-------|
| | 손자녀 | 증손자녀 | 고손자녀 | |
| 서울 | 104 | 146 | 18 | 268 |
| 부산 | 17 | 30 | 5 | 52 |
| 대구 | 28 | 46 | 4 | 78 |
| 인천 | 14 | 16 | 1 | 31 |
| 광주 | 11 | 20 | 1 | 32 |
| 대전 | 10 | 19 | 1 | 30 |
| 울산 | 6 | 14 | 1 | 21 |
| 경기 | 84 | 140 | 31 | 255 |
| 강원 | 4 | 16 | 2 | 22 |
| 충북 | 5 | 17 | 2 | 24 |
| 충남 | 10 | 21 | 3 | 34 |
| 전북 | 6 | 9 | 3 | 18 |
| 전남 | 7 | 17 | 0 | 24 |
| 경북 | 12 | 27 | 4 | 43 |
| 경남 | 16 | 43 | 1 | 60 |
| 제주 | 3 | 4 | 1 | 8 |
| 전 체 | 337 | 585 | 78 | 1,000 |

라. 추정방법

조사 완료된 자료는 표본 추출확률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표본추출확률과 응답률로 기본가중치를 산출한 후 기존의 독립유공자 후손의 연령 분포로 사후층화(Post stratification)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때 사후층화를 위한 모집단 정보는 <표 III-4>와 같다. 또한 본 조사의 각종 통계치는 구성비 추정을 목표로 하므로 조사 완료수(1,000명)를 기준으로 가중치(weight)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표 III-4> 독립유공자 후손의 연령분포

(단위:% ,명)

| 연 령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 | 전 체 |
|--------|---------------|---------------|---------------|----------------|
| | 손자녀 | 증손자녀 | 고손자녀 | |
| 19세 이하 | 4.6 | 39.2 | 81.5 | 37.4 |
| 20~29 | 10.7 | 25.8 | 14.8 | 18.6 |
| 30~39 | 19.5 | 20.9 | 3.4 | 16.7 |
| 40~49 | 25.2 | 10.7 | 0.3 | 13.0 |
| 50~59 | 21.8 | 3.0 | - | 8.3 |
| 60~69 | 11.8 | 0.4 | - | 3.9 |
| 70~79 | 5.2 | - | - | 1.7 |
| 80세 이상 | 1.2 | - | - | 0.4 |
| 전 체 | 100.0(38,921) | 100.0(57,932) | 100.0(26,481) | 100.0(123,334) |

3.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면,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55.8%, 여자는 44.2%로 남자가 11.6%p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2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대 18.5%, 30대 16.8%, 9세 이하가 16.7% 순이었으며, 60세 이상은 5.9%로 가장 낮았다. 대손별로는 독립유공자의 3대인 증손자녀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3대인 손자녀는 31.5%, 5대인 고손자녀는 21.5%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24.1%, 인천/경기 28.7%로 수도권지역에 52.8%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대구/경북 14.1%, 부산/울산/경남 13.1%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5.3%로 가장 많고, 초등졸이하 32.4%, 고졸 24.9%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후손)

(단위: 명, %)

| 구분 | | 빈도 | 구성비 | 구분 | | 빈도 | 구성비 |
|----------|----------|-----|------|----------------|----------|-----|------|
| 성별 | 남성 | 558 | 55.8 | 학력 | 초등졸업 이하 | 324 | 32.4 |
| | 여성 | 442 | 44.2 | | 중학교 졸업 | 74 | 7.4 |
| 연령 | 1-9세 | 167 | 16.7 | | 고등학교 졸업 | 249 | 24.9 |
| | 10-19세 | 208 | 20.8 | | 대학졸업 이상 | 353 | 35.3 |
| | 20-29세 | 185 | 18.5 | 가구 원수 | 1인 | 46 | 4.6 |
| | 30-39세 | 168 | 16.8 | | 2인 | 86 | 8.6 |
| | 40-49세 | 130 | 13.0 | | 3인 | 234 | 23.4 |
| | 50-59세 | 83 | 8.3 | | 4인 | 457 | 45.7 |
| | 60세 이상 | 59 | 5.9 | | 5인 이상 | 177 | 17.7 |
| 대손 | 손자녀 | 315 | 31.5 | 경제 활동 | 임금근로자 | 435 | 43.5 |
| | 증손자녀 | 470 | 47.0 | | 고용주/자영업 | 127 | 12.7 |
| | 고손자녀 | 215 | 21.5 | | 실업자 | 48 | 4.8 |
| 거주 지역 | 서울 | 241 | 24.1 | | 비경제활동인구 | 390 | 39.0 |
| | 인천/경기 | 287 | 28.7 | 경제 생활 수준 | 매우 어렵다 | 109 | 10.9 |
| | 대전/충청 | 96 | 9.6 | | 어려운 편이다 | 311 | 31.1 |
| | 광주/전라 | 69 | 6.9 | | 보통 | 527 | 52.7 |
| | 대구/경북 | 141 | 14.1 | | 여유있는 편이다 | 50 | 5.0 |
| | 부산/울산/경남 | 131 | 13.1 | | 매우 여유있다 | 4 | 0.4 |
| | 강원/제주 | 35 | 3.5 | | | | |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의 가구구성원을 보면, 4인가구가 45.7%로 가장 많고, 3인 23.4%, 5인 이상 17.7%로 나타났으며 후손 혼자 사는 독신가구도 4.6%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43.5%, 비경제활동인구 39.0%, 고용주/자영업 12.7%로 순이었다.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을 보면, 58.1%가 보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0.9%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여건

1) 독립유공자 후손의 분포 현황

조사대상 후손 1000명의 특성을 보면, 남녀 모두 증손자녀의 구성비가 47%내외로 가장 많고, 남자의 경우 손자녀 29.9%, 고손자녀 23.5%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손자녀 33.5%, 고손자녀 19.0%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1~9세에서는 고손자녀의 구성비가 58.1%로 가장 많고, 10대~30대에서는 증손자녀의 구성비가 각각 55.8%, 65.4%, 58.9%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후에서는 손자녀의 분포가 가장 많아 50대 83.1%, 60세 이상 96.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6> 독립유공자 후손의 분포 현황

| (단위: %, 명) | | | | | |
|------------|--------|---------|----------|----------|-----------|
| 구분 | | 손자녀(3대) | 증손자녀(4대) | 고손자녀(5대) | 계(N) |
| 계 | | 31.5 | 47.0 | 21.5 | 100(1000) |
| 성별 | 남자 | 29.9 | 46.6 | 23.5 | 100(558) |
| | 여자 | 33.5 | 47.6 | 19.0 | 100(442) |
| 연령 | 1~9세 | 1.2 | 40.7 | 58.1 | 100(167) |
| | 10~19세 | 6.3 | 55.8 | 38.0 | 100(208) |
| | 20~29세 | 17.8 | 65.4 | 16.8 | 100(185) |
| | 30~39세 | 36.3 | 58.9 | 4.8 | 100(168) |
| | 40~49세 | 61.5 | 38.5 | 0.0 | 100(130) |
| | 50~59세 | 83.1 | 16.9 | 0.0 | 100(83) |
| | 60세 이상 | 96.6 | 3.4 | 0.0 | 100(59) |

*p≤0.05, **≤0.01, ***≤0.001

2) 독립유공자의 후손 인지 여부

조사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4.0%, 모르겠다는 16.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녀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세는 59.7%인 반면, 60세 이상은 모두 알고 있었다. 대손별로는 3대손인 손자녀는 98.4%, 5대손인 고손자녀는 56.6%로 나타나 대가 멀어질수록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인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II-7>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 | 예 | 아니오 | 계(N) | 비고 |
|----|--------|-------|------|-----------|-------------------------------------|
| 계 | | 84.0 | 16.0 | 100(1000) | - |
| 성별 | 남자 | 83.5 | 16.5 | 100(558) | $\chi^2=0.235$ (p=0.628) |
| | 여자 | 84.6 | 15.4 | 100(442) | |
| 연령 | 1~9세 | 59.7 | 40.3 | 100(167) | $\chi^2=110.173^{***}$ (p=0.000) |
| | 10~19세 | 81.4 | 18.6 | 100(208) | |
| | 20~29세 | 84.5 | 15.5 | 100(185) | |
| | 30~39세 | 90.6 | 9.4 | 100(168) | |
| | 40~49세 | 94.0 | 6.0 | 100(130) | |
| | 50~59세 | 97.4 | 2.6 | 100(83) | |
| | 60세 이상 | 100.0 | 0.0 | 100(59) | |
| 대손 | 손자녀 | 98.4 | 1.6 | 100(315) | $\chi^2=170.283^{***}$ (p=0.000) |
| | 증손자녀 | 86.8 | 13.2 | 100(470) | |
| | 고손자녀 | 56.6 | 43.4 | 100(215) | |

*p≤0.05, **≤0.01, ***≤0.001

3) 학생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어려움

학생자녀를 둔 576명의 응답자 중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비부담이 43.3%,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15.1%, 성적부진이 8.4%, 또래관계 6.9%, 교사와의 관계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상대적으로 남자는 학비부담을, 여자는 성적부진, 또래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한편 연령별로는 20대, 60대 후손들이 학비부담에 대한 어려움의 비율이 각각 62.2%, 66.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또는 대학생을 둔 부모들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이하와 30대 후손들은 학업스트레스와 성적부진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교육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손별 학비부담의 어려움은 5대손인 고손자녀(56.4%)로 가장 높았고, 3대손인 손자녀(51.6%)가 4대손인 증손자녀(31.8%)로 조사되었다. 또한 손자녀인 3대손의 경우에는 성적부진을 11.9%, 증손

자녀는 또래관계 12.4%로 상대적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8> 학부모로써의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 | 성적 부진 | 또래 관계 | 교사와 관계 | 학업 스트레스 | 학비 부담 | 기타 | 없다 | 계(N) | 비고 |
|----|--------|-------|-------|--------|---------|-------|------|------|----------|-------------------------------------|
| 계 | | 8.4 | 6.9 | 0.5 | 15.1 | 43.3 | 11.2 | 14.6 | 100(576) | - |
| 성별 | 남자 | 7.7 | 5.7 | 0.2 | 14.3 | 45.6 | 11.9 | 14.6 | 100(291) | $\chi^2=2.994$ (p=0.810) |
| | 여자 | 9.1 | 8.0 | 0.8 | 15.9 | 41.0 | 10.4 | 14.6 | 100(285) | |
| 연령 | 1~9세 | 6.2 | 8.8 | 0.0 | 11.3 | 38.6 | 6.4 | 28.7 | 100(78) | $\chi^2=81.882^{***}$ (p=0.000) |
| | 10~19세 | 8.4 | 8.6 | 1.0 | 26.0 | 28.5 | 13.1 | 14.4 | 100(202) | |
| | 20~29세 | 6.0 | 1.2 | 0.0 | 8.8 | 62.2 | 14.5 | 7.3 | 100(72) | |
| | 30~39세 | 12.0 | 10.3 | 0.0 | 13.2 | 40.5 | 10.6 | 13.4 | 100(62) | |
| | 40~49세 | 9.4 | 5.1 | 0.9 | 7.7 | 51.9 | 11.2 | 13.8 | 100(112) | |
| | 50~59세 | 9.1 | 4.6 | 0.0 | 5.4 | 66.7 | 6.9 | 7.3 | 100(47) | |
| | 60세 이상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2) | |
| 대손 | 손자녀 | 11.9 | 1.8 | 0.6 | 8.4 | 51.6 | 14.3 | 11.3 | 100(159) | $\chi^2=102.172^{***}$ (p=0.000) |
| | 중손자녀 | 7.7 | 12.4 | 0.8 | 12.0 | 31.8 | 15.2 | 20.2 | 100(274) | |
| | 고손자녀 | 5.9 | 1.8 | 0.0 | 28.5 | 56.4 | 0.0 | 7.4 | 100(143) | |

*p≤0.05, **≤0.01, ***≤0.001

4) 경제활동 상태

응답자 1,000명의 현재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응답으로 임금근로자가 43.5%, 비경제활동인구가 39.0%, 고용주/자영업이 12.7%, 실업자가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자가 50.8%로, 여자(34.4%)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자가 32.1, 여자 47.6%로,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30대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72.9%로 가장 많았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손별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고손자녀(5대손)가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손자녀(3대손)가 43.1%로 가장 많았다.

<표 III-9> 경제활동 상태(후손)

(단위: %, 명)

| 구분 | | 임금 근로자 | 고용주/ 자영업 | 실업자 | 비경제 활동인구 | 계(N) | 비고 |
|----|--------|-----------|-------------|-----|-------------|-----------|------------------------------------|
| 계 | | 43.5 | 12.7 | 4.8 | 39.0 | 100(1000) | - |
| 성별 | 남자 | 50.8 | 13.0 | 4.1 | 32.1 | 100(558) | $\chi^2=31.853^{***}$ (p=0.000) |
| | 여자 | 34.4 | 12.3 | 5.7 | 47.6 | 100(442) | |
| 연령 | 1~9세 | 55.8 | 8.4 | 2.3 | 33.6 | 100(167) | $\chi^2=90.240^{***}$ (p=0.000) |
| | 10~19세 | 42.8 | 15.0 | 1.9 | 40.2 | 100(208) | |
| | 20~29세 | 40.2 | 7.6 | 7.6 | 44.6 | 100(185) | |
| | 30~39세 | 56.5 | 9.8 | 4.5 | 29.2 | 100(168) | |
| | 40~49세 | 36.6 | 23.9 | 6.2 | 33.3 | 100(130) | |
| | 50~59세 | 33.3 | 19.9 | 8.1 | 38.6 | 100(83) | |
| | 60세이상 | 14.9 | 6.2 | 5.9 | 72.9 | 100(59) | |
| 대손 | 손자녀 | 34.1 | 16.4 | 6.4 | 43.1 | 100(315) | $\chi^2=36.086^{***}$ (p=0.000) |
| | 증손자녀 | 42.8 | 13.0 | 4.6 | 39.5 | 100(470) | |
| | 고손자녀 | 59.0 | 6.6 | 2.7 | 31.7 | 100(215) | |

*p≤0.05, **≤0.01, ***≤0.001

5)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응답자 1,000명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다’가 31.1%, ‘매우 어렵다’ 10.9%로 ‘경제 수준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2.0%로, ‘여유있다’는 응답 5.4%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 수준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보통인 경우 40대 이후(40대 51.1%, 50대 56.4%, 60대 이후 56.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대손별로는 대손이 낮을수록(손자녀 53.1%, 증손자녀 39.0, 고손자녀 32.4%)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II-10> 주관적 경제생활수준(후손)

(단위: %, 명)

| 구분 | | 매우 어렵다 | 어려운편 | 보통 | 여유 있는 편 | 매우 여유 있는 편 | 계(N) | 비고 |
|----|--------|-----------|------|------|------------|---------------|-----------|------------------------------------|
| 계 | | 10.9 | 31.1 | 52.7 | 5.0 | 0.4 | 100(1000) | - |
| 성별 | 남자 | 12.2 | 31.8 | 50.0 | 5.5 | 0.5 | 100(558) | $\chi^2=5.194$ (p=0.268) |
| | 여자 | 9.2 | 30.3 | 56.0 | 4.2 | 0.2 | 100(442) | |
| 연령 | 1~9세 | 2.9 | 25.6 | 65.7 | 5.8 | 0.0 | 100(167) | $\chi^2=73.331^{***}$ (p=0.000) |
| | 10~19세 | 13.8 | 28.3 | 52.3 | 5.7 | 0.0 | 100(208) | |
| | 20~29세 | 8.5 | 33.8 | 52.4 | 5.3 | 0.0 | 100(185) | |

| | | | | | | | | |
|----|--------|------|------|------|-----|-----|----------|------------------------------------|
| | 30~39세 | 7.7 | 28.2 | 60.1 | 3.4 | 0.6 | 100(168) | |
| | 40~49세 | 11.1 | 40.0 | 41.1 | 5.7 | 2.0 | 100(130) | |
| | 50~59세 | 19.5 | 36.9 | 38.6 | 5.0 | 0.0 | 100(83) | |
| | 60세이상 | 26.9 | 29.3 | 42.2 | 1.6 | 0.0 | 100(59) | |
| 대손 | 손자녀 | 16.7 | 36.3 | 42.1 | 4.2 | 0.6 | 100(315) | $\chi^2=38.869^{***}$ (p=0.000) |
| | 증손자녀 | 7.0 | 32.0 | 55.5 | 5.2 | 0.3 | 100(470) | |
| | 고손자녀 | 10.8 | 21.6 | 62.2 | 5.4 | 0.0 | 100(215) | |

*p≤0.05, **≤0.01, ***≤0.001

6) 생계곤란 주요 이유

경제수준이 어렵다고 응답한 420명을 대상으로 생계곤란의 이유를 질문 한 결과,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가 32.2%, 소득활동이 어렵기 때문이 15.8%,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이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연령별로 교육비용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9세가 64.8%, 10~19세 57.3%의 순이며, 수입 감소라고 응답한 경우는 20대 44.7%, 30대 44.3%로 높게 나타났다. 대손별로 양육 또는 교육 비용에 대한 응답은 고손자녀(5대손)가 61.0%, 증손자녀(4대손) 40.2%, 손자녀(3대손) 30.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생계 곤란의 주요 사유

| (단위: %, 명) | | | | | | | |
|------------|--------|-------------|--------------|--------------|------|------|-------------------------------------|
| 구분 | | 소득활동 어렵다 | 의료비 지출 많다 | 교육비용 많이 들 | 수입감소 | 기타 | 계(N) |
| 계 | | 15.8 | 4.8 | 39.9 | 32.2 | 7.3 | 100(420) |
| 성 별 | 남자 | 18.2 | 4.1 | 38.4 | 31.0 | 8.3 | 100(245) |
| | 여자 | 12.4 | 5.6 | 42.1 | 33.8 | 6.0 | 100(175) |
| 연 령 | 1~9세 | 5.0 | 1.8 | 64.8 | 20.0 | 8.4 | 100(48) |
| | 10~19세 | 7.8 | 4.0 | 57.3 | 26.1 | 4.8 | 100(87) |
| | 20~29세 | 15.9 | 6.7 | 20.1 | 44.7 | 12.5 | 100(78) |
| | 30~39세 | 8.6 | 5.6 | 34.1 | 44.3 | 7.5 | 100(60) |
| | 40~49세 | 8.5 | 5.2 | 52.9 | 29.1 | 4.2 | 100(66) |
| | 50~59세 | 17.6 | 3.7 | 32.9 | 37.0 | 8.8 | 100(47) |
| | 60세이상 | 77.1 | 5.5 | 0.0 | 13.9 | 3.5 | 100(33) |
| | | | | | | | $\chi^2=177.647^{***}$ (p=0.000) |
| 대 손 | 손자녀 | 28.0 | 3.8 | 30.9 | 31.8 | 5.5 | 100(167) |
| | 증손자녀 | 6.2 | 6.6 | 40.2 | 38.5 | 8.5 | 100(183) |
| | 고손자녀 | 11.6 | 2.3 | 61.0 | 16.6 | 8.5 | 100(70) |
| | | | | | | | $\chi^2=62.567^{***}$ (p=0.000) |

*p≤0.05, **≤0.01, ***≤0.001

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의식 및 욕구

1)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자부심

전체 응답자 1,000명 중에 ‘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61.2%로, ‘자랑스러운 편이다’ 26.7%, ‘자랑스럽지 않다’ 0.8%,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11.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자랑스럽다(매우+자랑스러운 편)’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85.5%이며, 여자의 경우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은 90.7%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전연령층에서 ‘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의 비율이 모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매우 자랑스럽다’는 비율이 73.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손별 ‘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 비율은 고손자녀(5대손)가 75.4%, 손자녀(3대손) 67.8%, 증손자녀(4대손) 50.2%의 순이다.

<표 III-12>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자부심

(단위: %, 명)

| 구분 | | 매우 자랑스럽다 | 자랑스러운 편이다 | 자랑스럽지 않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 계(N) | 비고 |
|----------|--------|-------------|--------------|-------------|---------------|-----------|------------------------------------|
| 계 | | 61.2 | 26.7 | 0.8 | 11.3 | 100(1000) | - |
| 성별 | 남자 | 62.2 | 23.3 | 0.9 | 13.5 | 100(558) | $\chi^2=10.932^*$ (p=0.012) |
| | 여자 | 59.8 | 30.9 | 0.7 | 8.5 | 100(442) | |
| 연령 | 1~9세 | 62.1 | 23.0 | 0.0 | 14.9 | 100(167) | $\chi^2=32.805^*$ (p=0.000) |
| | 10~19세 | 66.0 | 23.8 | 1.0 | 9.2 | 100(208) | |
| | 20~29세 | 59.0 | 27.5 | 0.0 | 13.5 | 100(185) | |
| | 30~39세 | 53.9 | 31.3 | 2.2 | 12.6 | 100(168) | |
| | 40~49세 | 53.8 | 30.3 | 1.4 | 14.5 | 100(130) | |
| | 50~59세 | 73.5 | 23.9 | 1.0 | 1.6 | 100(83) | |
| | 60세 이상 | 68.0 | 27.3 | 0.0 | 4.7 | 100(59) | |
| 학력 | 초졸이하 | 63.9 | 24.5 | 0.4 | 11.2 | 100(324) | $\chi^2=10.165$ (p=0.338) |
| | 중졸 | 69.0 | 17.3 | 0.9 | 12.8 | 100(74) | |
| | 고졸 | 60.2 | 26.3 | 1.5 | 12.0 | 100(249) | |
| | 대졸이상 | 57.8 | 30.9 | 0.7 | 10.6 | 100(353) | |
| 대손 | 손자녀 | 67.8 | 26.6 | 0.9 | 4.7 | 100(315) | $\chi^2=82.124^{***}$ (p=0.000) |
| | 증손자녀 | 50.2 | 35.3 | 1.2 | 13.3 | 100(470) | |
| | 고손자녀 | 75.4 | 8.1 | 0.0 | 16.5 | 100(215) | |
| 경제 수준 | 매우어렵다 | 68.2 | 16.9 | 2.5 | 12.4 | 100(109) | $\chi^2=17.442^*$ (p=0.042) |
| | 어려운편이다 | 63.8 | 25.6 | 1.1 | 9.6 | 100(311) | |
| | 보통 | 57.7 | 29.9 | 0.5 | 11.9 | 100(527) | |
| | 여유있는 편 | 65.7 | 21.4 | 0.0 | 12.9 | 100(53) | |

*p≤0.05, **≤0.01, ***≤0.001

한편 자부심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69.7%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란 사실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 수록 이와 같은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10대의 경우에는 기념행사 및 주변사람들의 조경심 등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3> 후손의 자부심 사례

(단위: %, 명)

| 구분 | | 기념행사개최·초청 | 주변 사람들의 존경심 | 정부의 특별 지원 | 독립기념관등 시설견학시 | 후손 자체에 대한 긍지 | 계(N) |
|----|--------|-----------|-------------|-----------|--------------|--------------|------------|
| 계 | | 8.8 | 7.7 | 8.0 | 5.8 | 69.7 | 100.0(878) |
| 성별 | 남자 | 9.2 | 6.5 | 7.1 | 5.4 | 71.8 | 100.0(479) |
| | 여자 | 8.3 | 9.3 | 9.0 | 6.3 | 67.2 | 100.0(399) |
| 연령 | 1-9세 | 7.7 | 1.4 | 9.8 | 10.5 | 70.6 | 100.0(143) |
| | 10-19세 | 16.6 | 11.2 | 5.9 | 5.3 | 61.0 | 100.0(187) |
| | 20-29세 | 7.4 | 12.3 | 7.4 | 6.2 | 66.7 | 100.0(162) |
| | 30-39세 | 7.0 | 9.1 | 8.4 | 4.9 | 70.6 | 100.0(143) |
| | 40-49세 | 5.5 | 2.7 | 10.0 | 3.6 | 78.2 | 100.0(110) |
| | 50-59세 | 6.2 | 9.9 | 8.6 | 4.9 | 70.4 | 100.0(81) |
| | 60세 이상 | 3.6 | 3.6 | 7.1 | 3.6 | 82.1 | 100.0(56) |
| 대손 | 손자녀 | 5.0 | 9.1 | 9.1 | 3.7 | 73.2 | 100.0(298) |
| | 중손자녀 | 7.4 | 6.2 | 7.9 | 6.5 | 72.0 | 100.0(403) |
| | 고손자녀 | 18.3 | 8.9 | 6.7 | 7.8 | 58.3 | 100.0(180) |

*p≤0.05, **≤0.01, ***≤0.001

2) 독립유공자가 예우지원 수준

독립유공자 후손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6.4%, ‘아니다’ 12.3%, ‘모르겠다’가 11.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73.6%로 여자 79.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특징을 보면 1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 그룹을 보면, 학력별로는 중졸 83.1%, 대손별로는 손자녀의 경우 79.5%, 경제수준별로는 ‘매우 어렵다’의 경우 90.7%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룹은 연령별로는 1-9세, 학력은 대졸이상, 대손은 중손자녀, 경제수준은 보통이상인 그룹으로 나타나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III-14> 독립유공자 지원의 당위성

(단위: %, 명)

| 구분 | |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 계(N) | 비고 |
|----------|--------|------|------|------|-----------|------------------------------------|
| 계 | | 76.4 | 12.3 | 11.3 | 100(1000) | |
| 성별 | 남자 | 73.6 | 12.2 | 14.2 | 100(558) | $\chi^2=0.540^{**}$ (p=0.005) |
| | 여자 | 79.9 | 12.4 | 7.7 | 100(442) | |
| 연령 | 1~9세 | 69.3 | 16.1 | 14.7 | 100(167) | $\chi^2=14.994$ (p=0.242) |
| | 10~19세 | 81.7 | 8.1 | 10.2 | 100(208) | |
| | 20~29세 | 75.6 | 14.4 | 10.0 | 100(185) | |
| | 30~39세 | 73.4 | 14.1 | 12.5 | 100(168) | |
| | 40~49세 | 78.7 | 12.7 | 8.5 | 100(130) | |
| | 50~59세 | 75.0 | 10.2 | 14.9 | 100(83) | |
| | 60세 이상 | 85.6 | 6.7 | 7.8 | 100(59) | |
| 학력 | 초졸이하 | 76.7 | 11.3 | 12.1 | 100(324) | $\chi^2=14.384^*$ (p=0.026) |
| | 중졸 | 83.1 | 8.7 | 8.2 | 100(74) | |
| | 고졸 | 73.2 | 10.6 | 16.2 | 100(249) | |
| | 대졸이상 | 77.0 | 15.2 | 7.9 | 100(353) | |
| 대손 | 손자녀 | 79.5 | 11.0 | 9.4 | 100(315) | $\chi^2=6.426$ (p=0.170) |
| | 증손자녀 | 75.3 | 13.9 | 10.8 | 100(470) | |
| | 고손자녀 | 74.2 | 10.6 | 15.2 | 100(215) | |
| 경제 수준 | 매우어렵다 | 91.6 | 5.6 | 2.9 | 100(109) | $\chi^2=31.181^{***}$ (p=0.000) |
| | 어려운편이다 | 77.6 | 9.5 | 12.9 | 100(311) | |
| | 보통 | 74.1 | 15.1 | 10.7 | 100(527) | |
| | 여유있는 편 | 60.5 | 14.2 | 25.3 | 100(53) | |

*p≤0.05, **≤0.01, ***≤0.001

3)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가 37.2%, ‘증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가 26.4%, ‘현재가 적당하다’가 20.0%, ‘국가유공자와 동일해야 한다’가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고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증손자녀’ 32.4%, 현재와 같은 ‘손자녀’ 27.6%로 ‘고손자녀’ 23.5%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국가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후손)

(단위 %, 명)

| 구분 | | 현재가 적당 | 증손자녀까 지 확대 | 고손자녀까 지 확대 | 국자유공자 와 동일 | 모름/ 무응답 | 계(N) | 비고 |
|----------------|---------|-----------|---------------|---------------|---------------|------------|-----------|-------------------------------------|
| 계 | | 20.0 | 26.4 | 37.2 | 15.0 | 1.5 | 100(1000) | |
| 성별 | 남자 | 20.0 | 26.9 | 36.0 | 15.9 | 1.2 | 100(558) | $\chi^2=1.734$ (p=0.784) |
| | 여자 | 20.1 | 25.7 | 38.6 | 13.8 | 1.8 | 100(442) | |
| 연령 | 1~9세 | 13.4 | 14.3 | 44.5 | 26.0 | 1.9 | 100(167) | $\chi^2=60.840^{***}$ (p=0.000) |
| | 10~19세 | 19.1 | 25.9 | 43.5 | 11.5 | 0.0 | 100(208) | |
| | 20~29세 | 20.4 | 33.7 | 29.5 | 14.5 | 1.9 | 100(185) | |
| | 30~39세 | 19.7 | 29.1 | 34.4 | 14.8 | 2.0 | 100(168) | |
| | 40~49세 | 23.3 | 23.4 | 41.6 | 8.5 | 3.1 | 100(130) | |
| | 50~59세 | 27.6 | 32.4 | 23.5 | 15.7 | 0.8 | 100(83) | |
| | 60세 이상 | 24.2 | 29.3 | 35.6 | 10.9 | 0.0 | 100(59) | |
| 학력 | 초졸 이하 | 16.4 | 19.2 | 45.7 | 17.8 | 1.0 | 100(324) | $\chi^2=33.690^{***}$ (p=0.001) |
| | 중졸 | 19.1 | 24.7 | 40.8 | 15.4 | 0.0 | 100(74) | |
| | 고졸 | 20.2 | 31.6 | 33.4 | 13.6 | 1.2 | 100(249) | |
| | 대졸이상 | 23.5 | 29.7 | 31.2 | 13.2 | 2.5 | 100(353) | |
| 대손 | 손자녀 | 27.4 | 28.3 | 31.2 | 11.8 | 1.3 | 100(315) | $\chi^2=113.296^{***}$ (p=0.000) |
| | 증손자녀 | 16.3 | 36.0 | 33.2 | 13.2 | 1.3 | 100(470) | |
| | 고손자녀 | 17.4 | 2.5 | 54.5 | 23.4 | 2.2 | 100(215) | |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23.1 | 24.5 | 35.4 | 15.2 | 1.8 | 100(435) | $\chi^2=22.542^*$ (p=0.032) |
| | 고용주/자영업 | 16.1 | 27.6 | 37.8 | 14.7 | 3.8 | 100(127) | |
| | 실업자 | 25.8 | 38.5 | 21.0 | 14.8 | 0.0 | 100(48) | |
| | 비경제활동인구 | 17.2 | 26.6 | 40.9 | 14.8 | 0.5 | 100(390) | |
| 경제 수준 | 매우 어렵다 | 15.7 | 31.0 | 46.2 | 7.2 | 0.0 | 100(109) | $\chi^2=19.411$ (p=0.079) |
| | 어려운편이다 | 18.6 | 25.5 | 40.5 | 13.9 | 1.5 | 100(311) | |
| | 보 통 | 20.9 | 26.2 | 34.1 | 17.3 | 1.6 | 100(527) | |
| | 여유있는 편 | 28.5 | 24.4 | 29.7 | 14.1 | 3.3 | 100(53) | |

*p≤0.05, **≤0.01, ***≤0.001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고손자녀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손별로는 손자녀의 경우 ‘고손자녀까지’ 31.2%, 증손자녀인 경우 ‘증손자녀까지’ 36.0%, 고손자녀인 경우 ‘고손자녀까지’가 54.5%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실업자의 경우에만 ‘증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 3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고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수준별로는 매우 어려운 경우 ‘고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유있는 경우 29.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에는 매우 어려운 경우 15.7%로 상대적으로

로 낮았으며, 여유있는 경우 2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유형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 영역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948명의 응답자 중 ‘교육지원’ 59.6%, ‘주택지원’ 19.1%, ‘의료지원’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으나 40대이하 젊은 층은 ‘교육지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50대 이상 고령층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거지원은 20, 30대 청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초졸 이하인 경우 ‘교육지원’이 74.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인 경우 ‘주택지원’이 2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6> 국가 지원 선호유형

| | | (단위: %, 명) | | | | | |
|----------------|---------|------------|------|------|------|-----------|-------------------------------------|
| 구분 | | 교육지원 | 의료지원 | 주택지원 | 기타 | 계(N) | 비고 |
| 계 | | 59.6 | 16.1 | 19.1 | 5.2 | 100(1000) | |
| 성별 | 남자 | 60.1 | 15.3 | 18.6 | 6.1 | 100(558) | $\chi^2=2.731$ (p=0.435) |
| | 여자 | 59.1 | 17.1 | 19.8 | 4.1 | 100(442) | |
| 연령 | 1~9세 | 75.7 | 7.8 | 15.1 | 1.4 | 100(167) | $\chi^2=141.076^{***}$ (p=0.000) |
| | 10~19세 | 75.5 | 6.1 | 12.7 | 5.7 | 100(208) | |
| | 20~29세 | 46.0 | 17.8 | 29.4 | 6.7 | 100(185) | |
| | 30~39세 | 58.7 | 14.8 | 22.7 | 3.8 | 100(168) | |
| | 40~49세 | 61.9 | 16.6 | 15.8 | 5.7 | 100(130) | |
| | 50~59세 | 36.7 | 37.0 | 22.2 | 4.2 | 100(83) | |
| | 60세 이상 | 30.9 | 42.9 | 13.3 | 12.9 | 100(59) | |
| 학력 | 초졸이하 | 74.1 | 8.7 | 14.9 | 2.3 | 100(324) | $\chi^2=55.873^{***}$ (p=0.000) |
| | 중졸 | 56.1 | 23.0 | 14.3 | 6.6 | 100(74) | |
| | 고졸 | 54.6 | 20.4 | 16.8 | 8.2 | 100(249) | |
| | 대졸이상 | 50.6 | 18.5 | 25.6 | 5.4 | 100(353) | |
| 대손 | 손자녀 | 45.8 | 25.1 | 22.1 | 7.0 | 100(315) | $\chi^2=49.879^{***}$ (p=0.000) |
| | 증손자녀 | 62.9 | 13.8 | 19.1 | 4.2 | 100(470) | |
| | 고손자녀 | 72.7 | 8.1 | 14.7 | 4.5 | 100(215) | |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60.9 | 12.2 | 23.4 | 3.5 | 100(435) | $\chi^2=32.562^{***}$ (p=0.000) |
| | 고용주/자영업 | 59.0 | 17.9 | 16.3 | 6.7 | 100(127) | |
| | 실업자 | 44.4 | 20.0 | 33.3 | 2.3 | 100(48) | |
| | 비경제활동인구 | 60.3 | 19.4 | 13.5 | 6.8 | 100(390) | |
| 경제 수준 | 매우어렵다 | 47.6 | 17.9 | 29.2 | 5.3 | 100(109) | $\chi^2=37.388^{***}$ (p=0.000) |
| | 어려운편이다 | 59.3 | 12.6 | 24.0 | 4.0 | 100(311) | |
| | 보 통 | 62.7 | 16.0 | 15.0 | 6.2 | 100(527) | |
| | 여유있는 편 | 55.1 | 33.4 | 10.1 | 1.3 | 100(53) | |

*p≤0.05, **≤0.01, ***≤0.001

대손별 응답을 보면 손자녀인 경우 ‘교육지원’이 45.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 의료지원 25.1%, 주택지원 22.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고손자녀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이 72.7%로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실업자는 ‘교육지원’ 44.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주택지원’은 3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의료지원’이 1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그룹들의 경우, ‘교육지원’ 47.6%, ‘주택지원’ 29.2%, ‘의료지원’ 17.9% 순이었으나, 여유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교육지원’ 55.1%, ‘의료지원’ 33.4%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교육지원’ 62.7%로 가장 높았다.

5) 제수비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 제수비 지원확대에 대한 의견에서는 ‘고손자녀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현재가 적당하다’ 28.4%, ‘증손자녀까지 지원해야 한다’ 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녀모두 ‘고손자녀까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남자는 ‘증손자녀까지’ 29.2%, 여자는 현재처럼 ‘손자녀까지’ 3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손자녀까지’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50대는 ‘증손자녀까지’가 40.0%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고손자녀까지’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고손자녀’ 34.9%, ‘증손자녀’ 33.7%, ‘손자녀’ 30.2% 등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대손별로도 또한 ‘고손자녀’까지 제수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자신이 속한 그룹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경제수준별로는 보통이하인 경우에는 ‘고손자녀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후손들은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47.0%로 가장 높았다.

<표 III-17> 제수비 지원 확대(후손)

(단위: %, 명)

| 구분 | | 손자녀까지 | 증손자녀까지 | 고손자녀까지 | 모름/ 무응답 | 계(N) | 비고 |
|----------|---------|-------|--------|--------|------------|-----------|------------------------------------|
| 계 | | 28.4 | 27.7 | 43.3 | 0.7 | 100(1000) | |
| 성별 | 남자 | 27.0 | 29.2 | 43.1 | 0.7 | 100(558) | $\chi^2=1.953$ (p=0.582) |
| | 여자 | 30.2 | 25.8 | 43.5 | 0.6 | 100(442) | |
| 연령 | 1~9세 | 33.6 | 18.1 | 48.3 | 0.0 | 100(167) | $\chi^2=30.428^*$ (p=0.033) |
| | 10~19세 | 25.3 | 25.9 | 48.1 | 0.7 | 100(208) | |
| | 20~29세 | 26.7 | 29.9 | 42.5 | 0.9 | 100(185) | |
| | 30~39세 | 27.8 | 35.1 | 37.2 | 0.0 | 100(168) | |
| | 40~49세 | 30.4 | 21.5 | 46.5 | 1.5 | 100(130) | |
| | 50~59세 | 24.5 | 40.0 | 34.7 | 0.8 | 100(83) | |
| | 60세 이상 | 32.4 | 29.3 | 36.7 | 1.6 | 100(59) | |
| 학력 | 초졸이하 | 29.0 | 19.3 | 51.4 | 0.3 | 100(324) | $\chi^2=30.702^{***}$ (p=0.000) |
| | 중졸 | 23.3 | 31.9 | 43.0 | 1.9 | 100(74) | |
| | 고졸 | 26.5 | 28.9 | 44.6 | 0.0 | 100(249) | |
| | 대졸이상 | 30.2 | 33.7 | 34.9 | 1.3 | 100(353) | |
| 대손 | 손자녀 | 30.7 | 29.6 | 38.8 | 0.9 | 100(315) | $\chi^2=70.016^{***}$ (p=0.000) |
| | 증손자녀 | 25.9 | 35.7 | 37.6 | 0.8 | 100(470) | |
| | 고손자녀 | 30.4 | 7.4 | 62.2 | 0.0 | 100(215) | |
| 경제 수준 | 매우어렵다 | 20.4 | 31.1 | 47.7 | 0.8 | 100(109) | $\chi^2=31.004^{***}$ (p=0.000) |
| | 어려운 편이다 | 23.6 | 26.9 | 49.4 | 0.0 | 100(311) | |
| | 보통 | 31.0 | 28.3 | 40.0 | 0.8 | 100(527) | |
| | 여유있는 편 | 47.0 | 18.7 | 31.0 | 3.3 | 100(53) | |

*p≤0.05, **≤0.01, ***≤0.001

라. 친일환수재산 활용

1)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인식

정부가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협력하고, 우리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가 85.9%, ‘생각해 본 적 없다’가 8.2%, ‘그저 그렇다’ 4.7%, ‘잘못된 일이다’ 1.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자는 88.2%, 여자는 83.0%로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1~9세가 89.3%로 상대적으로 높았은 반면,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40대가 2.8%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중졸이 7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18>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후손)

(단위: %, 명)

| 구분 | | 매우 잘된 일 | 그저 그렇다 | 잘못된 일 | 생각해본 적 없음 | 계(N) | 비고 |
|----|--------|------------|--------|-------|--------------|-----------|--------------------------------|
| 계 | | 85.9 | 4.7 | 1.1 | 8.2 | 100(1000) | |
| 성별 | 남자 | 88.2 | 3.8 | 0.9 | 7.1 | 100(558) | $\chi^2=6.031$ (p=0.110) |
| | 여자 | 83.0 | 5.9 | 1.5 | 9.6 | 100(442) | |
| 연령 | 1~9세 | 89.3 | 5.9 | 0.5 | 4.3 | 100(167) | $\chi^2=20.536$ (p=0.303) |
| | 10~19세 | 86.5 | 5.1 | 1.0 | 7.3 | 100(208) | |
| | 20~29세 | 82.8 | 7.1 | 0.9 | 9.2 | 100(185) | |
| | 30~39세 | 86.5 | 1.7 | 0.5 | 11.3 | 100(168) | |
| | 40~49세 | 86.4 | 2.9 | 2.8 | 7.9 | 100(130) | |
| | 50~59세 | 81.4 | 6.2 | 2.6 | 9.7 | 100(83) | |
| | 60세 이상 | 87.5 | 3.1 | 0.0 | 9.3 | 100(59) | |
| 학력 | 초졸이하 | 88.8 | 5.2 | 0.3 | 5.7 | 100(324) | $\chi^2=20.620^*$ (p=0.014) |
| | 중졸 | 77.5 | 7.1 | 3.9 | 11.5 | 100(74) | |
| | 고졸 | 82.3 | 3.7 | 1.6 | 12.3 | 100(249) | |
| | 대졸이상 | 87.5 | 4.5 | 1.0 | 7.0 | 100(353) | |

*p≤0.05, **≤0.01, ***≤0.001

2) 독립정신 계승 중점사업

친일환수재산이 독립정신을 기리는데 사용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수행할 사업으로는 전체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사업’이 37.0%,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연구’가 27.1%, ‘독립정신을 후세에 기억시킬 수 있는 상징시설 건립’이 18.0%, ‘국민 참여 기념사업’이 17.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사업’이 가장 많았으나, 60세 이상은 ‘교육, 연구’ 사업이 32.0%로 가장 높았다. 한편 30대는 ‘상징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선호가 25.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사업’에 대해 실업자가 44.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사업’에 대해 매우 어려운 경우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 참여 기념사업’에 대해 여유있는 경우 3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국민 참여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9> 독립정신 계승 중점 사업(후손)

(단위: %, 명)

| 구분 | | 개별 지원사업 | 국민참여 기념사업 | 상징시설 건립 | 교육·연구 | 모름/ 무응답 | 계(N) | 비고 |
|--------|---------|------------|--------------|------------|-------|------------|-----------|------------------------------------|
| 계 | | 37.0 | 17.3 | 18.0 | 27.1 | 0.7 | 100(1000) | |
| 성별 | 남자 | 35.9 | 17.9 | 19.2 | 26.3 | 0.7 | 100(558) | $\chi^2=1.819$ (p=0.969) |
| | 여자 | 38.2 | 16.7 | 16.4 | 28.1 | 0.6 | 100(442) | |
| 연령 | 1~9세 | 39.2 | 19.8 | 12.3 | 28.1 | 0.5 | 100(167) | $\chi^2=34.903$ (p=0.070) |
| | 10~19세 | 38.2 | 15.4 | 21.5 | 24.5 | 0.4 | 100(208) | |
| | 20~29세 | 39.5 | 20.1 | 13.7 | 26.7 | 0.0 | 100(185) | |
| | 30~39세 | 28.7 | 20.2 | 25.1 | 26.0 | 0.0 | 100(168) | |
| | 40~49세 | 41.0 | 11.3 | 17.5 | 27.9 | 2.3 | 100(130) | |
| | 50~59세 | 41.5 | 13.0 | 14.4 | 30.0 | 1.0 | 100(83) | |
| | 60세 이상 | 26.2 | 19.5 | 20.7 | 32.0 | 1.6 | 100(59) | |
| 학력 | 초졸이하 | 39.6 | 19.1 | 14.4 | 26.6 | 0.3 | 100(324) | $\chi^2=26.937^{**}$ (p=0.008) |
| | 중졸 | 37.1 | 8.7 | 22.2 | 29.6 | 2.3 | 100(74) | |
| | 고졸 | 42.3 | 18.2 | 18.5 | 20.2 | 0.8 | 100(249) | |
| | 대졸이상 | 30.7 | 16.9 | 20.0 | 31.9 | 0.5 | 100(353) | |
| 대손 | 손자녀 | 36.0 | 15.8 | 18.5 | 28.0 | 1.8 | 100(315) | $\chi^2=18.074^*$ (p=0.021) |
| | 증손자녀 | 35.3 | 16.9 | 19.9 | 27.8 | 0.2 | 100(470) | |
| | 고손자녀 | 42.1 | 20.4 | 13.2 | 24.3 | 0.0 | 100(215) | |
| 경제활동상태 | 임금근로자 | 31.5 | 17.8 | 20.9 | 29.4 | 0.4 | 100(435) | $\chi^2=20.480$ (p=0.059) |
| | 고용주/자영업 | 32.7 | 18.6 | 19.1 | 29.6 | 0.0 | 100(127) | |
| | 실업자 | 44.2 | 13.7 | 16.3 | 23.9 | 1.9 | 100(48) | |
| | 비경제활동인구 | 43.5 | 16.8 | 14.6 | 24.1 | 1.0 | 100(390) | |
| 경제수준 | 매우어렵다 | 57.7 | 10.4 | 11.1 | 19.2 | 1.7 | 100(109) | $\chi^2=37.166^{***}$ (p=0.000) |
| | 어려운편이다 | 36.0 | 17.3 | 20.0 | 26.1 | 0.6 | 100(311) | |
| | 보통 | 34.7 | 17.3 | 18.7 | 28.8 | 0.5 | 100(527) | |
| | 여유있는 편 | 23.2 | 32.3 | 13.0 | 31.4 | 0.0 | 100(53) | |

*p≤0.05, **≤0.01, ***≤0.001

3) 친일환수재산을 활용한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 지원을 실시할 경우, 적당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경제상황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 비 인상’이 40.4%, ‘4~5대 후손 장학금 지원’이 37.5%, ‘제수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가 13.3%, ‘해의 거주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이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자는 ‘제수비 증손자녀 확대’ 15.9%, 여자는 ‘4~5대 후손 장학금 지원’ 42.8%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4~5대 후손 장학금 지원’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가계비 지원 인상’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

를 이루고있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4~5대 후손 장학금 지원’에 대한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비 지원 인상’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대손별로는 3대손인 손자녀의 경우에는 ‘가계비 지원 인상’을, 증손이나 고손의 경우에는 ‘4~5대 후손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한편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 인상’, 고용주/자영업 및 실업자는 ‘4~5대 후손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표 III-20> 독립유공자 개별지원(후손)

(단위: %, 명)

| 구분 | | 제수비 증손자녀 확대 | 독립유공자 가계지원비 인상 | 4~5대 후손 장학금 |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 | 기타 | 계(N) | 비고 |
|----------------|---------|-------------------|----------------------|-------------------|-------------------|-----|-----------|------------------------------------|
| 계 | | 13.3 | 40.4 | 37.5 | 7.6 | 1.2 | 100(1000) | - |
| 성별 | 남자 | 15.9 | 41.0 | 33.3 | 8.6 | 1.2 | 100(558) | $\chi^2=14.045^*$ (p=0.029) |
| | 여자 | 10.1 | 39.6 | 42.8 | 6.3 | 1.2 | 100(442) | |
| 연령 | 1~9세 | 13.5 | 41.6 | 32.7 | 12.1 | 0.0 | 100(167) | $\chi^2=88.043^{***}$ (p=0.000) |
| | 10~19세 | 9.8 | 23.8 | 59.2 | 5.8 | 1.4 | 100(208) | |
| | 20~29세 | 13.0 | 43.8 | 35.2 | 7.1 | 0.9 | 100(185) | |
| | 30~39세 | 16.3 | 46.8 | 31.8 | 2.3 | 2.8 | 100(168) | |
| | 40~49세 | 14.1 | 44.4 | 29.6 | 11.3 | 0.6 | 100(130) | |
| | 50~59세 | 15.1 | 41.5 | 31.4 | 9.9 | 2.1 | 100(83) | |
| | 60세 이상 | 13.7 | 56.2 | 23.8 | 6.2 | 0.0 | 100(59) | |
| 학력 | 초졸이하 | 12.0 | 37.3 | 42.5 | 7.8 | 0.4 | 100(324) | $\chi^2=31.201^*$ (p=0.027) |
| | 중졸 | 6.5 | 32.0 | 51.4 | 6.9 | 3.3 | 100(74) | |
| | 고졸 | 14.0 | 42.1 | 36.2 | 7.7 | 0.0 | 100(249) | |
| | 대졸이상 | 15.5 | 43.8 | 30.9 | 7.5 | 2.3 | 100(353) | |
| 대손 | 손자녀 | 11.2 | 47.6 | 31.4 | 8.0 | 1.8 | 100(315) | $\chi^2=43.332^{***}$ (p=0.000) |
| | 증손자녀 | 17.8 | 35.9 | 36.8 | 8.2 | 1.4 | 100(470) | |
| | 고손자녀 | 6.8 | 39.6 | 47.8 | 5.8 | 0.0 | 100(215) | |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16.4 | 39.3 | 37.4 | 5.7 | 1.0 | 100(435) | $\chi^2=32.417^*$ (p=0.020) |
| | 고용주/자영업 | 11.1 | 29.0 | 48.9 | 10.4 | 0.6 | 100(127) | |
| | 실업자 | 19.9 | 35.3 | 37.2 | 5.7 | 1.8 | 100(48) | |
| | 비경제활동인구 | 9.8 | 45.9 | 33.9 | 9.0 | 1.5 | 100(390) | |

*p≤0.05, **≤0.01, ***≤0.001

4) 국민 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당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젊은 세대에게 독립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상시 캠페인 시행’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위대한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다양화’ 22.0%, ‘많은 국민에게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추진’ 20.8%,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같은 상징시설물 건립’이 13.8%, ‘국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기념식 확대·다양화’가 12.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보면 ‘젊은 세대를 위한 캠페인 시행’에 대해 여자(32.0%)가 남자(28.4%)보다 6.4%p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기념식 확대’에 대해서는 남자(14.4%)가 여자(11.1%)보다 3.3%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세대에게 상시 캠페인 시행’에 대해 50대 35.4%, 60대 33.0%로 높게 나타났으며, 20~30대 젊은 층은 ‘기념사업 확대·다양화, 사업에 상대적으로 강한 선호를 보이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정부의 기념식 규모확대’를, 학력이 높은 경우, ‘독립유공 사적지 탐방’, ‘상징시설물 건립’ 등의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대손별로는 3대와 4대손의 경우, 직접적인 독립유공자 관련 사업인 ‘정신함양 캠페인’, ‘사적지 탐방’, ‘상징시설물 건립’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인 반면, 고손자녀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사업인 ‘기념식 확대·다양화’, ‘기념사업 확대’에 보다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인 후손들은 ‘젊은 세대를 위한 독립정신 함양 캠페인’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보통 이상의 경우에는 ‘독립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를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표 III-21> 일반국민 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후손)

(단위: %, 명)

| 구분 | | 정부 기념식 확대 | 기념사업 확대 | 독립정신 함양 캠페인 |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행사 | 상징시설 물 건립 | 모름/ 무응답 | 계(N) | 비고 |
|----------|--------|-----------------|------------|-------------------|---------------------|--------------|------------|------------|------------------------------------|
| 계 | | 12.9 | 22.0 | 30.0 | 20.8 | 13.8 | 0.2 | 100(2,000) | |
| 성별 | 남자 | 14.4 | 21.5 | 28.4 | 20.5 | 15.0 | 0.1 | 100(1,115) | $\chi^2=13.185^*$ (p=0.040) |
| | 여자 | 11.1 | 22.7 | 32.0 | 21.3 | 12.3 | 0.3 | 100(885) | |
| 연령 | 1~9세 | 16.1 | 22.1 | 32.3 | 16.2 | 13.4 | 0.0 | 100(334) | $\chi^2=74.818^{***}$ (p=0.000) |
| | 10~19세 | 14.2 | 21.4 | 28.5 | 21.9 | 13.0 | 0.5 | 100(416) | |
| | 20~29세 | 13.8 | 25.5 | 28.1 | 19.6 | 12.6 | 0.2 | 100(370) | |
| | 30~39세 | 10.4 | 25.0 | 28.1 | 21.2 | 14.8 | 0.3 | 100(336) | |
| | 40~49세 | 10.5 | 19.4 | 29.7 | 24.6 | 15.9 | 0.0 | 100(260) | |
| | 50~59세 | 12.2 | 19.4 | 35.4 | 19.8 | 13.2 | 0.0 | 100(166) | |
| | 60세 이상 | 10.3 | 14.4 | 33.0 | 26.6 | 15.7 | 0.0 | 100(118) | |
| 학력 | 초졸이하 | 15.3 | 20.8 | 30.7 | 19.7 | 13.3 | 0.1 | 100(649) | $\chi^2=49.064^{***}$ (p=0.000) |
| | 중졸 | 18.5 | 24.5 | 28.7 | 19.1 | 7.1 | 1.1 | 100(148) | |
| | 고졸 | 11.4 | 21.5 | 29.6 | 21.3 | 15.5 | 0.4 | 100(498) | |
| | 대졸이상 | 10.7 | 23.0 | 29.8 | 21.9 | 14.5 | 0.0 | 100(705) | |
| 대손 | 손자녀 | 10.4 | 20.3 | 31.0 | 22.5 | 15.5 | 0.1 | 100(630) | $\chi^2=98.552^{***}$ (p=0.000) |
| | 증손자녀 | 11.5 | 20.1 | 30.3 | 22.8 | 14.7 | 0.3 | 100(940) | |
| | 고손자녀 | 19.8 | 28.8 | 27.8 | 14.0 | 9.5 | 0.0 | 100(430) | |
| 경제 수준 | 매우어렵다 | 16.4 | 21.7 | 28.5 | 19.5 | 11.8 | 1.0 | 100(109) | $\chi^2=29.501^*$ (p=0.014) |
| | 어려운편이다 | 12.2 | 17.9 | 34.0 | 21.4 | 14.2 | 0.1 | 100(311) | |
| | 보 통 | 12.7 | 24.0 | 28.2 | 20.8 | 14.0 | 0.1 | 100(527) | |
| | 여유있는 편 | 12.6 | 26.7 | 26.8 | 20.0 | 13.9 | 0.0 | 100(53) | |

*p≤0.05, **≤0.01, ***≤0.001

5) 독립정신 계승 발전 중점 교육·연구사업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중점 교육·연구 사업으로는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책, 영상물 등)’이 40.2%,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교육 실시’가 31.0%,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실시’가 15.0%, ‘학술회의, 문헌발간 사업 강화’가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자는 ‘독립운동정신 교육’에, 여자는 ‘발굴 자료조사’에 상대적 선호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는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교육 실시’에 대한 선호가 각각 35.7%, 4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의 연령층은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사업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였다. 한편 학술회의, 문헌발간 등의 사업은 저연령층 후손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한편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후손

들은 ‘발굴 자료조사’와 ‘독립운동정신 교육’등의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여유가 있는 후손들은 ‘학술회의·문헌발간’ 및 ‘학습자료 개발’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표 III-22> 독립정신 계승 교육 연구사업(후손)

(단위: 명, %)

| 구분 | | 학술회의, 문헌발간 사업 강화 | 독립유공자 발굴 위한 자료조사 | 청소년 독립정신계승 학습자료개발 |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 정신교육 | 모름/무응답 | 계(N) | 비고 |
|------|--------|------------------|------------------|-------------------|-------------------|--------|-----------|------------------------------------|
| 계 | | 12.5 | 15.0 | 40.2 | 31.0 | 1.3 | 100(1000) | |
| 성별 | 남자 | 12.4 | 16.1 | 39.7 | 29.7 | 2.2 | 100(558) | $\chi^2=8.673$ (p=0.070) |
| | 여자 | 12.7 | 13.7 | 40.8 | 32.6 | 0.2 | 100(442) | |
| 연령 | 1~9세 | 14.2 | 12.8 | 51.6 | 17.6 | 3.7 | 100(167) | $\chi^2=61.623^{***}$ (p=0.000) |
| | 10~19세 | 13.8 | 20.5 | 33.1 | 31.2 | 1.4 | 100(208) | |
| | 20~29세 | 15.5 | 14.7 | 32.1 | 35.7 | 2.0 | 100(185) | |
| | 30~39세 | 11.1 | 15.5 | 43.9 | 29.5 | 0.0 | 100(168) | |
| | 40~49세 | 12.5 | 11.2 | 35.8 | 40.6 | 0.0 | 100(130) | |
| | 50~59세 | 4.2 | 11.0 | 54.0 | 30.9 | 0.0 | 100(83) | |
| | 60세 이상 | 9.8 | 16.4 | 37.1 | 36.7 | 0.0 | 100(59) | |
| 학력 | 초졸이하 | 12.9 | 17.7 | 42.3 | 24.7 | 2.4 | 100(324) | $\chi^2=22.321^*$ (p=0.034) |
| | 중졸 | 13.9 | 15.8 | 35.8 | 32.3 | 2.1 | 100(74) | |
| | 고졸 | 15.3 | 12.9 | 36.5 | 33.9 | 1.5 | 100(249) | |
| | 대졸이상 | 9.9 | 14.0 | 41.7 | 34.4 | 0.0 | 100(353) | |
| 대손 | 손자녀 | 8.4 | 14.7 | 39.0 | 37.7 | 0.3 | 100(315) | $\chi^2=49.060^{***}$ (p=0.000) |
| | 증손자녀 | 11.9 | 16.0 | 39.2 | 32.2 | 0.6 | 100(470) | |
| | 고손자녀 | 19.9 | 13.5 | 44.0 | 18.5 | 4.2 | 100(215) | |
| 경제수준 | 매우어렵다 | 3.2 | 17.0 | 42.7 | 35.7 | 1.4 | 100(109) | $\chi^2=28.714^{**}$ (p=0.004) |
| | 어려운편이다 | 9.8 | 17.4 | 37.9 | 32.4 | 2.5 | 100(311) | |
| | 보통 | 15.2 | 13.8 | 40.1 | 30.2 | 0.7 | 100(527) | |
| | 여유있는 편 | 21.2 | 10.0 | 48.2 | 20.7 | 0.0 | 100(53) | |

*p≤0.05, **≤0.01, ***≤0.001

제2절 국민의식 조사

1. 조사 개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친일귀속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식조사」를 위해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통계청의 「2009년 인구추계」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연령별 비례할당방법에 의해 추출된 전국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대상자에서 대해서 숙련된 전화조사원이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사 완료된 1,000명의 지역별 분포는 <표 III-23>과 같고, 본 조사는 전체 모집단으로부터 1,000명이 조사 완료됨에 따라 추정값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로 추정된다.

<표 III-23> 조사대상 가구의 인구구성

(단위: 명)

| 구분 | 남자 | | | | | | 여자 | | | | | |
|----|-------|-------|-------|-------|------|-----|-------|-------|-------|-------|------|-----|
| | 20-29 | 30-39 | 40-49 | 50-59 | 60이상 | 계 | 20-29 | 30-39 | 40-49 | 50-59 | 60이상 | 계 |
| 서울 | 24 | 25 | 22 | 18 | 16 | 105 | 24 | 24 | 23 | 18 | 19 | 108 |
| 부산 | 8 | 8 | 8 | 7 | 6 | 37 | 8 | 7 | 8 | 7 | 8 | 38 |
| 대구 | 6 | 6 | 6 | 4 | 4 | 26 | 4 | 5 | 6 | 4 | 5 | 24 |
| 인천 | 6 | 6 | 8 | 4 | 2 | 26 | 5 | 7 | 6 | 4 | 6 | 28 |
| 광주 | 3 | 3 | 3 | 2 | 2 | 13 | 3 | 3 | 3 | 2 | 3 | 14 |
| 대전 | 3 | 3 | 3 | 3 | 1 | 13 | 3 | 3 | 4 | 2 | 3 | 15 |
| 울산 | 2 | 2 | 4 | 2 | 1 | 11 | 2 | 3 | 2 | 2 | 2 | 11 |
| 경기 | 23 | 29 | 28 | 16 | 15 | 111 | 22 | 27 | 27 | 16 | 19 | 111 |
| 강원 | 3 | 3 | 3 | 3 | 3 | 15 | 3 | 3 | 4 | 2 | 4 | 16 |
| 충북 | 3 | 3 | 4 | 2 | 4 | 16 | 3 | 3 | 3 | 3 | 3 | 15 |
| 충남 | 4 | 4 | 6 | 3 | 4 | 21 | 4 | 4 | 4 | 3 | 5 | 20 |
| 전북 | 5 | 4 | 1 | 3 | 4 | 17 | 3 | 3 | 4 | 3 | 6 | 19 |
| 전남 | 3 | 4 | 4 | 3 | 5 | 19 | 3 | 3 | 4 | 3 | 7 | 20 |
| 경북 | 5 | 5 | 6 | 5 | 6 | 27 | 4 | 5 | 6 | 5 | 8 | 28 |
| 경남 | 7 | 7 | 8 | 5 | 5 | 32 | 6 | 7 | 7 | 5 | 8 | 33 |
| 제주 | 1 | 1 | 1 | 1 | 1 | 5 | 2 | 1 | 1 | 1 | 1 | 6 |
| 계 | 106 | 113 | 115 | 81 | 79 | 494 | 99 | 108 | 112 | 80 | 107 | 506 |

2.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결과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49.4%, 여자 50.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20.5%, 30대 22.1%, 40대 22.7%, 50대 16.1%, 60세 이상 18.6%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지역 21.3%, 인천/경기 27.6%, 대전/충청 10.0%, 광주/전라 10.2%, 대구/경북 10.5%, 부산/울산/경남 16.2%, 강원/제주 4.2%로 구성되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52.8%로 가장 많고, 고졸 33.7%, 초등졸이하 8.3%이다. 한편 가구원수는 61.0%가 3.0명이상이었으며, 2명이하는 39.0%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44.8%로 가장 많았고, 비경제활동인구 32.4%, 고용주/자영업자 17.0%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은 75.0%가 보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25.0%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2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일반)

| | | 빈도 | | 구성비 | | (단위: 명, %) | |
|----|----------|------|-------|----------------|---------|------------|------|
| 구분 | | 빈도 | 구성비 | 구분 | 빈도 | 구성비 | 구분 |
| 성별 | 계 | 1000 | 100.0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448 | 44.8 |
| | 남자 | 494 | 49.4 | | 고용주/자영업 | 170 | 17.0 |
| | 여자 | 506 | 50.6 | | 실업자 | 58 | 5.8 |
| 연령 | 20~29세 | 205 | 20.5 | | 비경제활동인구 | 324 | 32.4 |
| | 30세~39세 | 221 | 22.1 | 가구원수 | 2명이하 | 390 | 39.0 |
| | 40~49세 | 227 | 22.7 | | 3명이상 | 610 | 61.0 |
| | 50~59세 | 161 | 16.1 | 학력 | 초졸이하 | 83 | 8.3 |
| | 60세 이상 | 186 | 18.6 | | 중졸 | 52 | 5.2 |
| 지역 | 서울 | 213 | 21.3 | | 고졸 | 337 | 33.7 |
| | 인천/경기 | 276 | 27.6 | | 대졸이상 | 528 | 52.8 |
| | 대전/충청 | 100 | 10.0 | 경제수준 | 매우어렵다 | 51 | 5.1 |
| | 광주/전라 | 102 | 10.2 | | 어려운편 | 199 | 19.9 |
| | 대구/경북 | 105 | 10.5 | | 보통 | 668 | 66.8 |
| | 부산/울산/경남 | 162 | 16.2 | | 여유있는편 | 82 | 8.2 |
| | 강원/제주 | 42 | 4.2 | | | | |

나. 조사대상 국민의 생활여건

1) 경제활동상태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는 <표 III-25>에 제시된 바처럼, 임금노동자가 44.8%

로 가장 많았고, 비경제활동인구 32.4%, 고용주/실업자 17.0%, 실업자 5.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49.0%로 가장 많았고, 반면 여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46.2%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가 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68.8%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47.8%, 임금근로자 23.9% 이었으며, 대졸상의 경우 임금근로자 63.5%, 비경제활동인구 19.3%로 나타났다.

<표 III-25> 경제활동상태(일반)

| 구분 | | 임금노동자 | 고용주/자영업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계(N) |
|----|--------|-------|---------|------|---------|-----------|
| 계 | | 44.8 | 17.0 | 5.8 | 32.4 | 100(1000) |
| 성별 | 남자 | 49.0 | 25.7 | 7.1 | 18.2 | 100(494) |
| | 여자 | 40.7 | 8.5 | 4.5 | 46.2 | 100(506) |
| 연령 | 20~29세 | 53.4 | 1.5 | 5.3 | 39.8 | 100(206) |
| | 30~39세 | 68.8 | 7.7 | 1.8 | 21.7 | 100(221) |
| | 40~49세 | 47.1 | 30.8 | 2.6 | 19.4 | 100(227) |
| | 50~59세 | 39.1 | 28.6 | 3.7 | 28.6 | 100(161) |
| | 60세 이상 | 9.1 | 18.3 | 16.7 | 55.9 | 100(186) |
| 학력 | 고졸이하 | 23.9 | 19.1 | 10.0 | 47.0 | 100(472) |
| | 대졸이상 | 63.5 | 15.1 | 2.1 | 19.3 | 100(528) |

2)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조사대상자 일반 국민의 주관적 생활수준을 보면, 전체 응답자중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66.8%로 가장 많았으며, 어려운편 19.9%, 여유있는 편 8.2%, 매우 어렵다 5.1%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보다 여유 있는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45.4%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보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고졸이하(63.4%)보다는 대졸이상의 경우 8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6>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일반)

(단위: 명, %)

| 구분 | | 매우 어렵다 | 어려운편 | 보통 | 여유 있는편 | 계(N) |
|----|---------|--------|------|------|--------|-----------|
| 계 | | 5.1 | 19.9 | 66.8 | 8.2 | 100(1000) |
| 성별 | 남자 | 5.4 | 21.7 | 66.2 | 6.8 | 100(494) |
| | 여자 | 4.8 | 18.2 | 67.4 | 9.5 | 100(506) |
| 연령 | 20~29세 | 2.4 | 9.2 | 80.3 | 8.1 | 100(205) |
| | 30세~39세 | 0.9 | 19.4 | 72.1 | 7.7 | 100(221) |
| | 40~49세 | 5.6 | 18.4 | 68.2 | 7.8 | 100(227) |
| | 50~59세 | 5.1 | 21.0 | 60.3 | 13.5 | 100(161) |
| | 60세 이상 | 12.3 | 33.1 | 49.8 | 4.7 | 100(186) |
| 학력 | 고졸이하 | 8.8 | 27.9 | 58.4 | 5.0 | 100(472) |
| | 대졸이상 | 1.8 | 12.8 | 74.4 | 11.1 | 100(528) |

다. 친일환수재산 활용

1)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인식

정부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전 반적으로 매우 잘된 일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68.8%가 ‘매우 잘된 일’, 15.3%가 ‘생각해 본적 없다’, 13.3%가 ‘그저 그렇다’, 2.6%가 ‘잘 못된 일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보면 여자(62.5%)보다는 남자(75.3%))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19.8%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50대의 경우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대와 60대의 경우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각각 18.6%, 22.6%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은 74.3%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졸 이하 30.5%, 중졸 2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75%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실업자의 24.1%가 ‘생각해본 적이 없다’ 고 생각하여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27> 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일반)

(단위: 명, %)

| 구분 | | 매우 잘된 일 | 그저 그렇다 | 잘못된 일 | 생각해본 적 없음 | 계(N) | 비고 |
|----------------|---------|------------|--------|----------|--------------|-----------|----------------------------------------|
| 계 | | 68.8 | 13.3 | 2.6 | 15.3 | 100(1000) | |
| 성별 | 남자 | 75.3 | 11.7 | 2.2 | 10.7 | 100(494) | X ² =21.643 *** (p=.000) |
| | 여자 | 62.5 | 14.8 | 3.0 | 19.8 | 100(506) | |
| 연령 | 20~29세 | 63.2 | 14.7 | 3.4 | 18.6 | 100(204) | X ² =22.376 * (p=.034) |
| | 30~39세 | 75.1 | 11.8 | 1.4 | 11.8 | 100(221) | |
| | 40~49세 | 74.0 | 12.3 | 1.8 | 11.9 | 100(227) | |
| | 50~59세 | 70.8 | 13.0 | 3.7 | 12.4 | 100(161) | |
| | 60세 이상 | 59.7 | 15.1 | 2.7 | 22.6 | 100(186) | |
| 학력 | 초졸이하 | 48.8 | 15.9 | 4.9 | 30.5 | 100(82) | X ² =32.068 *** (p=.000) |
| | 중졸 | 65.4 | 9.6 | 3.8 | 21.2 | 100(52) | |
| | 고졸 | 65.7 | 16.3 | 3.3 | 14.8 | 100(338) | |
| | 대졸이상 | 74.3 | 11.2 | 1.9 | 12.7 | 100(529) | |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75.0 | 10.9 | 1.8 | 12.3 | 100(448) | X ² =22.876 ** (p=.006) |
| | 고용주/자영업 | 68.0 | 16.6 | 3.0 | 12.4 | 100(169) | |
| | 실업자 | 63.8 | 8.6 | 3.4 | 24.1 | 100(58) | |
| | 비경제활동인구 | 61.7 | 15.4 | 3.7 | 19.1 | 100(324) | |

*p≤0.05, **≤0.01, ***≤0.001

2) 독립정신 계승사업의 타당성

환수한 친일재산을 일제에 항거한 독립정신을 기리는데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응답자 중 48.9%가 ‘타당’, 35.1%가 ‘매우타당’, 13.3%가 ‘그저 그렇다’, 2.6%가 ‘타당하지 않음’ 순으로 응답하였다. 인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87.0%, 여자는 81.2%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86.4%, 87.2%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타당하다’는 응답이 낮아 초등졸은 73.1%, 중졸 73.0%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의 타당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86.6%, 86.4%로 나타났으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각각 81.9%, 81.2%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28> 친일환수 재산의 독립정신 계승 사업 타당성(일반)

(단위: 명, %)

| 구분 | | 매우 타당하다 | 타당하다 | 그저 그렇다 | 타당하지 않음 | 계(N) | 비고 |
|----------------|---------|------------|------|-----------|------------|----------|---------------------------------|
| 계 | | 35.1 | 48.9 | 13.3 | 2.6 | 100(999) | - |
| 성별 | 남자 | 39.1 | 47.9 | 9.7 | 3.2 | 100(493) | $\chi^2=15.592$ *** (p=.001) |
| | 여자 | 31.2 | 50.0 | 16.8 | 2.0 | 100(506) | |
| 연령 | 20~29세 | 30.2 | 51.7 | 15.6 | 2.4 | 100(205) | $\chi^2=18.980$ (p=.089) |
| | 30~39세 | 43.0 | 43.4 | 11.3 | 2.3 | 100(221) | |
| | 40~49세 | 38.3 | 48.9 | 11.4 | 1.3 | 100(227) | |
| | 50~59세 | 36.6 | 46.6 | 13.0 | 3.7 | 100(161) | |
| | 60세 이상 | 26.5 | 54.0 | 15.7 | 3.8 | 100(185) | |
| 학력 | 초졸 이하 | 26.8 | 46.3 | 23.2 | 3.7 | 100(82) | $\chi^2=28.650$ *** (p=.001) |
| | 중졸 | 21.1 | 51.9 | 21.1 | 5.8 | 100(52) | |
| | 고졸 | 30.2 | 53.2 | 13.6 | 3.0 | 100(338) | |
| | 대졸이상 | 41.0 | 46.3 | 10.8 | 1.9 | 100(527) | |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41.2 | 45.4 | 11.6 | 1.8 | 100(449) | $\chi^2=27.467$ *** (p=.001) |
| | 고용주/자영업 | 34.9 | 51.5 | 10.7 | 3.0 | 100(169) | |
| | 실업자 | 26.3 | 45.6 | 19.3 | 8.8 | 100(57) | |
| | 비경제활동인구 | 28.6 | 52.6 | 16.3 | 2.5 | 100(325) | |

*p≤0.05, **≤0.01, ***≤0.001

3) 독립정신 계승 중점사업

친일환수재산을 활용하여 독립정신을 기리는 중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점사업으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33.5%),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 지원 사업(25.5%)’, ‘독립정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연구(25.3%)’, ‘독립정신을 후세에 기억시킬 수 있는 상징시설 건립(15.7%)’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기념사업’에 남녀 모두 각각 33.1%, 33.9%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자는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사업’(27.0%)을, 여자는 ‘독립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연구’(28.7%)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등졸의 경우 ‘후손 개별지원’에, 중졸의 경우 ‘시설 건립’에, 고졸은 ‘교육·연구’사업에 상대적으로 선호 우위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사업(29.2%), 후손 지원(27.4%), 교육·연구(27.2%)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III-29> 독립정신 계승 중점사업(일반)

(단위: 명, %)

| 구분 | | 개별 지원사업 | 국민참여 기념사업 | 상징시설 건립 | 교육, 연구 | 계(N) | 비고 |
|----------------|---------|------------|--------------|------------|--------|----------|-------------------------------|
| 계 | | 25.5 | 33.5 | 15.7 | 25.3 | 100(995) | |
| 성별 | 남자 | 27.0 | 33.1 | 18.1 | 21.9 | 100(493) | $X^2=8.879^*$ ($p=.031$) |
| | 여자 | 24.1 | 33.9 | 13.3 | 28.7 | 100(502) | |
| 연령 | 20~29세 | 22.0 | 34.6 | 16.6 | 26.8 | 100(205) | $X^2=12.775$ ($p=.386$) |
| | 30~39세 | 30.3 | 29.4 | 12.7 | 27.6 | 100(221) | |
| | 40~49세 | 22.8 | 34.4 | 15.6 | 27.2 | 100(224) | |
| | 50~59세 | 23.4 | 36.1 | 19.6 | 20.9 | 100(158) | |
| | 60세 이상 | 29.6 | 33.9 | 14.5 | 22.0 | 100(186) | |
| 학력 | 초졸이하 | 27.7 | 34.9 | 12.0 | 25.3 | 100(83) | $X^2=15.552$ ($p=.077$) |
| | 중졸 | 22.0 | 42.0 | 24.0 | 12.0 | 100(50) | |
| | 고졸 | 22.9 | 38.1 | 14.9 | 24.1 | 100(336) | |
| | 대졸이상 | 27.4 | 29.3 | 16.0 | 27.2 | 100(525) | |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27.2 | 32.4 | 13.4 | 27.0 | 100(448) | $X^2=7.544$ ($p=.581$) |
| | 고용주/자영업 | 23.1 | 32.0 | 18.9 | 26.0 | 100(169) | |
| | 실업자 | 28.1 | 31.6 | 21.1 | 19.3 | 100(57) | |
| | 비경제활동인구 | 24.3 | 35.8 | 16.2 | 23.7 | 100(321) | |

* $p \leq 0.05$, ** ≤ 0.01 , *** ≤ 0.001

4) 독립유공자 지원의 당위성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가로부터 일반국민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74.7%가 ‘그렇다’, 13.7%가 ‘아니다’, 11.6%가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였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남자 78.1%, 여자 71.3%로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국가지원에 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 50대의 ‘그렇다’는 의견이 각각 80.2%, 79.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대는 6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학력별로는 중졸, 고졸이하의 경우 ‘아니다’라는 의견이 각각 17.3%, 15.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아니다’라는 의견이 14.0%, 16.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명)

* $p \leq 0.05$, ** ≤ 0.01 , *** ≤ 0.001

국가가 지원하는 유가족의 범위를 보면 ‘현재가 적당하다(57.6%)’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증손자까지가 적당하다’(19.3%),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해야 함(13.0%)’, ‘고손까지 확대해야 함(10.2%)’ 순으로 나타났다.

– 68 –

<표 III-31> 국가 지원 유가족의 범위(일반)

(단위: %, 명)

| 구분 | | 현재가 적당 | 증손자녀까지 확대 | 고손자녀까지 확대 | 국가유공자와 동일 | 계(N) | 비고 |
|----------------|---------|-----------|--------------|--------------|--------------|----------|------------------------------------|
| 계 | | 57.6 | 19.3 | 10.2 | 13.0 | 100(995) | |
| 성별 | 남자 | 59.4 | 17.8 | 12.6 | 10.1 | 100(493) | $X^2=13.305^{**}$ ($p=.004$) |
| | 여자 | 55.8 | 20.7 | 7.8 | 15.7 | 100(502) | |
| 연령 | 20~29세 | 54.2 | 19.2 | 8.4 | 18.2 | 100(203) | $X^2=36.410^{***}$ ($p=.000$) |
| | 30~39세 | 60.7 | 13.2 | 15.1 | 11.0 | 100(219) | |
| | 40~49세 | 59.8 | 20.1 | 10.3 | 9.8 | 100(224) | |
| | 50~59세 | 65.8 | 14.3 | 7.5 | 12.4 | 100(161) | |
| | 60세 이상 | 48.4 | 29.6 | 8.6 | 13.4 | 100(186) | |
| 학력 | 초졸이하 | 51.8 | 28.9 | 7.2 | 12.0 | 100(83) | $X^2=19.684^*$ ($p=.020$) |
| | 중졸 | 41.5 | 28.3 | 11.3 | 18.9 | 100(53) | |
| | 고졸 | 54.3 | 20.2 | 10.1 | 15.4 | 100(337) | |
| | 대졸이상 | 62.2 | 16.2 | 10.5 | 11.1 | 100(524) | |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64.3 | 14.0 | 10.2 | 11.5 | 100(443) | $X^2=37.736^{***}$ ($p=.000$) |
| | 고용주/자영업 | 57.6 | 18.8 | 15.3 | 8.2 | 100(170) | |
| | 실업자 | 57.9 | 21.1 | 7.0 | 14.0 | 100(57) | |
| | 비경제활동인구 | 48.5 | 26.5 | 8.0 | 17.0 | 100(324) | |

* $p \leq 0.05$, ** ≤ 0.01 , *** ≤ 0.001

6)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친일환수재산을 활용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을 묻는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현행 월 3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를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2.0%가장 많았으며, ‘4·5대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20.6%), ‘해외거주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10.6%)’, ‘손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제수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6.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제수비, 여자는 가계비지원에 상대적으로 선호우위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령별로 60대이상의 경우, 제수비 증손자녀확대를, 40대와 50대는 가계비지원을, 20대와 30대는 4·5대후손 장학금지원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의 경우 ‘제수비지원(12.2%)’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학금지원’을, 높을수록 ‘가계비지원’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실업자는 ‘제수비지원(11.01%)’, 임금근로자 ‘장학금지원(23.7%)’, 고용

주/자영업은 ‘영주정착금지원(15.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 지원(일반)

(단위: %, 명)

| 구분 | | 제수비 증손자녀 확대 | 독립유공자 가계 지원비 인상 | 4-5대 후손 장학금 지원 |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 | 계(N) | 비고 |
|----------------|---------|-------------------|-----------------------|-------------------|----------------|----------|------------------------------------|
| 계 | | 6.8 | 62.0 | 20.6 | 10.6 | 100(968) | |
| 성별 | 남자 | 7.9 | 60.4 | 20.7 | 11.0 | 100(482) | X ² =2.131 (p=.546) |
| | 여자 | 5.8 | 63.6 | 20.4 | 10.3 | 100(486) | |
| 연령 | 20~29세 | 8.0 | 60.8 | 22.6 | 8.5 | 100(199) | X ² =9.118 (p=.693) |
| | 30~39세 | 6.5 | 58.1 | 23.3 | 12.1 | 100(215) | |
| | 40~49세 | 5.8 | 62.9 | 20.1 | 11.2 | 100(224) | |
| | 50~59세 | 5.2 | 69.5 | 16.9 | 8.4 | 100(154) | |
| | 60세이상 | 8.5 | 59.9 | 19.2 | 12.4 | 100(177) | |
| 학력 | 초졸이하 | 5.0 | 57.5 | 26.3 | 11.3 | 100(80) | X ² =9.482 (p=.394)) |
| | 중졸 | 12.2 | 53.1 | 22.4 | 12.2 | 100(49) | |
| | 고졸 | 6.9 | 65.3 | 19.9 | 7.9 | 100(331) | |
| | 대졸이상 | 6.7 | 61.2 | 19.8 | 12.4 | 100(510) | |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6.0 | 61.9 | 22.7 | 9.4 | 100(436) | X ² =12.596 (p=.182) |
| | 고용주/자영업 | 7.2 | 60.8 | 16.3 | 15.7 | 100(166) | |
| | 실업자 | 11.1 | 70.4 | 13.0 | 5.6 | 100(54) | |
| | 비경제활동 | 7.1 | 61.1 | 21.2 | 10.6 | 100(311) | |

*p≤0.05, **≤0.01, ***≤0.001

7) 일반국민 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당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를 보면, ‘젊은 세대에게 독립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상시캠페인 시행’(27.5%), ‘위대한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다양화’(21.4%), ‘많은 국민에게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기회 제공 행사 추진’(18.9%),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기념식 규모확대’(17.1%),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과 같은 상징시설물 건립’(13.2%)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독립정신 함양 캠페인에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자는 기념사업 확대(22.9%), 기념식 확대(17.2%) 순이었으나, 여자는 사적지 탐방행사(21.3%), 기념사업 확대(20.9%)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사업별 순위는 1, 2위는 독립정신 함양 캠페인과 기념사업확

대여이었으나, 3순위에서는 20대,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정부기념식 확대’를, 30대와 40대는 ‘사적지 탐방 행사’등의 사업에 선호를 갖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고졸은 ‘기념식확대’, ‘상징시설 건립’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경제활동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념사업(22.6%), 사적지탐방(21.2%), 고용주/자영업, 실업자의 경우에는 기념식확대, 독립정신함양 캠페인, 상징시설 건립 등의 사업에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33> 일반국민 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일반)

(단위: %, 명)

| 구분 | | 정부 기념식 확대 | 기념 사업 확대 | 독립정신 함양 캠페인 |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행사 | 상징 시설물 건립 | 기타 | 계(N) | 비고 |
|----------|---------|-----------------|----------------|-------------------|----------------------|-----------------|-----|-----------|----------------------------------------|
| 계 | | 17.1 | 21.9 | 27.5 | 18.9 | 13.2 | 0.1 | 100(2000) | |
| 성별 | 남자 | 17.2 | 22.9 | 28.3 | 16.4 | 14.4 | 0.0 | 100(988) | X ² =15.825* (p=.0045) |
| | 여자 | 17.0 | 20.9 | 26.7 | 21.3 | 12.0 | 0.2 | 100(1012) | |
| 연령 | 20~29세 | 19.6 | 20.9 | 27.5 | 18.9 | 13.1 | 0.0 | 100(410) | X ² =85.123*** (p=.0000) |
| | 30~39세 | 14.0 | 26.0 | 27.2 | 22.4 | 10.4 | 0.0 | 100(442) | |
| | 40~49세 | 16.7 | 21.8 | 26.6 | 20.0 | 14.8 | 0.2 | 100(454) | |
| | 50~59세 | 19.6 | 20.5 | 27.0 | 15.8 | 14.7 | 0.0 | 100(322) | |
| | 60세 이상 | 16.4 | 19.7 | 29.2 | 15.9 | 13.4 | 0.3 | 100(372) | |
| 학력 | 고졸 | 18.2 | 20.4 | 26.5 | 18.8 | 13.8 | 0.1 | 100(943) | X ² =15.472 (p=.051) |
| | 대졸이상 | 16.2 | 23.3 | 28.3 | 19.0 | 12.7 | 0.1 | 100(1057) | |
| 경제 활동 | 임금근로자 | 16.2 | 22.6 | 26.9 | 21.2 | 12.7 | 0.0 | 100(896) | X ² =41.508* (p=.0015) |
| | 고용주/자영업 | 19.0 | 19.8 | 30.2 | 14.8 | 15.2 | 0.3 | 100(340) | |
| | 실업자 | 19.3 | 21.4 | 30.8 | 10.5 | 16.3 | 0.0 | 100(116) | |
| | 비경제활동 | 17.1 | 22.3 | 26.2 | 19.3 | 12.2 | 0.1 | 100(648) | |

*p≤0.05, **≤0.01, ***≤0.001

8) 독립정신 계승·발전 중점 교육·연구사업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46.0%)’, ‘독립 운동사 및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실시(27.5%)’,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실시(15.4%)’, ‘학술회의/ 문헌발간 사업 강화(11.1%)’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책, 영상 등과 같은 학술자료 개발’을 중점 사업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선호가 6.7%pt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학습자료 개발(53.1%)’에 강한 선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대는 ‘학술회의, 문헌발간(16.5%), 30대 ’교육실시(31.7%), 60대는 ‘발굴자료조사(19.6%)’등의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초등졸이하의 경우 교육실시(38.8%), 대졸이상 ‘학술대회, 문헌발간(13.6%)’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술대회, 문헌발간(14.0%)’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34> 독립정신 계승·발전 중점 교육·연구사업(일반)

(단위: %, 명)

| 구분 | | 학술회의, 문헌발간 사업강화 | 독립유공자 발굴 위한 자료조사 |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 위한 학습자료 개발 | 독립 운동사 및 독립운동 교육실시 | 계(N) | 비고 |
|----------------|---------|-----------------|------------------|------------------------|--------------------|----------|------------------------------|
| 계 | | 11.1 | 15.4 | 46.0 | 27.5 | 100(988) | |
| 성별 | 남자 | 11.9 | 16.8 | 42.5 | 28.7 | 100(487) | $X^2=4.837$ ($p=0.184$) |
| | 여자 | 10.4 | 14.0 | 49.3 | 26.3 | 100(501) | |
| 연령 | 20~29세 | 16.5 | 13.6 | 40.3 | 29.6 | 100(206) | $X^2=24.594$ ($p=.017$) |
| | 30~39세 | 10.9 | 14.5 | 43.0 | 31.7 | 100(221) | |
| | 40~49세 | 10.7 | 13.4 | 53.1 | 22.8 | 100(224) | |
| | 50~59세 | 12.1 | 16.6 | 48.4 | 22.9 | 100(157) | |
| | 60세 이상 | 5.0 | 19.6 | 45.3 | 30.2 | 100(179) | |
| 학력 | 초졸이하 | 3.8 | 16.3 | 41.3 | 38.8 | 100(80) | $X^2=19.736$ ($p=.020$) |
| | 중졸 | 2.0 | 17.6 | 49.0 | 31.4 | 100(51) | |
| | 고졸 | 10.2 | 18.3 | 46.4 | 25.1 | 100(334) | |
| | 대졸이상 | 13.6 | 13.2 | 46.1 | 27.1 | 100(521) | |
| 경제 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 14.0 | 11.5 | 46.7 | 27.8 | 100(443) | $X^2=15.869$ ($p=.070$) |
| | 고용주/자영업 | 7.7 | 17.9 | 48.2 | 26.2 | 100(168) | |
| | 실업자 | 8.8 | 17.5 | 47.4 | 26.3 | 100(57) | |
| | 비경제활동인구 | 8.8 | 19.2 | 43.7 | 28.3 | 100(318) | |

* $p \leq 0.05$, ** ≤ 0.01 , *** ≤ 0.001

제3 절 전문가 의식조사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총 37명의 구성을 보면 남자 35.1%, 여자 64.9%이었으며 연령대 분포는 30대 이하 48.6%, 40세 이상 51.4%로 나타났다.

1.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전문가들의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대한 의견을 보면, 우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 인상이 81.1%로 가장 많았으며, 4~5대 후손에 대한 장학금지원이 8.1%, 해외 거주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지원이 5.4%, 기타가 5.4%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경우에는 ‘가계지원비 인상’을, 40대 이상의 경우는 ‘4~5대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35>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전문가)

(단위: %, 명)

| 구분 | 가계지원비 인상 | 4~5대손 장학금 지원 | 해외 후손 영주귀국지원 | 기타 | 계(N) |
|--------|-------------|-----------------|-----------------|-----|---------|
| 계 | 81.1 | 8.1 | 5.4 | 5.4 | 100(37) |
| 39세 이하 | 83.3 | 5.6 | 5.6 | 5.6 | 100(19) |
| 40세 이상 | 78.9 | 10.5 | 5.3 | 5.3 | 100(18) |

한편 손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녀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21.6%, 증손 자녀까지 확대가 16.2%, 고손자녀까지 확대 5.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젊은층은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72.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일반국가유공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36.8%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36>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범위(전문가)

(단위: %, 명)

| 구분 | 현재처럼 손자녀까지 | 증손자녀까지 확대 | 고손자녀까지 확대 | 일반국가유공자 와 동일 | 계(N) |
|-------|---------------|--------------|--------------|-----------------|---------|
| 총 계 | 56.8 | 16.2 | 5.4 | 21.6 | 100(37) |
| 39세이하 | 72.2 | 11.1 | 11.1 | 5.6 | 100(19) |
| 40세이상 | 42.1 | 21.1 | 0.0 | 36.8 | 100(18) |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제사비용 확대에 관한 의견은 현재

처럼 손자녀까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0.3%, 증손자녀 24.3%, 고손자녀 5.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경우 현재처럼 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3.7%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30대 이하의 경우에는 고손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11.1%나 되었다.

<표 III-37> 제수비 지원 확대(전문가)

| (단위: %, 명) | | | | |
|------------|--------|---------|---------|---------|
| 구분 | 현재가 적당 | 증손자녀대까지 | 고손자녀대까지 | 계(N) |
| 계 | 70.3 | 24.3 | 5.4 | 100(37) |
| 39세 이하 | 66.7 | 22.2 | 11.1 | 100(19) |
| 40세 이상 | 73.7 | 26.3 | 0.0 | 100(18) |

2. 독립정신 선양정책

우선 전문가들의 친일귀속재산의 활용한 독립정신 계승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표 III-38>에 제시된 바처럼, 독립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에 대한 선호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 사업 37.8%,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 16.2%, 독립정신을 후세에 기억시킬 수 있는 상징시설 건립이 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독립정신 계승 중점사업(전문가)

| (단위: %, 명) | | | | | |
|------------|--------------------|--------------|--------------------|--------------------|---------|
| 구분 |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사업 | 국민참여 기념사업 | 독립정신 계승 상징시설 건립 | 독립정신 계승 교육·연구사업 | 계 |
| 전 체 | 37.8 | 16.2 | 5.4 | 40.5 | 100(37) |
| 39세 이하 | 38.9 | 16.7 | 5.6 | 38.9 | 100(19) |
| 40세 이상 | 36.8 | 15.8 | 5.3 | 42.1 | 100(18) |

가. 기념사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는 ‘위대한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한 선호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젊은 세대에게 독립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상시 캠페인 시행이 21.6%, 국민 대상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기회제공이 18.9%,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기념식 규모 확대 9.5%,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과 같은 상징물 건립 8.1%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특징을 보면, 30대 이하의 경우에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기회 제공과 같은 사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독립정신 함양을 위한 상시캠페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일반국민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전문가)

(단위: %, 명)

| 구분 | 기념식 규모 확대 | 기념사업 확대·다양화 | 독립정신 함양 상시캠페인 |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 독립유공자상 정시설물건립 | 계(N) |
|--------|-----------|-------------|---------------|-----------------|---------------|---------|
| 계 | 9.5 | 41.9 | 21.6 | 18.9 | 8.1 | 100(74) |
| 39세 이하 | 8.3 | 44.4 | 19.4 | 25.0 | 2.8 | 100(36) |
| 40세 이상 | 10.5 | 39.5 | 23.7 | 13.2 | 13.2 | 100(38) |

나. 독립정신 계승·발전 교육·연구사업

독립정신 계승·발전 위한 교육·연구사업에 대한 선호경향을 보면 책, 영상물 등을 통한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37.8%), 학술회의·문헌발간 사업(29.6%),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실시(18.9%),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13.5%)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학술회의 부분에서는 4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와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에서는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0>독립정신 계승·발전 중점 교육·연구사업(전문가)

(단위: %, 명)

| 구분 | 학술회의 |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실시 |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실시 | 계(N) |
|--------|------|--------------------------|-------------------------|-----------------------|---------|
| 계 | 29.7 | 13.5 | 37.8 | 18.9 | 100(37) |
| 39세 이하 | 33.3 | 5.6 | 44.4 | 16.7 | 100(19) |
| 40세 이상 | 26.3 | 21.1 | 31.6 | 21.1 | 100(18) |

3. 친일귀속재산 효율적 활용

친일귀속재산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찬성이 67.6%, 반대가 32.4%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40세 이상의 경우 39세 이하에 비하여 찬성의견이 다소 많았다.

<표 III-41> 친일귀속재산으로 별도의 기금 조성·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 찬성 | 반대 | 계(N) |
|--------|------|------|---------|
| 계 | 67.6 | 32.4 | 100(37) |
| 39세 이하 | 66.7 | 33.3 | 100(19) |
| 40세 이상 | 68.4 | 31.6 | 100(18) |

한편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한 국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는 교육기관·도서관 건립에 대한 선호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학사업 27.0%,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출판·홍보사업 24.3%, 기념관·기념시설 건립이 8.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에 모두 교육기관·도서관 건립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출판홍보사업(27.8%), 장학사업(22.2%) 순이었으나, 30대 이하의 경우에는 장학사업(31.6%), 출판홍보사업(2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한 국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

(단위: %, 명)

| 구분 | 장학사업 |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출판·홍보사업 | 기념관 기념시설 건립 | 교육기관, 도서관건립 | 계(N) |
|--------|------|------------------------|----------------|----------------|---------|
| 계 | 27.0 | 24.3 | 8.1 | 40.5 | 100(37) |
| 39세 이하 | 22.2 | 27.8 | 11.1 | 38.9 | 100(19) |
| 40세 이상 | 31.6 | 21.1 | 5.3 | 42.1 | 100(18) |

제4절 조사결과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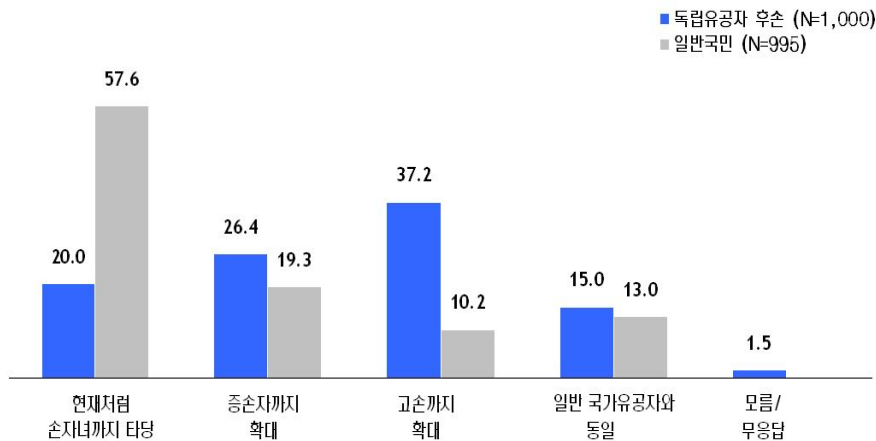
1.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가.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의 확대 여부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유가족 범위 확대 여부는 일반국민의 경우 ‘현재처럼 손자녀까지 타당하다’는 의견이 57.6%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의견인 20.0%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증손자까지의 확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26.4%로 일반국민의 19.3%보다 높게 응답하였으며 ‘고손까지 확대’와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 역시 일반국민보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높은 선호율을 보였다.

한편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현재처럼 손자녀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녀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21.6%로 나타났다.

<그림 III-1> 적절한 국가 지원 유가족의 범위



나. 독립유공자가 일반국민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독립유공자가 일반국민에 비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반응이 76.4%로 일반국민의 74.7%보다 높은 의견을 보였

으며, ‘아니다’의 반응은 독립유공자의 후손(12.3%)보다 일반 국민(13.7%)의 의견이 1.4% 정도 높은 반응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독립유공자후손은 일반국민보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독립유공자가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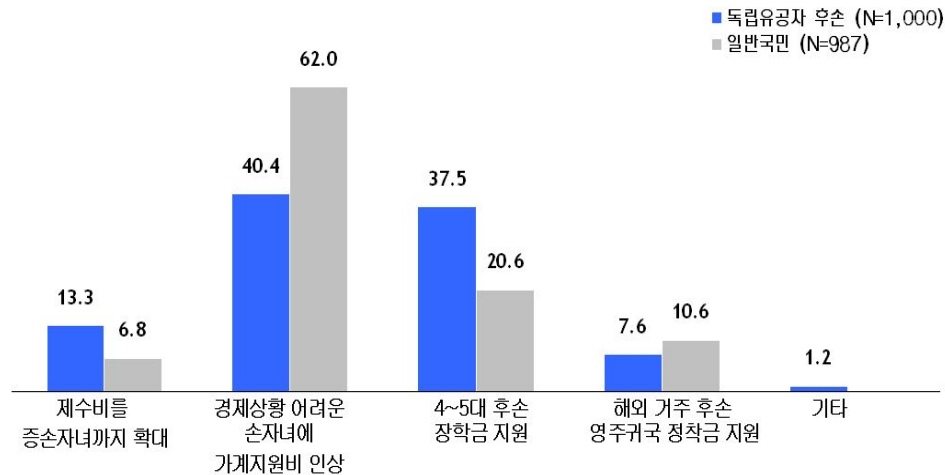


다. 친일환수재산을 활용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 지원 사항

친일 환수재산을 활용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묻는 문항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 인상’에 대한 항목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의견이 40.4%, 일반국민의 경우 62.0%로 독립유공자의 후손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제수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와 ‘4~5대 후손 장학금 지원’의 경우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해외 거주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의 경우는 일반국민이 더 많은 의견을 보였다.

<그림 III-3> 친일환수재산 활용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 지원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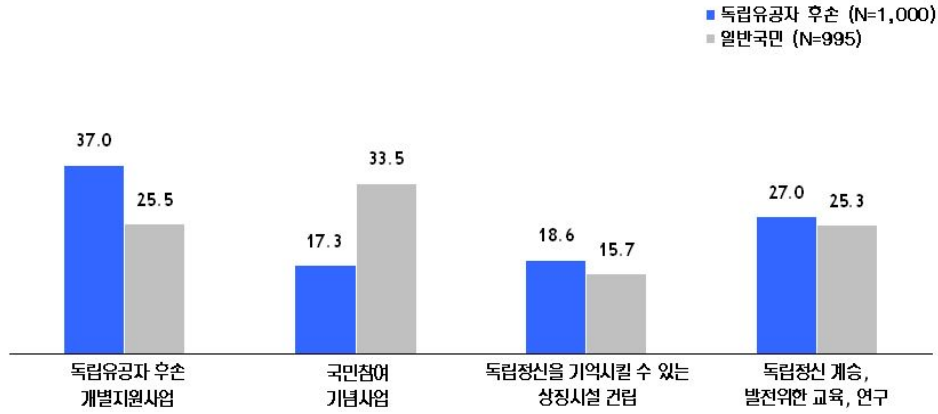
2. 독립정신계승 선양정책 사업

가. 친일환수재산 활용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사업추진의 중점 사항

친일 환수재산을 활용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사업추진의 중점 사항들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후손 개별지원 사업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37.1%’로 일반국민의 25.5%보다 높은 의견을 보였으며, 특이점으로는 국민참여 기념사업의 경우 ‘독립유공자 후손이 17.3%’, ‘일반국민이 33.5%’로 일반국민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독립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항목은 독립유공자 후손 27.1%, 일반국민 25.3%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전문가의 경우, 독립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후손들의 개별지원이 37.8%를 차지하였다.

<그림 III-4> 친일환수재산 활용의 중점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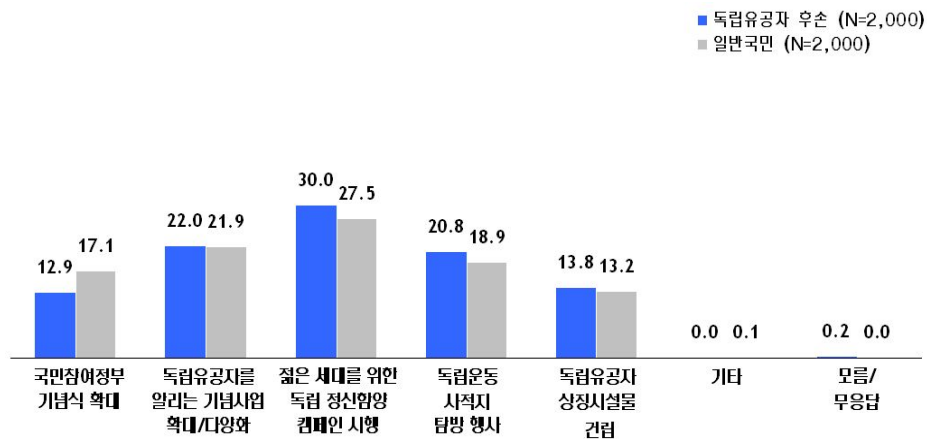


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당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는 ‘정부 기념식 확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이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독립 정신함양 캠페인 시행’의 경우 독립유공자 후손이 30.0%, 일반국민이 27.5%로 두 대상 모두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기념사업 확대·다양화, 사적지 탐방행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의견은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다양화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젊은세대 독립정신함양으로 21.6%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그림 III-5> 일반국민 대상 독립운동 기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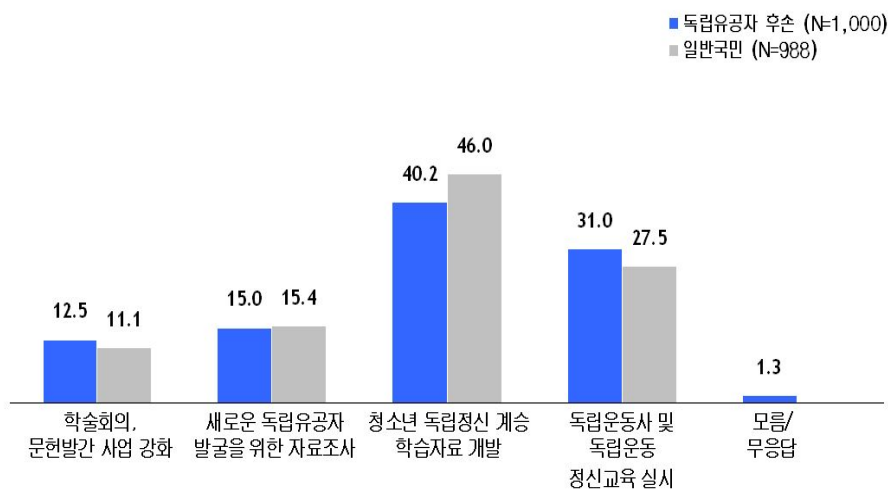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은 ‘정부기념식 확대’ 사업으로 일반국민이 17.1%, 독립유공자 후손 12.9%로 일반국민이 더 높은 의견을 보였다. 또한, ‘정부 기념식 확대’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의견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국민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사업의 중점 사항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것은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 학습자료 개발’ 항목으로써 일반국민이 46.0%로 독립유공자 후손 40.2%보다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 정신 교육실시’,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술회의, 문헌발간 등의 사업이 29.7%를 차지하였다.

<그림 III-6> 교육/연구사업 중점 사항



3. 조사결과와 시사점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현행처럼 3대인 손자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학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굳이 후손들만으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또한 개별지원의 경우,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급여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수비 확대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의견의 경우, 최근 장사문화 환경의 변화와 종교 등의 영향으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감소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제수비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면 후손이 살아있는 한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생계가 어려운 후손을 대상으로 가계비지원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반 국민들은 독립정신계승 선양정책 사업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독립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를 혼합한 형태의 정책사업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세대에 적합한 콘텐츠 등을 활용한 계승사업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별도의 재단 또는 기금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등의 육영사업과 장학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적극 고려하여 친일귀속재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외국의 반민족재산 환원사례

제1절 나치재산 환원 사례

아시아가 일본에 의한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 유럽은 독일의 침략과 점령으로 인한 과거청산을 경험하였다. 독일은 1938년 오스트리아와 독일인이 거주하는 체코 슬로바키아 지역을 합병하고 1939년 폴란드를 침입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여 1941년 이르러서는 몇 중립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을 점령했다.

독일의 지배방식은 합병(오스트리아), 독일 민·군 당국의 직접 통제(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군 당국의 간접 지배(덴마크, 세르비아), 사실상 위성국(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배 방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모든 피지배 국가에서 나치주의에 동조하고 독일에 가까이 협력하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독일은 지배체제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패배로 해방을 맞이한 유럽의 각국은 가장 먼저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자를 처단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점령기에 국가를 배신하고 동포에게 잔인했던 협력자들을 처벌하고, 새로운 국가에 방해가 될지도 모를 사회·정치·이념 집단을 제거하거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혹한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가려내어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고 점령기에 행해진 행위를 규명하여 증거와 기록을 남겼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1.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는 우리의 일제 식민지 경험과 비슷하게 이웃나라의 점령을 받았으며, 일본

과 독일이라는 점령국이 모두 2차 대전의 추축국¹⁾이었다는 점, 비슷한 시기(1944-45)에 해방되었다는 점, 그리고 점령당국에 대한 협력행위가 주된 청산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점령기간이 4년으로 우리의 식민지 경험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점령의 성격이 다소 달랐다는 지적도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 해방과 과거사 청산

프랑스는 2차 대전 중 독일에 의한 점령과 해방과정에서 대독협력이라는 어두운 경험과 레지스탕스로 일컬어지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후 새롭게 등장한 유럽의 여러 국가와는 달리 프랑스는 전쟁 초기부터 명백하게 나치에 대한 항전을 천명한 레지스탕스를 통해 정통성에 문제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들 레지스탕스 조직은 거리의 정의라고 일컬어지는 즉석에서 조직한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통해 약 8,000-10,000명 사법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처형되었으며, 이중 62-85%가 해방 전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레지스탕스는 프랑스의 과거청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하면서 전세가 기울었고, 비시 정부는 후퇴하는 독일군을 따라 점령지역을 전전하다가 지그마링겐(Sigmaringen)에서 종전을 맞이했다. 패전의 산물이었던 비시 체제는 독일의 패배로 종식되었다.

페탕 원수와 라발(Laval) 총리를 필두로 한 비시 정부의 최고위 관료들 108명에 대한 재판은 1944년 11월에 설치된 고등협력자재판소(haute cour de justice)가 담당했다. 여기에서는 모두 18명이 사형을, 22명이 징역 및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며, 15명은 시민권 박탈 형을 주형으로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페탕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페탕에 이어 비시정부를 이끌었던 라발과 민병대 대장이자 비시정부의 질서유지 담당 총서기였던 다르낭과 독일군당국에 비시정부 대표로 파견되었던 브리농은 처형되었다.

1)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영국, 소련 등의 연합국(聯合國, Allied Powers)과 싸웠던 나라들이 맺은 국제 동맹을 가리키는 말로,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의 나치(Nazi) 독일과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1883~1945)의 파시스트(Fascist) 이탈리아가 1936년 10월 25일에 맺은 우호 협정이 기초가 되었다. 무솔리니는 두 나라가 유럽과 세계의 국제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추축(樞軸,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여기에서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표 VI-1> 협력자재판소와 시민재판부의 형선고

(단위 : 명)

| 구분 | 내용 | | | |
|--------|--------|-------------|--------|--------|
| 협력자재판소 | 사형 | 처형 | 767 | 6,763 |
| | | 감형 | 2,086 | |
| | | 결석재판 | 3,910 | |
| | 무기징역 | 결석재판 | 454 | 2,702 |
| | 유기징역 | 결석재판 | 1,773 | 10,637 |
| | 금고 | 결석재판 | 88 | 24,927 |
| | 공민권 박탈 | 결석재판 | 19 | 3,578 |
| | 무죄석방 | | | 6,724 |
| | 계 | | | 55,331 |
| 시민재판부 | 공민권 박탈 | 무기 | 14,701 | 46,645 |
| | | 유기 | 31,944 | |
| | | * 유·무기 결석재판 | 6,082 | |
| | 형 면제 | 레지스탕스 활동 | | 3,184 |
| | 무죄석방 | | | 19,453 |
| | 계 | | | 69,282 |

자료: Luc Huyse, "The Criminal System as a Political Actor in Regime Transitions: the Case of Belgium, 1944-1950," The Politics of Retribution i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 161 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7),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 청산법령I 의 자료를 중심으로 자체 작성

협력자 숙청은 형사상 처벌이란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친독협력문인들에게는 발표금지령이, 협력 공무원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졌고, 친비시 노조 지도자들은 노조에서 쫓겨났으며, 친독 협력 신문들은 폐간되었다. 비시정부에 복무했던 공무원 150만 명 가운데 22,000-28,000명이 행정 숙청의 대상이 되어 해임, 파면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업종간연합숙청위원회들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몰수위원회들이 부문별로 설치되어 친독 협력행위를 한 기업주들과 기업 간부들을 상대로 경제적 숙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숙청의 정도는 매우 불균등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문단과 언론계에서의 숙청이 가장 강도 높게 진행되었던 반면, 공직 사회의 숙청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협력자들의 경우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계층별, 직위별, 그리고 시기별 불균등 때문에 독일 점령기에 대한 프랑스의 과거청산은 실망스러웠다는 평도 있지만 실제 전반적으로 규모 면에서 프랑스의 협력자 처벌은 규모는 매우 컸다. 전국적으로 32만 명 이상이 협력자 혐의를 받았고, 실제 12만 5천명은 재판을 받았으며, 그 중 9만 5천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프랑스가 합법적·사법적 처벌을 통해 4년간의 독일 점령기에 벌어졌던 각종의 대독협력 행위와 행위자를 '범죄'와 '범죄자'로 규정지

을 수 있었다는 의미이며, 협력행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자유, 평등, 정의라는 국가의 이념과 정통성을 지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방 후 협력자 숙청은 1950-1951년의 시민재판부 및 협력자재판소 해체와 1951년과 1953년의 대대적인 사면으로 일단락 댔었지만 1980-1990년대에 진행된 '반인도죄' 사범들에 대한 일련의 재판과 유죄선고는 독일 점령-비시정부기라는 '암울했던 시절'에 대한 과거사청산 작업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나. 협력자 처벌 관련 주요 법령

과거청산에서 군사적인 면에서의 협력자나 정보원을 처단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새로이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령시기 독일 정복자에게 정치적으로 협력한 정치 지도자와 그들의 추종자를 정계를 비롯한 공공 분야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자신들의 정통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다.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전쟁 전 형법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총력전 상황에서 협력으로 간주된 많은 형태의 정치적 행동을 처벌하기에 부적절했다는 점이다. 형법의 규정을 확대해석하더라도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던 이유는 문제가 된 점령기간의 어떤 정치적 행위의 부분은 자유의사의 표현, 언론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의 범주에 들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 전역이 동시에 해방되지도 않았고 비록 드골의 임시정부가 연합국에 의해 정통성을 승인받았다고 할지라도 승전국으로 나서는데 문제가 있었으므로 하루 빨리 협력자 처리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드골의 임시정부는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1944년 6월 26일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1944년 8월 26일 명령, 프랑스 본토의 행정적 숙청에 관한 1944년 6월 27일 명령을 발표하여 협력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 75조(1939년 7월 29일)

프랑스의 해방 후 협력자 재판의 법적 근거가 된 조항으로 사형으로 다스릴 반역 죄를 다섯 가지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 대하여 무기를 든 자,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적의 프랑스 침입을 도운 자, 프랑스의 주권, 군대, 영토 시설을 넘긴 자, 프랑스에 적대하는 외국 군대에 복무한 자가 이에 해당하며 프랑스의 주권이 행사되는 국가의 주민과 프랑스를 위해 복무하는 외국인 군대 및 해군은 모두 프랑스인으로 간주하여 본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2)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년 6월 26일)

1940년 6월 16일부터 해방일 사이 벌어진 대독협력행위를 재판할 사법기구인 협력자재판소 설치를 구체화한 명령으로 드골 임시정부의 대독협력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위한 첫 명령이다. 이 내용에 재산몰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력자재판소는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관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독협력자들의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사법관인 재판장 1인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의 명단에서 추첨으로 뽑는 4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었다. 주도적이거나 자발적으로 반민족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명령이나 지시를 집행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지휘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실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간주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정당화되지 않았다. 일정 지역이 해방되는 대로 설치된 이 재판소들은 프랑스 영토가 완전히 해방된 후 6개월(1951년 1월까지) 내에 기소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하였다.

재산몰수에 대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적근거로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판소는 주형(主刑)으로든, 부가형으로든,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선고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방형이 주형이나 부가형으로 부과될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어떠한 선고도 그를 국치의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라고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프랑스 본토의 행정 숙청에 관한 법령(1944년 6월 27일)

드골의 임시정부는 협력자재판소 설치를 규정한 명령을 포고한 바로 다음날인

1944년 6월 27일에, 비시 체제 하에서 협력행위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명령을 공포하였다. 이 명령에서는 적의 계획이나 행동을 이롭게 한 행위, 프랑스 및 그 연합국의 전쟁 수행을 방해한 행위, 입헌 제도나 본질적인 공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는 좌천, 강등, 대기발령에서 해임, 파면에 이르는 각종 징계를 규정했다. 관련 위원은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군 위원·법무위원·훈위국에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류를 넘겨줄 수도 있었다.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모두 22,000-28,000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 수치는 모든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을 포함한 게 아니어서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반대되는 모든 법규, 정관, 계약상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은 본 명령의 제1조에 명시된 행위를 한 모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해당 공직자의 법적 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방위나 공공안전에 위험이 된다면 관할 위원은 내무위원에게, 1939년 11월 18일 법령에 규정된 보안조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정직기간 동안 봉급, 임시추가수당, 직급수당의 절반을 받을 것이며, 직무수당, 판공비, 관리수당, 상여금 등은 받지 못한다. 단, 가족수당은 전액 받을 수 있다(제3조). 또한 이전의 법규에 의거해 내려졌거나 내려질 수 있는 징계조치들과 무관하게, 그리고 모든 법규 및 계약상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좌천, 강등, 대기발령, 퇴직, 퇴직금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지급 중지, 취업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금지, 군대 간부명부에서 이름 말소(연금은 지급할 수도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훈장을 달거나 그에 따르는 대우를 받을 권리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박탈, 해임 혹은 파면과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제4조).

4)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년 8월 26일)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과 프랑스 본토의 행정 숙청에 관한 명령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반민족 협력행위를 처벌하고, 공직에 있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징계하는 차원에까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

과 공직에 있는 자 외에 존재하는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 국치죄를 도입하여 '정치적 권리 즉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점령시기 중앙과 지방 정부에 참여하거나, 유대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여러 협력 단체에 참가한 행위, 일정 정당에서 활동한 행위, 적의 이념 유포나 이에 유리한 활동에 참가한 행위가 국치죄에 속한다. 국치죄는 협력자재판소 내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재판하며, 국치죄에 대한 형벌은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박탈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공적 집단이나 사회에서의 지위를 해임하고 배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이 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제9조).

-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민적, 정치적 권리와 훈장 패용권 박탈한다.
- 모든 직무, 직위, 공직, 법인으로부터 면직되거나 제명한다.
- 육해공군에서의 모든 계급을 박탈한다.
- 공공단체로부터 영업권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이사, 사장, 사무국장이거나 공익기업 및 기관에서 시도(市道)정부나 공인(公人)이 임명한 직위에 있는 경우 면직한다.
- 배심원, 감정인, 중재인이 될 수 없고, 법적 행위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으며, 법정에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증언할 수 없다.
- 변호사, 지정 변호사, 공증인, 소송대리인,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법원 부속 공직자의 직위로부터 면직한다.
- 학교를 운영하거나 가르칠 권리, 어떠한 교육기관에서도 교수, 교사, 학생감으로 채용될 권리, 청소년의 정신적, 지적, 육체적 교육을 수행하거나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다.
- 직종을 대표하고 그 훈련을 담당하는 모든 기구, 협회, 조합으로부터 제명한다.
- 노동, 사회보장, 건강, 공공부조 관련 법규들의 시행을 담당한 기관들의 집행부, 이사회 및 여타 지도기구로부터 면직하거나 제명한다.
-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영화사를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그곳에서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다.

- 가족의 적법한 견해에 따라 본인의 자녀로 판명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회의에 참여하거나 후견인 및 후견인 대리가 될 수 없다.
- 무기를 보유하거나 소지할 권리를 박탈한다.
- 회사의 경영자나 지배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 은행 및 보험회사의 사장, 부사장, 사무국장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5) 고등협력자재판소 설치에 관한 명령(1944년 11월 18일, 1945년 1월 18일 일 부개정)

대부분의 협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담당한 협력자재판소와 국치죄 여지를 판결할 특별재판부에 이어 1944년 11월에는 대독협력의 최고책임자들인 비시 정부 주역의 '정치적 협력'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고등협력자재판소의 설치가 공포되었다. 여기서는 모두 108명에 이르는 비시 정부의 국가원수, 총리 장관, 국무서기, 부국무서기, 식민지 총독 등 최고위급 관료들이 직무수행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다.

다. 프랑스의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몰수에 관한 내용은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재산 몰수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 또는 구체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은 그 범위의 포괄성 때문이다. 즉 재산몰수에 있어서 전제를 하고 있는 어떠한 경우는 협력자 처벌의 모든 규정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해방과 함께 협력자 처벌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규범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필요했다. 전후에 정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법 규칙과 인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논쟁은 비시정권의 합법성에 관한 것으로 비시정권이 프랑스의 합법적인 정권이라고 믿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였다. 소급법률의 제정이나 처벌문제가 제기되었고 과거 법률제도와와의 상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모든 서유럽 국가들은 반역죄를 규정한 현행 법률이 장기간의 점령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

와 광범위한 협력행위를 처벌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소급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소급입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가 동원되었다. 물론 재산환수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도 포괄적 규정을 통해 적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 제35조의 "... (생략)...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선고할 수 있으며, ... (생략)..." 규정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유죄판결에 대해서 재산 몰수가 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시 프랑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민 대다수가 협력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을 전후 개혁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탕하지는 은유적 표현들이 전후 숙청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구호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후 협력자 숙청은 그 과정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소급입법의 제정, 유죄와 무죄의 기준 설정, 판결의 본질적 성격 등이 정치적 논쟁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의 중심주제가 되었고 여론의 쟁점으로 떠오르곤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협력자 처벌은 유럽 사회가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2. 오스트리아의 사례

오스트리아는 나치독일에 1938년 3월 13일 합병되어 1945년 3월 28일까지 나치독일의 일개 (알프스-도나우) 대관구로서 존속했으며, 전후 오스트리아의 과거청산은 연합군의 전범처리와 오스트리아인 스스로의 과거청산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사회와 비교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되어 식민지배를 받은 것과 유사하게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합병되어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다. 나치정권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기간은 12년으로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을 강점한 것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으나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피지배국 중 유일하게 합병의 방식으로 지배를 받은 국가라는 점에서 그 경험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가. 해방과 과거청산

오스트리아의 과거청산은 크게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주권을 회복한 후 나치사면법이 발효된 1957년까지의 정치적 숙청과 이후 홀로코스트의 범인을 색출하는 작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표 VI-2> 단계별 특징

| 단계 | 기간 | 특징 |
|----|---------------|-------------------------------------------------------------------------------------|
| 1 | 1945.4~1945.6 | 연합군이 나치협력자들을 수감 격리시키는 시기 |
| 2 | 1945.6~1946.2 | 5개(4개 연합군정과 오스트리아 임시정부)의 사법주체가 독자적으로 탈나치화 작업 |
| 3 | 1946.2~1947.2 | 「나치금지법」과 「전범처리법」에 의거해 오스트리아 임시정부가 전국에 걸친 탈나치화 작업을 주도한 시기. 연합국은 그의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위치로 후퇴 |
| 4 | 1947.2~1948.5 | 1947년의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근거해 탈나치화 작업이 수행 완료되었던 시기 |
| 5 | 1948~1957 | 나치 사면의 시기 |

자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7),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 청산법령

해방 이전 1944년 말 소련을 제외한 서방 연합국 파견군 최고 사령부(SHAEF)는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이후의 체포 및 수감할 오스트리아 나치협력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합의했었다. 이 기준에 의해 서방 연합국은 1946년 2월까지 각 점령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전범을 처리하였으나 소련군정은 가능하면 이들을 오스트리아 임시정부의 특별재판소에 일임했다. 이 시기 이후로는 특별재판소가 재판을 전담하였다.

<표 VI-3> 1945년 2월까지 연합군 점령지역에서 체포된 나치협력자 수

| 미국점령지역 | 영국점령지역 | 프랑스점령지역 | 소련점령지역 | 총계 |
|--------|--------|---------|-------------|----------|
| 9,462 | 6,413 | 약 2,000 | 약 1,000(추정) | 약 18,875 |

칼 렌너가 주도한 오스트리아 임시정부의 과거청산의 법적근거는 임시정부가 1945년 5월8일에 제정한 「나치금지법」과 동년 6월 26일에 제정한 「전범처리법」이다. 이 두 법에 근거하여 최우선적으로 취해진 조치는, 합병 5년 전, 즉 1933년 7월 1일부터 1945년 4월 27일까지 나치당의 당원이었거나 또는 이 당의 직속·부속 단체에의 구성원이었던 자들을 1945년의 총선거로부터 배제하는 것이었다. 또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나치금지법」 제5장에 근거하여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일부 전범이 누

른베르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전범재판은 특별재판소가 담당하였다.

두 명의 직업판사와 세 명의 참심(參審)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소는 고등법원이 위치한 4개 도시(빈, 그라쯔, 린쯔, 인스부르크)에 설치되었다. 이 재판소의 활동은 소련 점령지역에서는 1945년 여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1946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참심법관들은 당시 오스트리아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3개 정당(오스트리아 인민당,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오스트리아 공산당)이 추천한 자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특별재판소송 및 재산몰수법 제3조에 의하면, 특별재판소는 범죄 사실 구성요건에 따라 재판권한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을 일반재판소로 보낼 수도 있었다.

특별재판은 기본적으로 단심제였으며 일체의 상고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죄수는 형이 즉각 집행되었으며 감형이나 형을 변경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11월 30일 오심을 피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감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의하면 최고재판소의 의장은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이것을 최고재판소 3인 위원회에 넘겨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회는 문제의 판결을 취소할 수도 있었으며 이 판결을 내린 특별재판소 혹은 다른 특별재판소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었다.

<표 VI-4> 1955년까지 오스트리아 특별재판소의 재판 결과

| | 조사 | 기소 | 유죄 | 무기징역 | | 사형 | | | | |
|---------|---------|--------|--------|------|----|----|----|----|----|----|
| | | | | 선고 | 감형 | 선고 | 자살 | 재심 | 집행 | 감형 |
| 1945~55 | 136,829 | 28,148 | 13,607 | 34 | 6 | 43 | 2 | 1 | 30 | 10 |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7),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 청산법령

4개의 특별재판소 검사들은 136,829명을 조사했고 이 중 28,148명을 기소했다. 특별재판소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 대다수는 「나치금지법」 위반자이거나 1938년 이전에 나치당에 가입한 자들이었다. 나치 폭력범은 「전범처리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1945년부터 1947년까지 특별재판소는 「나치금지법」에 의거해 3,253명에게, 「전범처리법」에 의거해 2,129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전범처리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중 약 4%가 이 법의 전범죄(제1조), 약 36%가 반인도주의적 범죄(제3, 4조의 “인간의 품위를 유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약 6%가 “아

리안화”(제6조의 “불법적인 치부” : 유대인재산을 약탈하는 행위), 그리고 53%가 밀고죄(제7조)에 해당되었다. 특별재판소는 1955년 12월 20일에 폐지되었다.

나. 협력자 처벌 관련 주요 법령

1) 나치금지법(1945. 5. 8)

칼 레너(Karl Renner)가 이끄는 새로운 오스트리아 정부는 1945년 4월 27일의 정부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민주주의와 민주적인 자유의 훼손, 국민에 대한 폭력과 간첩행위, 박해와 압제를 자행한 정권을 수립하고 유지한 자, 나라를 모험적 전쟁으로 몰고 가서 황폐화시킨 자와 계속 황폐화시키려 하는 자는 어떠한 자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방식처럼 예외적 특별법규에 의한 규율을 받아야 되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가담자’는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천명되었다.

이러한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1945년 5월 8일 나치당 금지에 관한 헌법적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금지법 하에서 나치당과 나치돌격대, 나치친위대, 나치기동대, 나치항공대 등의 준군사조직, 기타 모든 국가사회주의적 조직과 기구는 해산되었고, 그러한 조직의 재결성도 금지되었다(제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가사회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자는 사형과 함께 전 재산의 몰수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제3조). 다만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 내지 20년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후속 규정들은 국가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특별 조치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단계로써 나치당 혹은 준군사조직에 속하였던 모든 사람과 적어도 1933년 7월 1일부터 1945년 4월 27일 사이의 입당 후보자들은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등록한 자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1년 내지 5년의 금고형에 처한다(제8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위법자’에 대한 규정이었다. 1933년 7월 1일부터 1938년 3월 13일 사이에 국가사회주의당 혹은 그 준군사조직에 가입하였거나 혹은 가입되어 있었던 자는 5년 내지 10년의 무거운 금고형에 처한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오스트리아 형법 제58조에 규정된 반역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새로

이 국가사회주의적으로 행동하거나,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되어야 했다(제10조 제3항). 일단 한 번 오스트리아의 국가 존립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들이 다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확고히 막는 것이 그 목표였다. 반역적 음모가 증대할 경우 만약 임시정부가 소추를 일반적으로 지시한다면, 이 규정에 기초하여 반드시 기소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경고적인 성격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는 한 번도 행해지지 않았다.

통상적인 위법행위를 넘어서서 당의 포상을 받거나 국가사회주의 조직의 고위직을 역임하여, 비난받을만한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거나 특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 혹은 인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를 한 모든 자는 10년 내지 20년의 금고 형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었다(제11조). 위에 언급된 형벌규정은 1933년 7월 1일부터 1938년 3월 13일 사이에 국가사회주의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거나 혹은 오스트리아 경제에 손실을 끼친 사람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도의 반역행위를 한 자들에게 해당된다(제12조).

탈나치화 조치의 기초는 나치당 멤버 전원에 대한 등록 작업이었다. 해당되는 자들은 광범위한 설문에 답해야 했고 그 내용은 당국에 의해서 검증되었다. 1946년 7월 4일 연방수상 레오폴드 피글(Leopold Figl)이 연합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있거나 경제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1,000명 가까운 인사들이 그들의 직책에서 물러났고 대략 71,000명(전체 공직자는 30만 명)이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민간영역에서도 36,000명이 해고되었다.

이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한 조치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예를 들면 나치당원이었지만 저항운동에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던 경우와 같이 대상자들 중 소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였다. 실제로 등록의무자들 중 대다수(85~90%)가 당원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모든 청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체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따라서 법률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시 법률의 개정을 고려하였다.

오스트리아 임시정부가 해방직후 제정한 이 법은 나치당 및 그 직속·부속단체를

불법화하고 이 조직체를 부활하려는 시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이 점에서 소급입법의 비난은 피했으나 1933년 7월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나치당 및 그 직속·부속단체에 잠시라도 일원이었던 자를 신원등록케하여 그들에게 각종 속죄 조치를 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독일의 점령기에 위 나치조직체들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제3장). 왜냐하면 점령기 동안 나치당 자체가 불법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뒤이어 제정된 전범처리법에 점령기동안의 나치당간부 역임 자는 전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1947년 나치금지법 3차 개정법에 의거해 중범 혹은 경범으로서 규정되었고 속죄조치의 부과대상이었다. 단, 독일 점령기 이전인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나치당 및 그 직속·부속단체에 잠시라도 일원이었던 자를 불법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은 대역죄인으로서 징역형, 재산 몰수형 등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오스트리아 나치당은 오스트리아 법률상 불법이었으며 나치독일과의 합병에 적극 협력했기 때문이었다. 불법행위자와 독일점령기의 나치구성원에 대해서는 강제노역, 재산권 박탈, 직업제한, 연금제한 혹은 기지금액의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는 이 법의 처벌행위를 판결하는 특별재판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1947년 국가사회주의법에 개정·통합되었다.

2) 전범처리법(1945. 6. 26)

오스트리아 임시정부가 제정한 이 법은 국제법·전쟁법의 위반자, 반인도주의 범죄자 등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점령기간 동안 중요 나치조직체에서 특정 직위의 간부를 역임한 자는 그 자체로 전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나치금지법에 없는 조항이다. 명령에 의한 범행도 전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한 자는 수행하는 자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 전쟁선동죄, 학대·가혹행위죄, 불법치부죄, 밀고죄, 대역죄, 재산환수 규정을 두고 있다. 대역죄 규정은 나치금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점령기 이전의 나치활동과 관계된다. 이 법은 1947년의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개정·통합되었다.

탈나치화의 일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치의 지배를 함께 도왔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자행하기 위하여 그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소추하는

것이였다.

전범처리법은 1945년 7월 26일 시행되였다. 이 법은 특히 나치당 고위간부, 후원자 및 위법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탈나치화 작업에 있어서의 핵심적 형법이었다. 이 법률은 세부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의 전쟁범죄자, 전쟁선동·고문·부당행위, 인간성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침해, 고향으로부터의 추방행위, 불법축재, 반역을 행한 자들을 처벌하였다.

전범처리법에서는 이들에게 사형이나 재산몰수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이나 최저 10년의 무거운 금고형이 내려질 수도 있었다. 전범처리법은 말하자면 국가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자행된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형벌을 내리려는 속죄조치법이었다.

전쟁범죄 및 인간성에 대한 범죄 외에도 전범처리법은 범죄적 행위에 참가한 특정한 단체에 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나치 전쟁범죄의 ‘주모자와 실행자’로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제국정부의 구성원, 지역 국가사회주의당의 권력자, 제국총독, 제국국방위원, 친위대장, 무기친위대, 군기부장 등이다(제1조 제6항). 또한 유대인 수용소 사령관, 부대장, 또는 그 참모 혹은 비슷한 지도적 지위에 있었던 간부로서 행정적 과제를 다루는 장교들도 포함되고, 비밀경찰 및 보안대의 간부, 국민재판소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자 혹은 국민재판소의 검찰고위직, 혹은 그 대리인들로서 국가사회주의적 권력지배시대에 활동하였던 모든 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제3조 제3항). 이 법 규정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행위에 참여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책상에 앉아서 명령만 하였던 자”를 처벌하는 것을 손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45년 6월 25일의 전범처리법을 오스트리아 임시정부가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독일점령기에 오스트리아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들을 근거지로부터 강제이주시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3) 국가사회주의자법(1947. 2. 6)

가) 법의 주요내용

이 법은 오스트리아가 주권을 회복한 후 오스트리아 국회가 기존의 과거청산에

연관된 법령, 즉 나치금지법, 공무원법, 전범처리법, 특별재판소 소송법,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증인법, 경제숙정법 등을 총21장으로 개정·확장·통합한 법이다.

<표 VI-5> 국가사회주의자법에 의한 오스트리아 나치 분류(1948)

| 오스트리아 인구 | 나치신원등록자 | 중범 | 경범 |
|-------------|-----------|--------|---------|
| 약 6,800,000 | 약 540,000 | 43,468 | 487,067 |

자료: P.A. Huhler und H.F. Zacher, Ein Jahrhundert Sozialversicherung, Schriftenreihe fuer Interantionales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and 6. 1981.

이 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1장은 제3차 나치금지법 개정법이며 "1947년의 나치금지법"으로 불린다. 이 법에서는 오스트리아의 합병이전부터 해방될 때까지 나치조직에 가입했던 자의 신원등록을 받아 이들을 중범과 경범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해야 할 속죄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92년 개정법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VI-6> 나치협력 죄목으로 해고된 오스트리아인 나치의 통계(1946. 7월 기준)

| 공직 및 경제분야 간부직 | 사기업 | 공공근무직 | 기타 | 총계 |
|---------------|--------|--------|----|-----------|
| 960 | 36,000 | 70,818 | - | 약 270,000 |

자료: P.A. Huhler und H.F. Zacher, Ein Jahrhundert Sozialversicherung, Schriftenreihe Fuer Interantionales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and 6. 198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7),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 청산법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속죄 결과는 기본적으로 직업금지, 재정적 속죄조치, 정치적인 권리·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 금고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그 결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왜냐하면 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영원히 공적인 생활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범들은 3년(1948년), 중범들은 5년(1950년)이 지나면 이러한 조치는 종료되었다. 제재기간과는 별도로 중범들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조치들은 공직에서 연금도 없이 해고하는 것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단지 중범들에 대해서만 정말 생활을 위협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범들 그룹에 속한 것은 마치 사면이나 다름없었다.

나) 법의 배경

이전의 ‘단순한’ 나치당의 당원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정당의 경쟁이 양대 정당인 오스트리아 사민당과 오스트리아 국민당 사이에서 이미 1946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매우 큰 잠재적 유권자를 의미하였다. 출발점은 이른바 단순가담자(Mitläufer)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즉 국가사회주의정당의 당원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적극적으로 나치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던 단순가담자와 중범죄자의 구분 문제였다. 사민당, 공산당과 같은 좌익 정당들은 원래 모든 나치당원들에 대한 일종의 격리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공적 생활로부터 그들을 배제하는 내용에는 특히 선거권의 박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국민당과 같은 보수정당은 일찍부터 적극적인 국가사회주의자들과 단순 동조자를 구분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초점은 처음부터 “위법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탈나치화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 핵심쟁점이었다. 나치금지법 공포 이후에 사람들은 곧 그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946년 3월 말에 세 정당은 탈나치화 과정의 개혁에 합의하였다. 이 개혁은 특히 나치전력자 중 중범(Belasteten)과 경범(Minderbelasteten)을 구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을 반역자 또는 나치정권에의 협력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나머지 다른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반파시스트이며 나치 정권에 대한 반대자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사상적, 국가적, 인종적으로 나치정권과 관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나치정권과의 차별화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새로이 수립된 오스트리아 공화국을 민주적으로 공고히 수립된 국가로 묘사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합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치의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할 수 있었다. 독오합병 이후에 가입한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중범 이외에는 직업상의 압력, 나치 선전을 통한 유혹 등을 이유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다) 속죄조치

1947년 2월 6일의 국가사회주의자법과 함께 ‘위법성’의 원칙이 바뀌었다. 더 이상 가입시기가 문제되지 않았고, 나치정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범과 경범이 구분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법에 의해 중범의 비율은 전체 등록자의 18%에서 8%로 감소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속죄조치’가 제공되었다. 그 속죄조치에는 정치적 권리의 상실, 해고, 직업금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벌금형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나치는 정당, 공직, 군대, 산업계를 나치의 지배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으로 생각하고 오스트리아를 장악하기 위해 공직자 및 의사, 법률가와 같은 개별적인 직업영역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따라서 속죄조치도 해당분야에서 이루어졌다.

① 공직에서의 탈나치화

통치가 작동되는 것은 공직자들에 의해 보증된다. 나치를 청산하는 데 있어 공무원조직이 특별한 목표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탈나치화 작업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나치정권에 형식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직무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나치 체제에 대한 정치적인 태도표명이 중요했다. 이 집단이 국가유지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히 공직자들 사이에서 탈나치화는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만 했다. 1945년의 나치금지법에 따라 공무원은 나치당에 대한 자신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었다. 위법자들은 이 법에 의거하여 연금 없이 해고되었고,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검증받아야 했다. 1918년에서 1938년 사이의 제1공화국에서부터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모든 공직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치정권시절에 취직된 자는 마치 전혀 공직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루어졌다. 1946년 4월까지 약 5만 3천명의 공직자가 행정적 탈나치화를 통하여 해고되었다. 모든 공공영역에서 명백한 국가사회주의자들을 해고하거나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47년의 국가사회주의법에 따라 경범들도 지도적인 위치에서 물러났으며, 중요하지 않은 낮은 직급의 활동에만 투입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승진도 허용되지 않았다.

② 특정 직업의 금지

특정 직업에 대한 해고와 금지를 통하여 국가사회주의의 엘리트들은 모든 권력과 모든 영향력을 박탈당하였다. 해고된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려졌다. 그러므로 일 자리의 박탈은 이전의 국가사회주의자들의 권력 박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징벌이란 목적에서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탈나치화 작업과 관련하여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대략 7만 명이 기업에서 해고되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업, 또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직업들은 특히 국가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탈나치화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이 분야들은 해고와 직업금지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분야이기도 했다. 그래서 국가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업금지와 해고조치는 주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한’ 직업에 대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사법,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언론·문화 영역, 자유업 및 경제계의 지도적인 지위 등에서 국가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해고와 직업금지가 이루어졌다.

1945년의 나치금지법은 이미 특정직업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1947년 국가사회주의자법이 비로소 그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직업의 유지 혹은 금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자체 위원회에 있었고, 위원회는 개인적인 검증작업을 통하여 원칙적인 규정의 예외를 허용할 수도 있었다. 이 위원회는 연방장관의 대리인 1인, 업종대표자 1인, 공인된 세 정당의 대리인 각 1인으로 구성되었다. 경범들은 이 위원회를 통하여 국가나 기업에서 금지된 직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었다.

③ 경제계에서의 탈나치화

1945년의 나치금지법은 이미 경제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법안에서 특히 표적이 된 위법자, 공직자, 1938년 이전부터 나치당을 지원하였던 자들은 경제계에서 어떠한 지도적인 위치에서도 활동할 수 없으며, 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들은 또한 신뢰와 무결점을 전제로 하는 기업체의 운영 권리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다. 1945년 9월 12일의 ‘경제계 숙정법’은 모든 중죄를 진

노동자들을 즉시 해고할 것과 가족들에 대하여도 연금청구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였다. 최의 등급은 더 이상 경영자조직과 노동자조직, 그리고 정당의 참여 하에 열리는 위원회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등록기관의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④ 재정적인 속죄조치

속죄부담금은 나치정권이 남긴 손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국가에 지급하는 개별적인 배상액이었다. 그것은 경범들에게는 소득세의 10%를 가중하고, 중범들은 20%를 가중하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제적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그리고 한 번 내는 추가 재산세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모든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사회주의자들에게 부과되었다. 속죄부담금이 부과된 자들은 부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자신의 재산을 지출하지도,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세무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였는데, 속죄부담금이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가 확보되었을 때에만 승인이 이루어졌다. 국가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물질적으로 가장 가혹한 속죄조치는 주택, 가구 및 작은 소품의 상실이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물건의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4)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법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1948. 4. 21)

1948년 초에 오스트리아 의회는 연합군의 동의하에 경범들에 대한 일반사면을 결의하였다. 경범이 약 48만 명에 달하자 그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오스트리아 사회를 지배했고 1948년에 접어들면서 냉전시대가 격화되자 반파시즘·나치즘과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오히려 약화되고 대신에 공산주의와의 대결이 오스트리아 사회의 주된 논쟁거리로 정착했다. 이런 경향은 과거청산 관련법령에 반영되어 나치사면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정치적인 숙정’ 조치로써 탈나치화는 종결되었다. 사면대상자는 대략 49만 명으로 등록된 국가사회주의자들 중 90% 이상이 해당되었다. 그들에 대하여는 나치금지법과 다른 특별법에서 규정된 속죄조치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때부터는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규정되지 않았다. 즉 일반사면이 있기 이전까지 실행된 속죄결과들(주택몰수, 해고, 속죄배상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55년에 비로소 국가간계약이 체결되고, 연합군(점령군)이 철수하면서 변화가 왔다. 1957년 3월 14일에 오스트리아의 국회가 일반적 나치사면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국가사회주의적 재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나치금지법 및 전범처리법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탈나치화 작업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5) 나치사면법(1957. 3. 14)

「나치-사면법」에 의해 1947년의 「국가사회주의자법」의 주요규정들이 대폭 수정 혹은 폐기되었다. 이 법은 나치신원등록 의무의 폐기, 형법규정의 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 제13조 2항은 「전범처리법」의 폐기를 명시하고 있다. 특별재판소의 폐지 이후 46명이 피소되었지만 39명만이 판결을 받았고 이중 18명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에는 아예 재판조차 중단되었다가 1998년부터 오스트리아 사법부는 다시 나치 범죄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처럼 오스트리아인들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나치전력 혐의가 있는 쿠르트 발트하임이 출마했던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선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오스트리아의 시사점

오스트리아에서의 나치과거의 극복은 우선은 나치시대의 협력자를 골라내고, 그들을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퇴출시키는 작업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중한 범죄자와 단순 가담자들을 구분하고, 단순가담자들을 용서하는 작업으로 전개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정권의 창출을 도모하고, 기존의 국가사회주의의 퇴출을 위하여 탈나치화 작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인적인 청산에 매진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을 회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차이는 연합국의 태도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연합

군은 나치전력자 중에서 단순가담자를 구분하는 데에도 반대하였을 정도로 나치전력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문제에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치하에서 일본에 협력하여 행정관으로 역할을 해왔던, 일제협력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독립운동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제협력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새로이 정권을 잡은 이승만 정부도 이런 미군의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제협력자를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반민특위를 통한 과거청산 작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반민특위는 권력층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비협조하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한국의 1948년 9월의 반민족행위특별법은 오스트리아가 가졌던 여러 가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공민권의 제한, 사형, 징역형, 재산몰수형 등의 처벌조항과 함께 처벌대상자 색출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었다. 기본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실제 그 적용에서 오스트리아는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사법적인 청산과 재산의 몰수 등 강력하게 과거청산의 노력을 기울인 반면 한국의 반민족행위특별법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여 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절 외국의 주요 선양프로그램

1. 미국 및 유럽국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멕시코전쟁, 남북전쟁, 스페인전쟁, 제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미 보훈부의 조직목표의 하나인 “역사에 기여한다.”는 바로 이들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산물이며 보훈의 상징적 언어라 할 수 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개척정신을 상징하는 프런티어정신과 통합정신을 귀중한 가치로 여겨왔고, 미국의 보훈제도는 개척 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할 수 있으며, 통합정신은 남북전쟁 후 분열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와 화합을 강조한 1865년 3월 2일 링컨

대통령의 재취임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 7. 4)과 현충일(Memorial Day ·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제대군인의 날 (Veteran's Day · 11.11)등이 대표적인 기념일로서 국가지정 공휴일(national holiday)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념시설물은 워싱턴 시내중심에 구성하고 있는 국가 상징을 나타내는 기념 공간(National Mall)과 워싱턴 기념비를 가운데 두고 사방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백악관, 제퍼슨기념과, 링컨기념관이 있다. 또한 한국전참전 기념공원, 베트남전참전 기념공원, 게티스버그 국립군사공원, 뉴욕의 ‘꺼지지 않는 불꽃’, 뉴욕항의 전쟁기념관,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전참전 기념탑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의 활동을 후원해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 전쟁영웅들의 공훈선양과 자국의 국가적 역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미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체득할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보훈부는 보훈병원의 방대한 조직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보훈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향군인회나 상이군인회 활동도 있다.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일찍이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대영제국을 건설한 자부심이 더하여 명예존중의 풍토를 심화시켰다. 명예존중의 핵심가치는 ‘정의와 자유의 신성한 대의(The Sacred Cause of Justice and the Freedom of the World)’를 위한 희생정신에 있다.

대표적인 기념일은 현충일이다. 런던 중심부의 화이트 홀(White Hall)에는 현충탑(Cenotaph)이 설치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는 전사자 현판(Plaque)과 각 군 상징물, 무명용사 및 전쟁희생자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영국은 입헌군주국가로서 학교교육에 있어서 왕에 대한 충성과 전쟁승리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훈단체도 있다.

캐나다는 선양정책의 목표를 자유 수호를 위한 시민과 희생을 기리고 국가형성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의식 있는 사회건설에 두고 있다. 선양프로그램은 참전 군인들의 봉사와 희생과 공헌이 캐나다의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이해하

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Canadian Remembers Program’이라 명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념일은 현충일(Remembrance Day · 11.11)이며, 수도 오타와는 미국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캐나다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념 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오타와 중심부 연맹광장에는 전쟁기념조형물, 무명용사묘, 전쟁박물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당 안에는 평화의 탑의 기념실, 간호봉사대원기념관, 경찰관·평화유지군기념비 등이 있다. 이밖에 캐나다 국내에는 뉴펀드랜드전쟁기념관, 할리팩스기념관, 빅토리아기념관 등이 있다. 또한 캐나다의 교육 및 추모활동은 체계적이며 매우 활발하다. 전사자에 대한 존경과 추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사당 본관 정면에 있는 ‘평화의 탑’ 건물 출입구에 ‘회상의 책’으로 명명된 캐나다가 참전한 각 전쟁별 전사자명부를 전시하고 그들의 공훈을 새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 프로그램과 해외 전적지 순례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추모행사와 전적지 순례와 더불어 외국의 전적지를 순례하며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상전쟁기념관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민정신은 강한 동료애와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메이트십(mateship)이다. 대표적인 기념일로는 안작데이(Anzac Day · 4.25)와 현충일(Remembrance Day 11.11)이 있다. 그리고 캔버라의 전쟁기념관과 시드니의 안작기념관이 대표적인 기념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훈부는 전쟁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참전용사의 증언을 녹취하여 교육자료로 편찬, 배포하고 있다. 호주는 지역단위의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LCAF)을 조성하여 학교, 의회, 지역공동체 등에서 공훈선양, 자료발간, 추모행사, 기념시설물 건립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전국 각지에 설치된 재향군인클럽(RSC · 250개)은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보훈담당장관 산하의 국립보훈원(ONAC)이 채택하고 있는 모토인 ‘기억과 연대(Memory and Solicarity)’는 프랑스가 지향하고 있는 선양정책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혁명기념일(7.14)과 제 2차대전 승전기념일(5.8) 및 제 1차 대전 종전기념일(11.11)인 현충인등을 3대 국경일로 정하고 있으며, 대표 시설물로는 종합기념시설인 앵발리드가 운영되고 있으며, 캉에 설치된 평화기념관, 무명용사묘지인 파리의 팡테온 등이 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명에와 유대인 학살 등의 오명으로 인하여 이웃국가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기념물이나 선양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국민슬픔의 날(11월 셋째 일요일)과 히틀러암살기도사건 희생자 추모 행사 등이 있다. 독일은 전쟁기념관이나 국립묘지도 두지 않고 있으며, 군인묘지는 주정부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다. 국가적 기념물로서는 ‘신 파수대’가 있고 각 지역에는 전사자 명단을 각인한 추모비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에 있어서는 특별히 애국심을 강조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역사적 사실 위주의 교육으로서 독일 발전에 기여한 부국강병의 인물의 공헌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한반도 주변국가들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영토가 방대하고 여러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어 이민족의 지배를 받거나 수차례 전쟁을 겪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은 조국수호전쟁으로 불릴 만큼 거의 모든 시민들이 참가하여 2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참혹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핵심가치는 시민항전정신이며, 대표적인 기념일로는 제 2차 세계대전 대독승전기념일(5.9)이 있고 이밖에 러시아군 창설기념일 및 국경수비대의 날 등 군관련 행사가 있다. 또한 전적지마다 충혼탑이나 기념비 또는 전시관이 산재해 있지만 대표적인 시설물로는 모스크바의 전승기념관과 파노라마관이 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크렘린광장 근처에 무명용사묘지가 있다. 러시아의 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주 1회 역사와 문화교육을 통하여 정체성을 갖도록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며, 특수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청년조직의 극기 훈련과정이 있다.

중국은 혁명열사 포양조례(1980. 6. 4 국무원 공포)에서 자기희생정신과 조국보위, 조국건설, 분투정신 교육이라는 선양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기념일로는 3대 국경일의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기념일(10. 1), 중국인민해방군 건국기념일(8.1), 항일전쟁기념일, 항일전쟁승리기념일 등이 있다. 또한 중요 기념시설물로는 혁명역사박물관 및 인민영웅기념비(북경), 진기노예열사능원(하북성), 팔로군서안판사처기념관 및 정강산혁명유적지(강서성), 여순기념관, 9·18기념관(심양),

항일영렬기념비(요동)등이 있으며 각급정부에서 보호되는 기념물은 총 7천여개소에 달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혁명정신을 고취하고 해외 진출이나 항일 투쟁과 한국전쟁 관련 인물들을 부각하고 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론을 명분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전범국가가 되었지만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침략행위를 은폐하고 또한 해외진출로 호도하며 전몰자 추도식, 전몰자 서훈, 호국신사, 전몰자묘원, 위령비설치 등의 추모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는 전범 국가임을 의식하여 제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인물이나 전사자는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전쟁의 고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신사 참배와 해외 유골수집 및 봉환 그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전몰자 유족에 대하여 ‘명예의 집’, ‘9단의 어머니’, ‘정국의 유아’등으로 부름으로써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3. 특수한 안보환경의 국가들

이스라엘에서의 보훈과 관련된 국가적 기억으로서의 상징적 언어는 “더 이상 마사다의 비극은 없다(No more Massada).”라 할 수 있다. 보훈정책의 직접적인 모토는 “국가는 장병을 군대에 보내면 책임을 져야 한다”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기념일은 대부분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독립기념일, 현충일, 예루살렘 해방기념일(6월 전쟁 동예루살렘 탈환), 푸림절(페르시아 전쟁), 유월절(이집트 탈출), 티브 브아브(예루살렘 성전 파괴)등이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념시설물은 통곡의 벽과 마사다 요새, 600만 유대인피해자 추모관 등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마사마 유적지 답사과정과 600만 유대인피해자 추모관을 통한 순례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과정 가드나와 나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의 국가적 아픔을 기억하고 국민을 분기하는 상징적 언어는 “피수출국의 오명을 씻자.”는 것이며, 또 하나의 모토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구하자.”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스위스는 연방결성일(8.1)을 최고의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대표적 기념물은 용병의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상’이다. 교육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의 현장이나 기념물을 순회하면서

현장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빈사의 사자상’은 특별한 산업이 없이 용병으로 생활하던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민족재기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청소년 선서의 장소가 되고 있다.

<표 VI-7> 주요국의 공훈선양정책

| 국가 | 핵심가치 | 대표적 선양프로그램 | | |
|------|----------------------------------------------|-------------------------|-------------------------------------------|-------------------------------------------|
| | | 기념행사 | 기념시설물 | 교육·홍보·기타 |
| 미국 | 개척/통합정신 링컨대통령 재취임 연설 | 독립기념일 현충일 제대군인의 날 | National Mall 국립묘지 국립군사공원 | 보훈병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National Salute) |
| 영국 | 정의와 자유의 대의를 위한 희생과 명예 | 현충일 | Cenotaph 무명용사묘지 전쟁기념관 | 기념과 현장교육 양귀비꽃 추모운동 RBL활동 |
| 캐나다 | 희생과 봉사에 대한 존경 -Canadian Remembers Program | 현충일 | 전쟁박물관 전쟁기념조형물 무명용사묘지 뉴펀들랜드전쟁 기념관 | 희생의 책 해외전적지 순례 지역사회프로그램 RCL 연수교육 |
| 호주 | Mateship - Saluting Their Service | Anzac Day 현충일 | 전쟁기념관 안작기념관 전쟁묘지 | 교육자료 편찬 LCAF기념사업 RSC활동 |
| 프랑스 | 기억과 연대 | 현충일 제 2차대전 승전일 | 앵발리드기념시설 평화기념관 무명용사묘지(팡테온) | 사회공동가치 재교육 프로그램 기념관 현장교육 |
| 러시아 | 시민항전정신 | 대독승전 기념일 | 전승기념관 파노라마관 무명용사묘지 국립묘지 | 역사, 문학교육, 청년조직 훈련 |
| 독일 | 사회적책임 | 국민슬픔의 날 | Neue Wache | - |
| 일본 | 희생자에 대한 감사와 추모 | 전몰자 추도일 | 전몰자묘원 호국신사 야스쿠니신사 | 전몰자 서훈 유골수집, 참배 |
| 중국 | 자기희생정신, 조국보위 · 건설 분투정신 | 건국기념일 건군기념일 | 혁명역사박물관 인민영웅기념비 진기노예열사능원 | 영예칭호 수여 혁명열사록 편찬 |
| 이스라엘 | No more Massada | 독립기념일 현충일 | 통곡의 벽 마사다 유적 600만유대인학살추모관 | 유적지 답사 청년조직 훈련 |
| 스위스 | 고난의 역사 기억 | 연방결성일 | 빈사의 사자상 | 현장교육 |

자료: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제3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역사의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친일파의 기득권 유지와 부적절한 재산 축적, 각계각층인사의 친일논란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제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재산은 환수되지 않고 후손에게 상속되어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처럼 우리가 일제 지배 하에서의 친일협력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단행하고 이들에 대한 공직의 추방, 재산의 환수, 정신적 자주성의 확립을 이루었다면 지금껏 제기되어 온 여러 논란은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 국가의 과거 청산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와의 대조를 통하여 역사적 청산의 비뚤어진 과정과 원인을 되짚어볼 중요한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다른 측면에서도 적용되는 데, 친일협력자에게서 환수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리 방안에 있어서의 논의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해방 초기에 이러한 재산 환수가 이루어진 만큼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단순히 국고로 환수하여 국고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된 경우가 있는 가하면, 반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기념사업이나 직접적인 관련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역사적 그리고 시기적 차이를 고려할 때 선진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우리 현실에 접목하는 것은 쉽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과 달리 항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해방과 관련하여 우리의 귀감이 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기념사업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보훈에 이르기 까지 국고에 의하여 거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진국이 행한 국고환수에 의한 기금이나 재원을 통한 사업을 모두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치전력자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재건과 사회적 통합의 노력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사회가 정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하여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

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약식으로 행해지던 거리의 재판을 저지하는 한편 사법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나치시대의 협력자를 전범, 중범, 경범으로 구분하여 그들을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퇴출시키는 작업과 함께 단순가담자들을 용서하는 작업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즉 프랑스는 친나치에 대해 경중을 막론하고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엄격성과 포괄성을 확실하게 하였다.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중범적 성격의 재산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를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오스트리아의 경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부에서는 그로 인한 재산 축적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의 합병과 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정권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건을 위해 탈나치화 작업이 필수적이었으며, 적어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나치 전력자는 모두 퇴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다만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 가족들이 차지하는 선거권을 무시할 수 없었고, 국가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조치에 시간적인 제한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과 함께 사면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상황과 차이가 발생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차이점과 달리 두 국가의 공통점은 - 이는 다른 국가들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 이러한 친나치와 관련된 조치를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정권의 창출과 탈나치화에 대한 작업을 일정 수준 이상 완성하였다는 점이다. 즉, 나치청산이 늦어질수록 전쟁의 후유증으로 사회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극복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국가의 공통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다른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서 연합군은 나치전력자 중에서 단순가담자를 구분하는 데에도 반대하였을 정도로 나치전력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문제에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다른 중요한 변수는 점령국의 입장이다. 당시 미군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치하에서 일본에 협력하여 행정관으로 역할을 해왔던, 일제협력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독립운동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제협력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이 정권을 잡은 이승만 정부도 이런 미군의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제협력자를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반민특위를 통한 과거청산 작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일제협력자들에게 개인적인 반성과 새 출발의 기회만을 부여한 채, 반민특위는 권력층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비협조하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나치몰락 후에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였던 오스트리아에 비하여,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에 의한 신탁통치를 거쳐야 하였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이 가진 현실적 환경의 한계에 대한 문제였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선진국의 태도에서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가별 친나치와 반나치 경력자에 대한 국가적 정책사업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에서는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판단되기도 하고 또는 일부 일정한 집단의 지속적 사업에 속한 것이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리기는 하지만 근거의 문제 보다는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적 보훈사업이라는 정책적 테두리로 인하여 확대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친일청산에만 주력한 경향에서 반일에 따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방면에서 나타난 이들의 장기적인 노력과의 연계를 통한 고도의 문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산 환수의 의미는 선진국에 있어서 우리

와 처벌적 성격을 갖는 것이 신속한 처리를 한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친나치 경력자를 아직도 색출하고 이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지속적 움직임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 비록 이러한 상황과는 달라도 지속적 친일 경력자에 대한 색출과 재산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친나치 경력자에 대한 처벌과 재산 몰수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의 경향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은 친나치 경력자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나 만나치 운동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휴머니즘에 벗어난 나치세력과 다양한 형태의 인간적 반응을 통한 만나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내는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기존의 전쟁의 잔재 청산적 단순한 정책적 판단에서 벗어나 깊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찰을 통한 고차원적인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승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적 노력은 다시 영화 산업과 연결한 결과로서 <선들러리스트 쇼크>등의 문화적 충격으로 전 세계에 인류에게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혹성과 조국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적 가치를 연결하는 성공적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국민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최근의 예술적 접근 정책은 단순한 정책에 의한 국민 계몽을 넘어서 예술로의 승화를 통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제 사회로부터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1948년 9월의 반민족행위특별법은 시민권의 제한, 사형, 징역형, 재산몰수형 등의 처벌조항과 함께 처벌대상자 색출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로 시작되었다. 기본적인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모든 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겠다는 근본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제 협력자들에 대하여 오스트리아와 같은 등록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경찰,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협력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비협조로 인하여 그 활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제를 아직도 안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몰수된 재원에 대한 활용은 기존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하는 한편,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가진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재산을 활용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보는 단순성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친일 청산의 계기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제1 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개요

가. 설치목적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968년도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이 설치되었다.

나. 법률연혁

1) 법률제정

1967년 3월 30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돕고 이분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드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법률 제1945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으로 1968년도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운용에서 얻은 수익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장학사업과 독립기념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기금의 심의의결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국가보훈처에 두고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2) 법률개정

1973년 3월 10일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당시 군사원호보상법에 규정된 대상의 범위보다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함과 아울러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처로 하던 것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호주상속자인 자녀 및 손자녀, 출가한 자를 제외한 자녀와 부모로 하였으며, 기존의 기금 사업 외에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주택 및 농업자금의 대부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 12월 19일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을 「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적용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와 그 유족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1982년 8월 2일 군사원호보상법 등 7개 원호관계 법률을 흡수·통합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제명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바꾸고 관계 조문을 정리하였다.

3) 기금법 폐지 및 기금규정 법률전환

1994년 12월 31일 기금의 설치,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4856호)이 제정됨에 따라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이 폐지되고,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2005년 12월 29일 정부의 기금정비계획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20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의 결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7년 1월부터 민간기금(광복회)으로 전환(법률 제7792호)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769호)이 제정되면서 국가귀속재산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2006년 12월 30일 동 귀속재산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독립 유공자 예우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정부기금(국가보훈처)으로 환원(법률 제8161호, 8162호)하도

록 하였다.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법률 제8162호)되었으며 2007년 04월 1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 개시되었다. 또한 2008년 3월 28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개정하여 귀속재산이 순애기금 재원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9년 2월 6일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보훈기금법」 개정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운용심의회 및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 심의회”로 통합되었다.

2. 순애기금의 조성

가. 순애기금조성 재원 및 현황

1) 순애기금의 재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아래와 같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 V-1> 순애기금재원

| | |
|-----------------|-------------------------------------------------------------------------------------------------------------------------------------------------------------------------------------------|
| 순애 기금의 재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3. 정부의 출연금 4.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

2) 순애기금조성 현황

기금의 조성액은 대일청구권 자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전입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2008년 말 전입재산 공시가 기준) 및 그동안 기금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성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된 이익잉여금을 합하여 2009년 말 현재 총 627억 21백만 원이 될 예정이다.

<표 V-2> 순애기금조성 현황

(백만원)

| 구분 | 자산 | | 합계 | 자본 | |
|----|-----------|----------|--------|-------|--------|
| | 유동자산(예탁금) | 고정자산(토지) | | 자본금 | 이익잉여금 |
| 금액 | 9,176 | 53,545 | 62,721 | 6,500 | 56,221 |

주: 자본금은 대일청구권자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전입금을 합한 금액이며, 이익잉여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재산과 기금이 자수입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나. 대일청구권 자금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의 전제로 체결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조성된 대일청구권자금 관리 특별회계의 원화계정에서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전입된 기금 20억 원을 재원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설치되었다.

<표 V-3> 연도별 대일청구권 자금 전입현황

(백만원)

| 연도 | '68 | '69 | '70 | '71 | '73 | '74 | 계 |
|----|-----|-----|-----|-----|-----|-----|-------|
| 금액 | 300 | 300 | 200 | 200 | 560 | 440 | 2,000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입금

1993년 11월 제165회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여 건국훈장 생존애국지사에 대해 최소한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에게 특별 예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1995년도에 15억 원, 1996년도에 30억 원을 합하여 총 45억 원이 전입되었다.

또한 특별예우금, 제수비 등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소요액 중 일정부분을 세출예산에서 전입 받고 있으며, 연도별 전입액은 다음과 같다.

<표 V-4>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백만원)

| 연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
| 금액 | 270 | - | 1,266 | 1,266 | 1,466 | 1,800 | 1,800 | 5,400 | 5,400 | 5,400 | 5,300 | 5,300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라.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재산의 전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2009년 말까지 기금에 전입되어 재원으로 조성한 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도별 전입현황은 <표 V-5>와 같다.

<표 V-5> 친일귀속재산 전입현황

(‘09. 12월 현재)

| 연도별 | 필지 | 면적(㎡) | 공시가격(백만원) |
|------|-----|-----------|-----------|
| 2007 | 207 | 1,242,897 | 13,054 |
| 2008 | 239 | 3,483,654 | 29,157 |
| 2009 | 435 | 3,582,879 | 34,136 |
| 합 계 | 881 | 8,309,430 | 76,347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3. 주요사업내용

가. 순애기금사업의 근거

순애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과 사료발굴 및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V-6> 순애기금사업 유형

| | |
|----------|-----------------------------------------------------------------------------------------------------------------------------------------------------------------------------------------------------------|
| 사업 유형 |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나. 주요 기금사업

순애기금의 주요사업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사업,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이장 지원 사업,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등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지원 사

업이며, 2009년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의 <표 V-7>와 같다.

<표 V-7> 주요사업 내용

| 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업 | 특별예우금 | 생존 애국지사 | 매월 예우금 60~100만원 지급 |
| | 독립유공자 제수비 | 독립유공자 유족 | 연1회 25만원 (기일이 속하는 달에 지급) |
| | 손자녀 가계지원비 | 독립유공자 손자녀 | 매월 35만원 지급 |
| | 사망조위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사망시 20~100만원 지급 |
| | 생계부조금 | 단순 수급권자 | 1회당 78~90천원 연2회 지급 |
| 독립유공자 묘소관리사업 | 독립정신계승활동 지원 | 광복회 등 단체 | 연간 8600만원 |
| | 지방 산재묘소 단장 | 독립유공자 유족 | 기당 150만원 |
| | 국외선열 묘소 현지단장 | 독립유공자 유족 | 기당 200만원 |
| | 국립묘지 이장 | 독립유공자 유족 | 기당 30만원 |
| | 국외선열 유해봉환 유족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 | 위당 200만원 |
|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지원사업 | 안장식 행사비 지원 | 광복회 | 연간 400만원 |
| | 독립유공자공훈록 발간 | 자체 제작 | 연간 2580만원 |
| | 월간 순국지 구입 | 순국선열유족회 | 연간 1440만원 |
| | 광복회보지 등 발간지원 | 광복회 등 단체 | 연간 2000만원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

1) 사업목적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공훈에 상응하는 특별예우금 등을 지급하여 애국지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993년 11월 제165회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0억원을 순애기금에 출연하여 생존 애국지사에 대해 최소한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전입금 45억원이 전입되어 이를 재원으로 생존 애국지사들의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1995년부터 특별예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되었다.

생존 애국지사에게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1978년부터 포상훈격에 따라 3.1절, 광복절, 보훈의 달, 추석, 연말, 생신일 등 연간 2회 내지 7회까지 정기적

으로 위문사업을 전개하여 매회 5만원 내지 1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연금이 비교적 소액인 당시에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던 위문제도가 특별예우금 사업으로 대체되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연도별 지급액은 <표 V-8>과 같다.

<표 V-8> 연도별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단위: 천원)

| 연도 | 훈장 | | | 건국포장 | 대통령 표창 |
|------|-------|-----|-----|------|--------|
| | 1-3등급 | 4등급 | 5등급 | | |
| 1995 | 300 | 150 | 100 | - | - |
| 1996 | 500 | 150 | 100 | - | - |
| 1997 | 500 | 150 | 100 | - | - |
| 1998 | 500 | 150 | 100 | - | - |
| 1999 | 500 | 150 | 100 | - | - |
| 2000 | 600 | 400 | 300 | - | - |
| 2001 | 600 | 400 | 300 | - | - |
| 2002 | 600 | 400 | 300 | - | - |
| 2003 | 600 | 400 | 300 | - | - |
| 2004 | 600 | 400 | 300 | 200 | 200 |
| 2005 | 1,000 | 800 | 700 | 600 | 600 |
| 2006 | 1,000 | 800 | 700 | 600 | 600 |
| 2007 | 1,000 | 800 | 700 | 600 | 600 |
| 2008 | 1,000 | 800 | 700 | 600 | 600 |
| 2009 | 1,000 | 800 | 700 | 600 | 600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3) 독립유공자 제수비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기일에 그 유족에게 매년 1회에 한하여 제수비를 지급하였다. 제수비 지급액은 1988년 1만원을 시작으로 1989년에 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1998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하여 2009년 현재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표 V-9> 연도별 제수비 지급액

(천원)

| 연도 | '88 | '89-'91 | '92-'94 | '95 | '96-'97 | '98 | '99 | '00 | '01-07 | '08-09 |
|-----|-----|---------|---------|-----|---------|-----|-----|-----|--------|--------|
| 지급액 | 10 | 20 | 30 | 40 | 80 | 100 | 110 | 150 | 200 | 250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4) 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은 1975년부터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중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훈관서장이 그 유족을 조문하여 생존지사는 대통령 명의로, 유족은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조위금을 지급하고 위로하였다.

조위금 지급액은 1975년 최초 지급 당시 상훈법에 따라 건국훈장수훈자(훈장 1~3등급)와 대통령표창자(훈장 5등급)로 구분하고 각각 5만원과 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78년도에는 지급대상을 훈장5등급(당시 표창자)과 훈장 유족도 포함하였고, 2001년에는 현재와 같이 건국포장자와 대통령 표창자 및 그 유족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하였다. 연도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표 V-10>와 같다.

<표 V-10> 연도별 사망조위금 지급액

(단위: 천원)

| 구분 | 훈장 | | | 건국포장 | 대통령 표창 | 훈장유족 | 포장·표창 유족 |
|---------|-------|-----|-----|------|-----------|------|-------------|
| | 1~3등급 | 4등급 | 5등급 | | | | |
| '75 | 50 | - | 20 | - | - | - | - |
| '76~'77 | 50 | - | 30 | - | - | - | - |
| '78~'79 | 150 | 100 | 50 | - | - | 50 | - |
| '80 | 150 | 100 | 100 | - | - | 50 | - |
| '81~'84 | 500 | 300 | 300 | - | - | 300 | - |
| '85~'00 | 1,000 | 500 | 500 | - | - | 300 | - |
| '01~'09 | 1,000 | 500 | 500 | 300 | 300 | 300 | 200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5) 생계부조금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968년부터 건국훈장 1~3등급을 서훈받은 생존지사와 그 유족에게 세출예산에 의한 연금과 기금에 의한 생계부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969년에는 대통령표창자(현 건국훈장 5등급)까지 생계부조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78년부터는 건국포장(현 건국훈장 4등급)을 서훈 받은 생존지사와 유족에게 생계부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0년 12월 22일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개정으로 1981년부터는 대통령표창자까지 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생계부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만 연금수급권이 없고 법에 의한 유가족 등록대상이 아닌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자부, 손부 등 단순수급권자에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및 독립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의 부칙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 받던 생계부조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2009년 현재 생계부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1~3등급 훈장유족 18명에 연간 180천원, 4등급 유족 4명에 연간 168천원, 5등급 유족 3명에 연간 15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표 V-11> 연간 생계부조금 지급액

(단위: 천원)

| 구분 | | '68 ~'70 | '71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이후 |
|---------------|----|-------------|-------------|-----|-----|-----|-----|-----|-----|-----|-----|-----|-----------|
| 훈장 (1~3등급) | 본인 | 144 | 156 | 240 | 336 | 437 | 437 | 420 | 420 | 484 | 516 | 360 | - |
| | 유족 | 60 | 132 | 144 | 187 | 205 | 205 | 156 | 156 | 180 | 216 | 180 | 180 |
| 포장 (4등급) | 본인 | | | | | | | 180 | 180 | 207 | 288 | 240 | - |
| | 유족 | | | | | | | 120 | 120 | 138 | 204 | 168 | 168 |
| 표창 (5등급) | 본인 | 96 | 108 | 120 | 144 | 158 | 194 | - | 156 | 180 | 240 | 192 | - |
| | 유족 | 72 | 84 | 96 | 115 | 126 | 151 | - | 120 | 138 | 192 | 156 | 156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6) 독립운동 계승활동 등 기념사업

1968년부터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독립운동단체의 기념사업 및 행사지원과 조형물, 사적지 기념탑 건립지원, 3·1절 광복절 계기 내고장 독립유공자 공훈선양, 전국 중·고생 독립정신 글짓기 대회 및 학술회의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의 사업들이 세출예산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순애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세출예산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거나 세출예산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광복회를 통한 기념행사 후원과 생존 애국지사의 초청 강연회이다. 애국지사 초청 강연회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속성장의 그늘에서 심화된 윤리적 타락과 인간성 상실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핵심 사업으로 보인다.

한편 생존 애국지사는 고 연령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생존자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어 초청 강연회 사업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이 요구된다.

라. 독립유공자 묘소관리사업

1) 사업목적

국내외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및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지원을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충의로운 뜻을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후세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2) 국내 산재묘소 단장 및 국립묘지 이장 지원

당초 묘소단장사업은 1968년 서울 국립현충원에 애국지사묘역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하여 1975년 무후선열제단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각종 석물공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에 산재되어 비석·상석이 없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단장해 드리는 한편 무후선열과 묘소관리가 어려워 국립묘지로 이장을 희망하는 묘소에 대하여는 이장지원비를 지급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후예우를 다하고 그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사업이다. 2009년 현재 단장 지원액은 1기당 150만원이며, 이장 지원액은 1기당 30만원이나 임정묘역 이장 지원액은 1기당 100만이고, 단장 및 이장지원은 기수는 <표V-11>과 같다.

<표 V-12> 국내 산재묘소 단장 및 국립묘지 이장 현황

(단위: 기수)

| 연도 | 2000년 이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계 |
|----|-------------|-----|-----|-----|-----|-----|-----|-----|-----|-----|-------|
| 단장 | 2,044 | 21 | 17 | 17 | 24 | 26 | 36 | 41 | 58 | 56 | 2,395 |
| 이장 | 1,044 | 70 | 65 | 65 | 61 | 74 | 190 | 247 | 244 | 187 | 2,247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3)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및 유해봉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 조국광복 후에도 한국까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여 국립묘지에 유해를 마련해 드리고, 현지에 유족이 있고 묘소가 잘 정비되었거나 현지에서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묘소는 현지 단장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5년부터 중국 용정 3·13반일의사능 13기와 카자흐스탄 꼬질 오르다 시에 소재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 단장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7기에 대하여 단장사업을 시행하였다. 대종교 총본사 및 연세대 동창회와 같은 민

간단체에서는 중국 길림성 화룡현과 용정시에 있는 대종교 3종사 묘소 및 운동주 묘소 4기에 대해 사업 시기는 잘 모르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묘소단장을 한 바 있다.

국외안장선열의 유해봉환은 1946년 민간에서 봉환위원회(위원장 박열)를 구성하여 1963년까지 윤봉길 의사 등 6위를 국내에 봉환사업을 추진하였고 1975년부터 1992년까지 장인환 의사 등 17위의 봉환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외안장 선열에 대한 묘소조사를 실시하고 1993년부터 본격적인 유해봉환사업을 실시하여 이미 봉환한 선열을 포함하여 2009년 현재까지 총 119위를 국내에 봉환하게 되었다. 처음 봉환한 20위의 소요경비는 순애기금에서 충당하였으나 현재 유해봉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순애기금에서는 그 유족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광복회에 일정 부분의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마.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지원

1) 사업목적

독립운동사와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및 민간과 전문연구자의 독립운동관련 문헌을 발간할 때 문헌발간비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독립운동사 정립과 공훈선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 독립운동사 및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등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빛나는 항일독립투쟁사를 책자로 발간하여 국내외에 보급하고 이를 후세에 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위대함과 애국선현의 큰 뜻을 기리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1970년 12월부터 1978년까지 독립운동사 자료집 17권 및 독립운동사 10권을 발간 완료하였으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을 수록한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2009년까지 16권을 간행하였으며 발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 광복회의 광복회보지, 순국지 발간지원을 시작으로 총 86건 4억 8천여만 원을 독립운동 관련단체와 기념사업회의 독립운동사 연구와 애국정신 계승 편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4. 기금사업 수행의 한계점

가. 사업의 다양성

그동안 순애기금은 상징성 및 역사성이 있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금사업비의 대부분을 세출예산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신규사업 개발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2장의 <표 II-17> 및 <표 II-18>과 본장에서 제시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예우지원 정책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데, 특히 애국지사본인을 위한 특별예우금지금 지원과 유족들을 위한 가계비 및 제수비 지원 등은 독립유공자 예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등의 욕구해결을 위해 순애기금에서 관례적으로 지출해왔기 때문이다.

나. 예우지원의 형평성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우지원에 대한 후손들간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가계비지원은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녀의 자녀 1인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손자녀가 아니라 손자녀 1인에 국한되어 예우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손자녀나 4대, 5대 후손들의 경우에는 국가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제수비의 경우, 현행 제수비 지급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에게 연 25만원씩 3대손인 손자녀까지 지급된다. 따라서 4대, 5대 후손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다. 재원의 한계

최근 순애기금 사업사업수행의 어려움으로 일반회계예산에서 매년 50억원 내외의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규모는 약 1,000억원의 기금에 대한 연 5%정도의 이식수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제도 하에서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50억원 내외의 전입이 항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우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수준을 늘리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 예산이 요구된다. 특히 적용대상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대(generation)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효과는 막대하다. 왜냐하면 한번 지원된 예우금은 모든 세대가 사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2절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1. 광복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리과정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은 다 같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의미가 있다. 1941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국강령에서 “적에 부화한자 또는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등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부역자의 일체 소유자 본 및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광복 후 한국독립당과 조선인민당 및 신한민족당 등 거의 모든 정파에서 친일파의 처단과 재산몰수를 주장하였고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친일파 · 민족반역자 규정안’을 만들어 매국노 등 10개 유형의 친일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미군정 산하의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의원은 1947년 7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친일파에 대한 처벌 · 재산몰수 · 공민권 박탈 등을 규정하였으나 미군정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48년 7월 「제헌헌법」에서 특별법 제정의 근거조항(101조)을 마련하여 광복 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어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각각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총 682건이 기소되었지만 재판이 종결된 38건 가운데 체형은 12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재심청구 등으로 감형되었거나 집행이 정지되었고, 국회 프락치사건과 김구선생 암살사건 등으로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사실상 해체되었고 특별법도 1950년 2월 폐지되고 말았다.

1993년 12월 국회에 반민특위의 재구성과 사법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민족정통성회복 특별법」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지만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함으로써 입법이 좌절됐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외형적 물적 청산보다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와 역사의 복원, 특히 친일·반민족 행위자 단죄와 같은 내면적 인적 청산이 더욱 중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때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인물 가운데 친일행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친일행적이 드러난 5명의 서훈을 치탈하였다.

2003년 국회에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진통 끝에 2004년 3월 「일제 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었으나 국회의 법안 처리과정에서 제정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제기 됨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2009년 11월 30일 4년 6개월의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4부 25권 총 2만1천여 쪽에 달하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및 목적

1949년 10월 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고 공민권을 제한, 재산 몰수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급기야 1951년 2월14일, 반민법등폐지에관한법률(법률176호)이 공포,시행 되면서 반민특위 및 반민법은 폐지되었다.

그 후 1990년대 초부터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찾기와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땅까지 찾아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사회 각 영역에서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노력이 계속되어 오던 중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5년 12월29일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일본제국주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

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한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2005년 12월29일 공포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둔다)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06년 7월13일 출범했다.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②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③ 일본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④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 ⑤ 이의신청 처리, 과태료 부과·징수, 조사자료 보존·열람·등사 등이다.

국가귀속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1904)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말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114명의 토지 1,294필지 8,453,050㎡ 시가 1,611억원(공시지가 76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원회 활동도 2009년 7월 12일 4년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보훈처 소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전입되고 있다.

3. 국가귀속재산의 국가보훈처 전입

가.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전입과정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절차는 먼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재산에 대한 실지조사 및 친일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청취, 감정의회 등 조사활동을 한다. 그런 다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와 대상재산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조사개시 결정이나 조사활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귀속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귀속을 의결한 친일재산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친일재산의 지목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일 경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관리청을 지정하고 그 외 대지, 전답, 임야 등은 국가보훈처로 관리청을 지정한다.

관리청을 지정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관리청 지정서를 받아 ‘國’ 명의로 축탁등기를 함으로써 친일재산이 국가 소유로 된다.

나. 부당이득반환금 등의 처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선의의 제3자가 친일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일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친일행위자 후손이 특별법 시행 이후 그가 소유하고 있던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거래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2008년 11월 13일). 다만,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은 부당이득은 소송 등 별도의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친일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부당이득금 규모는 14건에 250여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청구소송을 통해 환수할 부당이득금의 처리에 있다. 특별법에서는 국가에 귀속시킬 친일재산은 토지만 규정하여 소관 행정청으로 관리청을 지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당이득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고에 납입은 하되 일반회계로 납입되고 순애기금으로는 납입되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금도 친일재산에 의해 생기는 것인 만큼 친일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한 특별법 제25조의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순애기금에 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마침내 국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는데 2009년 4월 1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종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률의 개정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 지면 앞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도 모두 순애기금에 전입될 전망이다.

131

다. 친일재산의 순애기금 전입현황

친일국가 귀속재산은 2007년 5월 2일 1차로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에 전입된 이래 2009년 11월 말까지 총 29차에 걸쳐 토지 881필지, 831만㎡, 공시가 763억원 상당이 기금재원으로 전입되었다. <표V-5>를 보면 2009년도에 가장 많은 재산이 전입되었으며, 전입된 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표 V-12>에서와 같이 공시지가기준 임야 6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대지 17.0%, 전답 16.5%로 나타났으며, 재산 면적의 90% 이상이 임야이다.

토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재산 면적의 59%가 소재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에도 면적의 23%가 소재하고 있다.

<표 V-13> 지목별 친일재산 전입현황

| 구 분 | 합 계 | 전답 | 대지 | 임야 | 잡종지 등 |
|------------|------------|-----------|-----------|-------------|---------|
| 필지 | 881 | 363 | 204 | 278 | 36 |
| 면적(천㎡, %) | 8,309(100) | 579(7.0) | 144(1.7) | 7,553(90.9) | 33(0.4) |
| 공시가(억원, %) | 763(100) | 126(16.5) | 130(17.0) | 498(65.3) | 9(1.2)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표 V-14> 지역별 친일재산 전입현황

| 소재지 | 필지(건수) | 면적(㎡) | 금액(천원) |
|-------|--------|-----------|------------|
| 서울특별시 | 74 | 29,611 | 6,084,086 |
| 부산광역시 | 2 | 833 | 23,102 |
| 대구광역시 | 39 | 55,756 | 1,935,412 |
| 인천광역시 | 1 | 11,188 | 192,434 |
| 광주광역시 | 3 | 8,001 | 530,443 |
| 대전광역시 | 8 | 27,238 | 1,585,375 |
| 경기도 | 293 | 4,886,838 | 50,518,793 |
| 강원도 | 29 | 42,572 | 1,140,016 |
| 충청북도 | 57 | 591,942 | 2,470,569 |
| 충청남도 | 214 | 1,928,488 | 9,472,137 |
| 전라북도 | 56 | 142,463 | 419,449 |
| 전라남도 | 56 | 517,700 | 1,488,631 |
| 경상북도 | 23 | 59,850 | 305,413 |
| 경상남도 | 26 | 6,949 | 182,322 |
| 합 계 | 881 | 8,309,430 | 76,348,182 |

주: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제3절 친일귀속재산에 의한 기금조성

1. 귀속재산전입에 따른 새로운 환경조성

친일귀속재산이 순애기금으로 전입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및 독립정신 선양정책 등의 사업수행이 점차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인 환경조성에도 불구하고 친일귀속재산의 활용에 많은 난제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예우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애기금의 지출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친일귀속재산의 속성상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친일귀속재산은

토지 등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금성의 문제로 유동성이 떨어진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에는 거래부진 등으로 현금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화가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친일귀속재산의 순애기금사업 수행의 문제점이다. 순애기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종전부터 수행해오던 사업을 위해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국민들로부터 반대여론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친일재산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만을 지원하는 모습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양 대안을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한다.

끝으로 기금운용의 중요성이다. 국가재정법 63조에는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친일귀속재산이 순애기금으로 전입되는 경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13조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사전적으로 기금의 목적을 구체화하여 별도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²⁾

2. 친일귀속재산 조성 전망

가. 친일귀속재산의 처분과 관리위탁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속적인 친일귀속재산의 기금전입으로 이를 관리하고 매각 등 처분을 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외부 부동산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리처분 위탁계약을 맺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매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토지로 전입된 친일재산을 현금화 시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기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참조하기 바람.

나. 기금조성 규모

전입된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화 하였을 경우 기금조성 규모를 추정해 보기위해, 우선 2009년도 자체 매각한 재산 12필지와 공매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한 41필지 총 5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대지와 전답의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의 1.8배, 임야는 2.0배, 잡종지 등 기타는 1.1배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인 지목별 가격대비표는 <표 V-15>와 같다.

<표 V-15> 지목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대비표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전답 | 대지 | 임야 | 잡종지 등 |
|--------------|-------|-----|-----|-----|-------|
| 필지 | 53 | 13 | 12 | 22 | 6 |
| 면적(천㎡) | 136 | 18 | 2 | 94 | 23 |
| ㎡당 공시지가 (A) | 546 | 43 | 298 | 22 | 183 |
| ㎡당 감정평가액 (B) | 1,265 | 77 | 546 | 445 | 197 |
| 배수(B/A) | - | 1.8 | 1.8 | 2.0 | 1.1 |

주: 임야는 감정평가액의 80% 적용(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하한가)

현재까지 전체 전입재산에 대하여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의 지목별 차이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순수한 친일국가귀속을 유동화하였을 경우 기금조성의 추정금액을 산출하면 1,46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V-16> 지목별 기금조성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계 | 전답 | 대지 | 임야 | 잡종지 등 |
|-----------|--------------|-----------|-----------|-----------|---------|
| 기금재원 추계금액 | 1,467(100.0) | 227(15.5) | 234(16.0) | 996(67.9) | 10(0.7) |
| 공시지가 | 763 | 126 | 130 | 498 | 9 |

다. 연도별 기금조성 규모

이와 같은 전입재산은 일시에 현금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현재 공시지가기준 약 64.5%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가능성이 순조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각가능재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재산,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은 재산, 국가귀속결정 후 1년(소송제기기간)이 경과한 재산이 해당된다. 현재 소송진행 중인 374필지 / 5,496천㎡ / 공시가 492억원은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현재까지 전입된 재산에 대하여 연도별 매각 전망을 추계해 보면 <표V-17>과 같다.

<표 V-17> 친일재산 연도별 매각 전망

(단위: 억원)

| 연도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기금조성 추계금액 | 1,467 | 14 | 295 | 650 | 280 | 228 |
| 공시지가 | 763 | 11 | 157 | 331 | 145 | 119 |
| 필지 | 881 | 27 | 261 | 219 | 145 | 229 |
| 면적(천㎡) | 8,309 | 19 | 724 | 4,326 | 1,142 | 2,098 |

주: 2009년도 추계금액은 실제 매각 수입금액임

한편,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약 258억원으로 이중 약 5억원 정도가 제소전 화해로 환수되어 국고로 납입되었다. 이미 환수된 금액은 '11년 기금 예산에 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건은 모두 소송 제기 및 예정에 있어 환수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2013년에 환수가 완료되어 기금에 전입될 것으로 추계하였다.

<표 V-18> 제3자 매각 부당이득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합계 | 제소전 반환 | 소 제기 | 소 제기 예정 |
|----|--------|--------|------|---------|
| 건수 | 14 | 4 | 2 | 8 |
| 금액 | 25,772 | 514 | 445 | 24,813 |

토지 매각액과 부당이득반환금을 합한 연도별 기금 조성 누계액은 1,725억원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은 매각 가능성과 가격을 최대한 이상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2013년 이후까지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매각액도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V-19> 연도별 전체 기금조성 전망

(단위: 억원)

| 연도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기금조성 추계금액 | 1,725 | 14 | 295 | 655 | 280 | 481 |

제4절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1. 현행법상의 문제점

가. 기금예산 운영의 불명확성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금은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은 일반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된다.

친일귀속재산은 특별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규정되어 있는 순애기금에 귀속되어 독립유공자 예우지원과 독립정신 선양정책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들은 현재 일반세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사업과 순애기금에서 지출하는 기금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친일귀속재산이 순애기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친일귀속재산이 순애기금으로 전입되어 일반예산과 혼재되어 기존 사업에 지출된다면, 정부가 일반세출예산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사업들을 친일귀속재산으로 실행하는 결과가 되어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애기금의 재원은 세출예산 전입, 자체수입, 용자리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지출예산 등의 부족을 이유로 일반예산에서 전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독립유공자 예우 및 가계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보충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친일귀속재산이 전입됨에 따라, 순애기금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분야의 노출 또는 그 동안 불충분했던 욕구지원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자금을 조성,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고, 계획변경과 집행의 자율성 측면에서 예산보다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 즉,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달리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금은 세항신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표Ⅴ-20> 기금과 예산의 차이

| 구 분 | 기 금 | 예 산 | |
|----------------|-------------------------------------------------------|------------------------------------------------|---------------------------------------|
|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1. 설치사유 |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
| 2.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사업수행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 3. 확정절차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수립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조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좌동 |
| 4. 집행절차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 ○좌동 |
|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
| 6. 계획변경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 ○추경예산편성 | ○좌동 |
| 7. 결산 |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 | ○좌동 | ○좌동 |

137

나.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의 형평성 문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한 지원은 손자녀인 3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물론 기타 유공자보다는 급여의 범위가 넓지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일제와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희생의 대가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후손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적절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또한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극히 제한적으로 3대인 손자녀까지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재원은 일반 세출예산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보훈급여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후손들은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순애기금을 통해 생활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표V-21>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예산

| | 수급자 | 2대 | 3대 | 4대 | 5대 |
|--------|---------------------------------------|----|----|----|----|
| 세출예산 | 보훈급여금·보상금·사망일시금·국고장학금, 국내 영주귀국 정착금 | | | | |
| 순애기금 | 생활지원·제수비·독립정신계승사업 | | | | |
| 친일귀속재산 | ? | | | | |
| | 생활지원·장학금·선양정책 등 | | | | |

2. 외국사례의 시사점

외국은 전쟁 직후 친 나치 대상에 대한 강력하고 직접적 처분으로 장기적이 문제가 처음부터 제거되었다.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배상 및 지원에 투입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다만 Hard ware적 사업과는 달리 Soft ware적 사업으로 숨겨진 애국지사의 미담이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회분위의 환기 및 교육에 접목 하였다. Soft ware적 사업을 문화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친숙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를 통한 국제연화제 등의 참가를 통하여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사업은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사회보훈)차원에서 일반화된 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한시적인 재정 확보는 기금을 통하여 국민적 애국심 등의 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시행적 관점에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른 국가 중 독일 점령 경험이 있었던 국가는 친 나치 재산을 즉각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일반 재정과 기금과 함께 반 나치 운동에 대한 선양활동 및 보훈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친일 인사에 대한 청산이 다른 국가와 시기적 차이가 있어 이미 보훈적 차원의 재정을 국고에서 조달하였고, 재산 귀속이 늦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서 수행한 사업 중 아직 우리가 행하지 못한 장기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친일귀속재산 사업 유형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는 현행 순애기금 사업을 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순애기금에서 하고 있는 기존사업만을 수행하는 경우(Ⅰ안)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의 기금에 댄기고 신규사업만 하는 경우(Ⅱ안) 및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Ⅲ안)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 친일귀속재산의 활용유형: 사업기준

| | | |
|------|----|----|
| 기존사업 | Ⅰ안 | Ⅲ안 |
| 신규사업 | Ⅱ안 | |

Ⅰ안: 친일귀속재산 전액을 현재의 순애기금에 통합해서 기존사업만을 수행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수준을 내실화 또는 증액하거나 독립정신 선양정책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 장점: - 현재 사업 범위내에서 사업수행 및 지출
 - 지원대상·지원수준 확대가능
 -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미루어왔던 사업수행 가능
- 단점: - 친일귀속재산을 별도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함(적용확대 불가능)
 - 기존사업을 수행하던 세출예산 전입이 안될 수도 있음.
 - 보훈기금등으로 차입될 가능성 상존(국가재정법)

Ⅱ안: 친일귀속재산 전액을 현재하고 있지 않는 신규사업만 수행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사업을 할 수 있다. 즉, 독립유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신규 독립정신 선양정책 사업을 발굴, 실시가능하다.

- 장점: - 친일귀속재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독립유공자의 4대, 5대 후손 지원가능

- 단점: -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헌소지발생
 -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저해
 - 무분별한 사업 확대 수행시 사업의 지속성확 어려움

Ⅲ안: 친일귀속재산의 일부는 현재 순애기금사업을, 일부는 신규사업을 수행. 신규사업의 특성에 맞게 전입된 친일귀속재산을 균형있게 배분해서 사용가능하다.

- 장점: - 귀속된 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유지가 장기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hard ware 적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기금의 영속적 성격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
- 단점: - 기금의 존재를 의식하여 관련 이익단체의 지속적인 보조 요구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정치적인 결정으로 유도 될 수 있음.
 - 또한 사업에 따라 국민 정서와 엇갈리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기금 운용에 대한 반대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4. 친일귀속재산 활용의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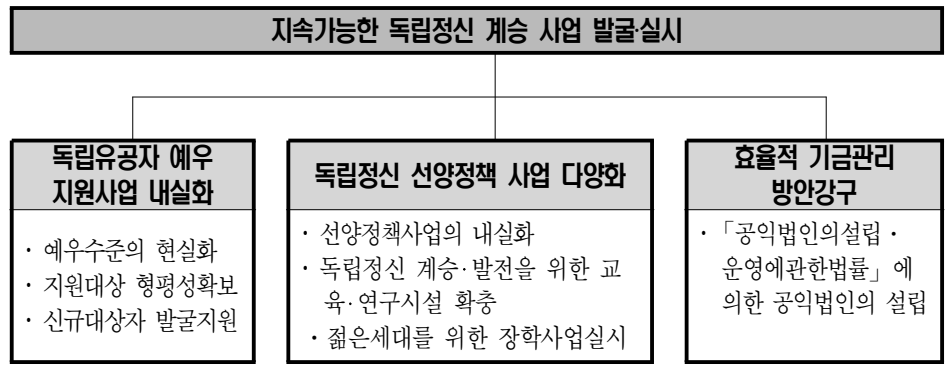
친일귀속재산은 부분적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실시하고, 신규 대상자 또는 신규사업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도록 해야한다³⁾. 즉, 특별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 - “독립정신계승·발전재단(가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독립정신 선양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친일귀속재산의 활용방안은 Ⅲ안이 타당하다.

문제는 신·구 사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가 관건인데 이는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조에는 특별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중요한 것은 독립정신 선양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결과 나타난 의견을 반영하여 ①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② 젊은 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등이 주요 정책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림 V-2> 친일귀속재산 활용의 기본방향



5.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현실화

가. 4~5대 후손들의 생활지원

독립유공자를 예우지원은 지원사업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후손들간의 형평성을 위해 4대, 5대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현시점에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연금수혜가 없는 자녀·손자녀)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독립유공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최저생계 이하 가구를 추정한 결과, 약 5천 가구 정도로 추정되면, 3~5대손까지 월 35만원을 지원해주는 경우 2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대손의 경우 예우지원대상이 되므로 형평성측면에서 4대, 5대손만 지원해주는 것을 가정하면 약 1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규모의 생활지원 예산을 친일귀속재산으로 지출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왜냐하면 150억원의 소요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금수익률이 연 10%에 달

해야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업은 실시하지 말아야한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해야하는 친일귀속재산의 특성상 극히 예우지원의 확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V-22>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사업

(단위: 억원, 명)

| 구분 | 지원대상가구 | | | 지원액 (단위: 억원) | | | | |
|------|--------|------|------|--------------|-----|----|---------|------|
| | 3대 | 4대 | 5대 | 3대 | 4대 | 5대 | 3+4+5대손 | 4+5대 |
| 2009 | 1760 | 2453 | 1325 | 74 | 103 | 56 | 233 | 159 |
| 2010 | 1691 | 2189 | 1200 | 71 | 92 | 50 | 213 | 142 |
| 2011 | 1635 | 1976 | 1097 | 69 | 83 | 46 | 198 | 129 |
| 2012 | 1586 | 1803 | 1010 | 67 | 76 | 42 | 185 | 118 |
| 2013 | 1543 | 1662 | 937 | 65 | 70 | 39 | 174 | 109 |
| 2014 | 1505 | 1548 | 874 | 63 | 65 | 37 | 165 | 102 |
| 2015 | 1470 | 1454 | 820 | 62 | 61 | 34 | 157 | 96 |
| 2016 | 1438 | 1378 | 772 | 60 | 58 | 32 | 151 | 90 |
| 2017 | 1408 | 1316 | 730 | 59 | 55 | 31 | 145 | 86 |
| 2018 | 1380 | 1266 | 692 | 58 | 53 | 29 | 140 | 82 |
| 2019 | 1353 | 1225 | 659 | 57 | 51 | 28 | 136 | 79 |
| 2020 | 1328 | 1192 | 630 | 56 | 50 | 26 | 132 | 76 |
| 2021 | 1303 | 1166 | 604 | 55 | 49 | 25 | 129 | 74 |
| 2022 | 1278 | 1145 | 581 | 54 | 48 | 24 | 126 | 72 |
| 2023 | 1254 | 1129 | 561 | 53 | 47 | 24 | 124 | 71 |
| 2024 | 1230 | 1118 | 543 | 52 | 47 | 23 | 121 | 70 |
| 2025 | 1206 | 1109 | 529 | 51 | 47 | 22 | 119 | 69 |
| 2026 | 1182 | 1104 | 516 | 50 | 46 | 22 | 118 | 68 |
| 2027 | 1158 | 1101 | 506 | 49 | 46 | 21 | 116 | 67 |
| 2028 | 1134 | 1100 | 498 | 48 | 46 | 21 | 115 | 67 |
| 2029 | 1109 | 1100 | 491 | 47 | 46 | 21 | 113 | 67 |
| 2030 | 1085 | 1102 | 486 | 46 | 46 | 20 | 112 | 67 |

주: 가구원수는 3.31명으로 가정(통계청), 지원액은 가구당 월35만원 가정
신규유입은 고려하지 않음

나. 제수비 지원

2009년 현재 제수비 지원가구는 6,588명으로 손자녀인 유족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나, 증손자까지 확대 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법 적용 비대상(증손자녀 이하)이 포상을 받은 경우(1,214명)와 유족 등록후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제적된 415가구를 포함하여 추가지급대상은 1,629가구로 연간 4억원 정도가 추가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증손자녀 제수비 지원시 추가 소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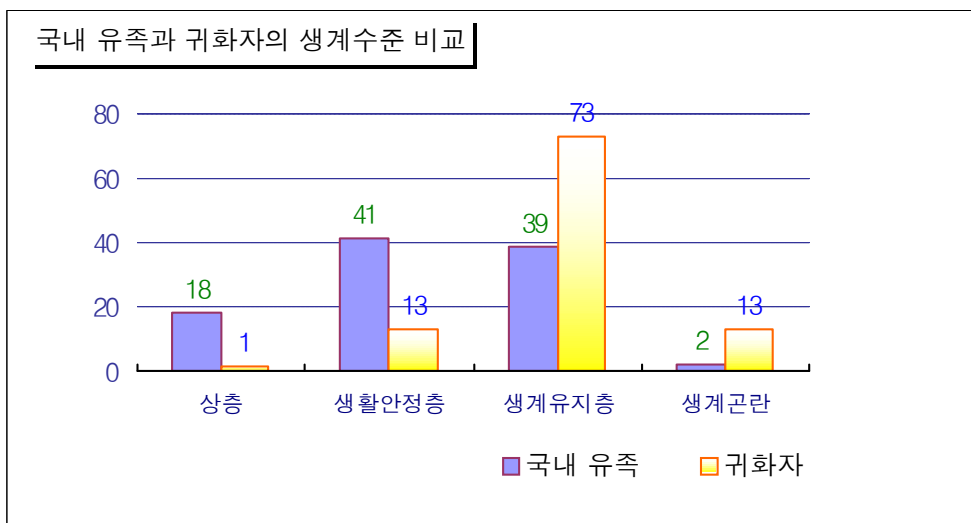
- 인원추계 : 1,629(포상자 중 법적용비대상 1,214 + 등록 후 제적 415)
- 소요예산 : 연 4억원(1,629×연25만원)

다. 해외거주 유족 지원확대

1) 지원 필요성

해외에서 영주귀국한 국내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원조국의 지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영주귀국자 대부분이 1일 노동에 의존하여 생활하거나 불안정한 생활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 대해 불만 세력화되거나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은 물론 애국지사·선국선열 들의 업적 등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V-3> 영주귀국자와 국내 독립유공자 유족과의 생계수준 비교



주 :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2)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정착금지원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중 세대주에게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세대별로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2005년 독립법이 개정되기 이전 아무리 많은 세대가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귀화를 하더라도 독립유공자 한 사람에게 1가구만 정착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한 세대가 있다. 이와 같이 정착금 미 수혜자로서 국내 거주요건이 충족된 후손들에게도 정착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년 현재 정착금 미수혜자 92세대 중 거주확인이 가능한 세대는 77세대이며 이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은 2005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수 년 동안 거주하면서 일정부분 정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규로 영주귀국하는 사람들과는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기존의 정착금과 달리 이들에게는 새로 조성되는 기금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지원 가능하므로 예산의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 개정 이전의 미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액은 신규 영주귀국자 지원액의 1/2 정도로 책정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롭게 소요되는 예산은 2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표 V-23>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정착금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액(만원) | 세대수 | 소요예산(억원) |
|----------------|-----------|------------------|-----|----------|
| 전체 | - | - | 77 | 22.1 |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세대주 | · 1인 세대 | 2,250(4,500×1/2) | 11 | 2.5 |
| | · 2~3인 세대 | 2,750(5,500×1/2) | 46 | 12.6 |
| | · 4인이상 세대 | 3,500(7,000×1/2) | 20 | 7.0 |

6. 독립정신 선양정책 사업 내실화

가. 독립정신 계승 교육·연구기관 확충·설치

우리나라의 그동안 독립정신 선양정책사업은 항일투쟁에 초점을 둔 극단적 활동에 국한된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국민의 애국정신에 연결하는 정책에 중심을 두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교육 및 계몽 정책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과 호응을 받았고, 효과적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반복 과정으로 식상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과 새로운 접근 정책과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에서의 애국과 애족의 개념을 고도의 국제화 상황과 연계하는 정책적 영역을 새로이 개발할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사업과 연결되고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고도의 정신적 해석이 가능한 평범한 일상에서의 항일사업과 애국지사의 생활 등을 발굴하고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문화적 자산과 연계한 문화 사업으로서 미술, 연극, 음악 및 드라마 특히 한국이 장점을 보이고 있는 영화 부문의 활성화(독립영화 포함)와 국제영화제 출품을 통한 자연스러운 항일 및 애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전달 등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의 교육, 문화, 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할 것이다. 의식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위대한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사업’의 확대와 다양화, ‘젊은 세대를 위한 독립정신 함양’ 시키는 사업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장학재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43.3%가 학비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20대 자녀의 경우 62.2%가 학비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장학사업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규모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만일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후손중 최저생계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9년 기준, 3~5대손의 중학생은 1600명, 고등학생 1603명, 469명으로 추계되어 총 3672명 수혜 예상인원으로 추계되었으며, 4~5대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약 2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표 V-24>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수혜대상자(최저생계이하자 기준)

| 구분 | 3대손(손자녀) | | | 4대손(증손자녀) | | | 5대손(고손자녀) | | |
|------|----------|-----|----|-----------|-----|-----|-----------|-----|-----|
| | 중학교 | 고교 | 대학 | 중학교 | 고교 | 대학 | 중학교 | 고교 | 대학 |
| 2009 | 113 | 143 | 68 | 910 | 955 | 298 | 577 | 505 | 103 |
| 2010 | 97 | 131 | 65 | 789 | 883 | 267 | 526 | 498 | 97 |
| 2011 | 87 | 103 | 62 | 713 | 728 | 241 | 500 | 443 | 94 |
| 2012 | 75 | 93 | 56 | 632 | 668 | 214 | 470 | 433 | 90 |
| 2013 | 58 | 73 | 51 | 520 | 566 | 192 | 414 | 399 | 88 |
| 2014 | 50 | 67 | 46 | 457 | 527 | 173 | 383 | 394 | 86 |
| 2015 | 38 | 52 | 41 | 374 | 448 | 158 | 333 | 363 | 85 |
| 2016 | 34 | 45 | 37 | 345 | 402 | 147 | 323 | 344 | 86 |
| 2017 | 29 | 34 | 34 | 319 | 335 | 138 | 316 | 306 | 87 |
| 2018 | 27 | 30 | 31 | 307 | 307 | 131 | 317 | 293 | 89 |
| 2019 | 23 | 25 | 29 | 288 | 281 | 125 | 311 | 284 | 91 |
| 2020 | 21 | 23 | 26 | 270 | 275 | 120 | 301 | 289 | 93 |
| 2021 | 17 | 20 | 24 | 245 | 267 | 115 | 283 | 293 | 94 |
| 2022 | 15 | 18 | 21 | 220 | 256 | 106 | 261 | 290 | 91 |
| 2023 | 13 | 16 | 19 | 197 | 240 | 103 | 240 | 281 | 94 |
| 2024 | 11 | 14 | 18 | 178 | 223 | 101 | 221 | 267 | 96 |
| 2025 | 10 | 12 | 17 | 160 | 201 | 99 | 204 | 248 | 98 |
| 2026 | 9 | 10 | 16 | 145 | 181 | 97 | 187 | 228 | 100 |
| 2027 | 7 | 9 | 14 | 130 | 163 | 93 | 171 | 210 | 98 |
| 2028 | 6 | 8 | 13 | 117 | 148 | 87 | 157 | 193 | 95 |
| 2029 | 5 | 6 | 11 | 105 | 133 | 81 | 142 | 177 | 90 |
| 2030 | 5 | 6 | 10 | 94 | 120 | 74 | 129 | 162 | 85 |

주: 신규진입이 없는 것으로 가정, 대학생은 일반대학, 평생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현행 교육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손자녀를 제외하고 최저생계수준 이하에 있는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2,719명에게 중고생은 연 100만원, 대학생은 연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V-25>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4~5대 후손 장학사업 소요예산 추계(5년간)

| 구분 | 4대손(증손자녀) | | | 5대손(고손자녀) | | | 소요예산(억원) | | |
|----|-----------|----|----|-----------|----|----|----------|-----|----|
| | 중학교 | 고교 | 대학 | 중학교 | 고교 | 대학 | 중고생 | 대학생 | 합계 |

| | | | | | | | | | |
|------|-----|-----|-----|-----|-----|----|------|-----|------|
| 2011 | 713 | 728 | 241 | 500 | 443 | 94 | 23.8 | 6.7 | 30.5 |
| 2012 | 632 | 668 | 214 | 470 | 433 | 90 | 22 | 6 | 28 |
| 2013 | 520 | 566 | 192 | 414 | 399 | 88 | 19 | 5.6 | 24.6 |
| 2014 | 457 | 527 | 173 | 383 | 394 | 86 | 17.6 | 5.2 | 22.8 |
| 2015 | 374 | 448 | 158 | 333 | 363 | 85 | 15.2 | 4.9 | 20.1 |

7.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가. 기금운용 방법

독립정신 선양을 위한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순애기금 내에서 직접운영하는 방식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자는 다른 사업과 혼합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보훈기금처럼 독립된 사업 계정을 달리하여 수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 V-26> 독립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

| |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승모사업) | 독립정신 선양정책 |
|------|----------------------------------------------------------------------------------------------------------------------------------------------------------|-----------------------------------------------------------------------------------------------------------------------------------------------------------------------------------------------------------------------------|
| 기존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애국지사 특별예우금 · 광복이후사망독립유공자 선순위자녀 1인에게 가계지원 · 수권유족 제수비지원 · 단순수급권자 생계부조금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일 및 기념행사 · 기념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사망시 예우 및 국립묘지 관리 · 순국선열 유해봉환사업 · 명예선양 · 사료수집 및 편찬 ·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 국제보훈활동 |
| 신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우 대상자 확대 · 해외 대상자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설립 · 교육/연구기관 설립 |

1 안. 순애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에서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훈기금처럼 ‘신규사업’계정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 장점: - 종전의 사업매뉴얼 사용을 통한 접근의 용이성
- 단점: - 기금운영의 독립성 유지의 어려움
 - 기존 순애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수준을 상회하지 못함
 - 목표달성 미흡

II안: 특정 목적을 위한 별도의 법인설립(장학사업, 육영사업 등)

신규사업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 장점:

- 독자적인 사업을 외부의 간섭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목표달성의 효율성 극대
-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단점

- 타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문제
- 기금운용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중요
- 기금운영의 안정성,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해야하는 어려움 존재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법에서 위임을 하는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처럼 기금을 위탁운용토록 함으로써 독립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순애기금으로 전입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친일재산특별기금’(가칭)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이유는 특별법 자체가 한시적인 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⁴⁾.

<표 V-27>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 운용하는 정부기금

| 기금명칭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
| 관리주체 | 농림부 | 문화관광부 |
| 위탁관리 |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 | 한국언론재단 |
| 설치근거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의3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
| 자산규모 | 72억원 | 100억원 |
| 06운용규모 | 336억원 | 251억원 |

한편 순애기금에서 또 다른 별도의 법인을 설치하는 경우,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출연의 경우,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⁵⁾.

4) 이와 같이 순애기금으로 귀속재산이 전입되면 그동안 일반세출예산에서 전입되던 약 50억원 규모의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5) 정부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

나. 별도법인 조성

전술한 바와 같이 친일국가귀속 재산은 매각 등을 거쳐 순애기금에 전입되면 자본금으로 적립되므로 기금의 특성상 자본금을 잠식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본금으로 적립된 기금의 이식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사업은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보다는 독립정신 선양정책 사업이 타당하다.

친일국가귀속 재산의 처분이 가능한 2009년도 이후에는 재산의 처분 · 수익사업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하기 위하여 순애기금 관리를 전담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순애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함으로써 기금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어 수익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친일재산이 기금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금 재산의 처분 · 수익사업 등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정부와 단체(광복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기금 목적사업수행에 전력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독립정신 선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공익재단 설립

공익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법인으로서 재산의 집단을 그 실체로 하며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가지고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인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각종 세

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과는 구분된다.

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으로 볼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애기금의 특성상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금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 공익의 적극적 유지·증진과 특히,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비영리재단법인과 공익재단법인의 차이점은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V-28> 비영리재단과 공익재단의 차이점

| 구 분 | 비영리 법인 | 공 익 법 인 |
|------|-------------------------------------------------------|---------------------------------------------------------------------------------------------|
| 설립근거 | · 민법 ·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
| 종 류 | · 사단법인, 재단법인 | · 사단법인, 재단법인 |
| 목적사업 | · 영리가 아닌 사업(반드시 공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지급, 학술, 자선 등 사회 일반을 위한 공익사업 |
| 허가기준 | ·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능력 ·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 타 법인과 같은 명칭 금지 | · 사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재정의 안정성 · 공익의 적극적 유지·증진 가능성 |
| 감독사항 | · 사업계획, 수지예산·결산서 제출 · 필요시 사무·재산상황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 · 임원 취임 및 재산변경, 수익사업 승인 · 장기차입 사전 허가 · 사업계획, 예산·결산서 제출 · 상근직원 정수 승인 등 · 수익사업 승인 |
| 지원사항 | · 법령에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지원사항 없음 | · 기부금 법인세·소득세 감면 · 출연자의 상속세, 증여세 면제 ·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

8. 재원 조성 추이와 사업 우선순위

전술한 바와 같이 친일귀속재산은 모두 토지로 일시에 현금으로 전환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원 조성 추이에 따라 추진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조성된 현금을 일시에 사용하게 되면 수년 내에 재원이 모두 소진되어 기금이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원금은 보존하되 그 운

용수익금을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원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독립유공자 개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금 운용 수익과 개별 사업별 소요예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기금운용 수익은 조성된 현금을 예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중 은행금리(5%)를 적용하였으며, '10년도 사업 및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신규 사업 추진 시기 및 소요예산은 '11년도 부터 추계하였다.

<표 V-29>를 보면 2011년부터 5년간 운용가능한 연평균 수익이 59억원 정도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금이나 제수비는 빠르면 2011년에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12년부터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일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생계곤란 후손에 대한 가계비 지원은 운용수익금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9> 연도별 기금운용수익 및 개별지원사업 소요예산 추계

(단위: 억원)

| 구 분 | | 합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누계) | | 1,725 | 309 | 964 | 1,244 | 1,725 | | - |
| 연도별 운용 수익 (당해년도 예탁금의 5%) | | 298.3 | - | 15.5 | 48.2 | 62.2 | 86.2 | 86.2 |
| 소요예산(계) | | 1,048 | - | 255 | 217 | 203 | 192 | 181 |
| 개별 지원 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 | | - | 22 | - | - | - | - |
| | 독립유공자 제수비 | | - | 4 | 4 | 4 | 4 | 4 |
| | 생계곤란 후손 장학금 (4~5대 후손) | | - | 31 | 28 | 25 | 23 | 20 |
| | 생계곤란 후손 가계비 지원 | | - | 198 | 185 | 174 | 165 | 157 |

제5절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및 시사점

1. 공모전 개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제70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여 친일귀속재산 활용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09.11.11~12.10일까지 1달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공모분야는 ①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개별 지원사업 ②독립운동 공훈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선양하는 데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행사, 교육·연구, 기념사업 ③친일귀속재산의 의미를 살리면서 독립운동 공훈을 기리거나 독립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 기념시설 건립 ④ 기타 귀속재산을 활용하여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친일인명사전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친일귀속재산과 독립운동 공훈선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총 347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었는데, 응모 연령층을 보면 10대 12%, 20대 40%, 30대 26%, 40대 14%, 50대 이상이 8%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해 20~30대 젊은층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모했음을 알 수 있다.

광복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당성, 실현가능성, 독창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4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2. 정책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

응모된 아이디어를 보면 유사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장학재단 설립, 대형 역사영화·드라마 제작, 생활속에서 친숙하게 이용가능한 도서관이나 공원 건립 등에 대한 중복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 심사에 오른 아이디어 36건을 세부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장학재단 또는 기념재단 설립 10건, 기념관 또는 기념시설 건립 9건, 독립유공자 예우 및 후손 개별 지원 6건, 교육·연구시설 6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건립 등 기타 5건 등이 있다.

<표 V-30> 주요 정책 아이디어

| 제 목 | 아이디어 요지 |
|---------------------------------------------|---------------------------------------------------------------------------------------------------------------------------------------------------------------------------------------------------|
| 친일행적지역관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한 토지중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일지역관 건립 - 과거에 대한 반성 및 고찰을 통한 바람직한 역사관 확립 (폴란드의 국민기억원과 같이) |
|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공헌한 후손 초청사업 연차적으로 실시 - 훈장 찾아주기 사업 병행 **외국인 포상자 :45명 |
| 친일재산조사위를 대체할 지원사무소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일재산 환수 활동을 이어감 -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활동의 주체가 됨 - 각종 관련 프로젝트 추진의 주체가 됨 |
| 장학재단 설립과 독립기념관 활용 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사업 등 추진 |
| 독립운동관련 지역문화 투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전문해설가를 통해 지식 전달 등 |
| 장학재단 설립(나라사랑 장학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심 고취와 나라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것을 목표 - 소수의 후손보다 일반 국민 저체를 대상으로 함 - 호국보훈의 달에 장학금 지급 |
| 수도권에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메모리얼 파크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원 선정 추진 -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메모리얼 파크 참조 |
| 독립기념관 주변에 독립군 마을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에게 독립군 생활 체험, 애국심 함양 -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건립 |
| 독립운동관련 웹툰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운동을 한 많은 위인의 활동을 신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 대형 포털에 게재 |
| 나라사랑 상품권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경제활성화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극장, 서점, 할인마트 등 나라사랑상품권 사용협조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상당수의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함 - 일반 국민에게도 선양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
| 나라사랑 스토리 영상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동상이나 기념탑과 관련된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 일대기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함 |
|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손에 대한 의료, 생활비, 대부, 장학자금 지원 |
| human 독립관 운영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공간 독립기념관 운영(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지역 독립유공자 중심의 은유적 형상물 제공) - 이동 독립기념관(방문차량) 운영 - 휴먼심리 지원사업(심리상담 지원) |
| 나라사랑 장학재단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 지원 |
| 독립정신을 컨셉으로 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테마관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화된 컨셉 및 쇼핑, 영화 등 복합공간으로 젊은층 유도 |
| 소규모 도서관을 전국적으로 건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운동 홍보 전시실과 도서관 기능을 복합하여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기획 |
| 해외 강제이주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및 해외에 있는 우리 역사유적 관리에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치하 러시아, 일본 등 해외 강제이주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복지지원 - 타 국가에 존재하는 우리역사유적 관리에 활용 |
| 일제강점기 전문 도서관 겸 기념관 건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바로알기 체험 위주의 도서관 -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알리는 만화책 제작 |

153

제 5장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 제 목 | 아이디어 요지 |
|--------------------------------|-----------------------------------------------------------------------------------------------------------------------------------------------------------------------------------------------------------------------------|
| 친일귀속재산으로 재단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상 제정 :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권위있는 상을 수여 - 홈페이지를 개설, 대한민국 역사 배움이 리그 개최 - 대한민국 역사 알림이 활동(연 1회 대한민국 박람회 개최, 역사 상징 기념품 제작, 해외반출 문화재 찾기 등) |
| 나라사랑 미디어 센터 건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각종행사+박물관+영상관+연회실 - 일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학생 및 국민교육의 장 활용 |
| 장학재단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을 설립하여 생활이 어려운 후손의 대학 학비 지원 |
| 독립유공자 마을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 귀국하는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 무상제공 - 국내 후손중 입주 희망자에게도 주택 무상제공 - 타운 내 조정 및 기념물 설치 |
| 청소년 역사도서관 건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거점도시에 역사도서관을 건립 - 독립유공자 등을 선정하여 강연회 개최 - 역사의식 함양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
|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에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 - 장학재단에서 매년 백일장, 경시대회 등 독립정신을 느낄 수 있는 행사 추진 |
| 타임히스토리파크(time history park)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시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테마파크로서 기존 독립기념관이 할 수 없는 리얼한 역사교육을 대체할 가족 단위 역사오락테마파크(오락+교육+휴식 기능) - 독립기념관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콘텐츠와는 별개로 오락 개념이 강한 시설로 추진 |
| 도서관 건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이나 각 실 등의 이름을 독립유공자의 이름으로 제명 - 도서관 곳곳에 독립유공자의 발자취, 특색 있는 물품 전시 - 독립유공자 후손을 도서관에서 일하게 함 |
|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에 빼앗겨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사용 - 민간차원의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법률적, 외교적 지원을 하는 간접적 형태로 사업 추진 |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운동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 수행,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 교육 등에 사용하여 환수재산의 의미를 높임 - 독립기념관,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교육기능 통합 - 독립운동사 관련 연구인력 양성 등 |
| '독립유공보상 바우처 제도'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계층의 후손에게 다양한 예우시책을 마련하되, 경제적 지원이 아닌 명예와 시간으로 보상 - 가구당 바우처를 할당하고 명절 기차표 예매시 별도의 예매 창구를 이용하게 하여 시간절약 - 종합병원, 은행이나 경기장 우선입장 예우시책 도입 등 |
| 항일문화재단 또는 항일기념재단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하 항일운동 관련 사건, 인물기념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
| 국가발전대상 시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국가발전에 동력이 되는 주요 부문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 |
| 광복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진흥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에 도서지원 - 독립유공자 후손 교육지원센터 및 학업보조프로그램 - 독립유가족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지원 - 독립유가족을 위한 국비유학 지원 |
| 나라사랑 장학회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이 어려운 후손에게 장학금 지원 - 국가 정통성에 관한 연구를 하는 대학생 등 지원 |

| 제 목 | 아이디어 요지 |
|-----------------|----------------------------------------------------------------|
| 청소년 장학재단 설립 | - 독립유공자 후손뿐만 아니라 일반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 나라사랑 프로젝트 추진 | - 찾아가는 나라사랑 역사관, 도심 속 나라사랑 역사테마파크 - 나라사랑 웹, 나라사랑 역사 캠프 |
| 찾아가는 나라사랑 연극 축제 | - 문화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역사를 바로 알리고,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축제를 통해 보훈의식 고취 |

<표 V-31> 최종 당선작

| 구 분 | 제 목 | 아이디어 요지 |
|-----|--------------------------------------|--------------------------------------------------------------------|
| 대 상 | 대한민국 역사길라잡이 초아재단 설립 |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상 제정, 청소년 교육, 장학금 지급 등 독립정신 선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 우수상 | "친일행적기억관" 설립 통한 역사의식 제고와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 친일환수재산(토지)에 친일행적기억관을 설립하여 역사적 교훈의 장으로 활용 |
| 장려상 | 독립유공보상 바우처 제도 시행 | 독립 후손에게 경제적 지원이 아닌 명예와 시간으로 보상하는 예우시책 마련(기차표 예매, 종합병원 예약시간 단축 등) |
| 장려상 | 타임히스토리파크 조성 (Time history park) | 구한말, 일제시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여 기존 독립기념관이 할 수 없는 리얼한 교육을 대체할 역사오락테마파크 |

3. 시사점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한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친일귀속재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잘 살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지원과 모든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양사업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딱딱한 기념관 건립이나 역사교육에서 벗어나 도서관이나 공원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활용한 선양사업과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 게임 또는 웹툰 제작 등을 통한 역사교육의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대상으로 선정한 아이디어는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장학사업, ‘역사지킴이 상’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정책담당자들이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현행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친일귀속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의

특별법 발효로 활동을 시작한 친일재산환수위원회가 4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2010년 7월 12일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국가로 귀속된 재산이 독립유공자 예우법 상에 규정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순차적으로 전입된다. 이와 같이 전입된 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예우법 제30조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지원,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및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725억원으로 예상되는 기금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예우 및 생활지원’에 대한 논의가 광복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그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후손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예산에서 순애기금으로 전입되던 사업기금이 친일귀속 재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 본 연구는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일반 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선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지원을 위해 후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대표적으로 지원의 대상을 5대손인 고손자녀까지 확대(37.2%)를 원하고 있었으나,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현재처럼 손자녀까지(57.6%)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문가 역시 손자녀까지가 56.6%로 나타나 적용범위의 확대 보다는 지원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는 개별지원 사항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 비인상에 대한 선호가 후손(40.4%)이나 일반 국민(62.0%) 모두 우선적으로 지원해

야할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당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는 후손이나 일반 국민 모두 ‘젊은 세대를 위한 독립정신 함양 캠페인 시행’을 중점사업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은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다양화’를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경우에는 순위가 바뀔 뿐 두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외국사례에서 발견되는 바처럼 콘텐츠 개발을 통한 영상, 홍보 등의 문화 사업으로 나치정권의 부정적인 측면과 민족의 우월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일귀속재산은 어느 누구의 몫도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시대를 초월한 독립정신 계승사업에 활용되어야 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수행해오던 순애기금사업들은 가능하면 기존의 틀 속에서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예우 및 생활지원 사업들도 객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정부의 세출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필요하면 귀속재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으나, 가능하면 기금이식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왜냐하면 친일귀속재산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3.1운동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정신 계승·발전 재단(가칭)”법인을 설립하여 순애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함으로써 기금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의 자체채용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증식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일재산이 기금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금재산의 처분·수익사업 등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단체(광복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안정적 기금증식을 이루어야 한다.

끝으로 독립정신 선양사업은 그동안 국가적 보훈사업이라는 정책적 테두리로 인하여 확대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하여야 한다. 특히

그동안 친일청산에만 주력한 경향에서 반일에 따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방면에서 나타난 이들의 장기적인 노력과의 연계를 통한 고도의 문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친나치 경력자에 대한 처벌과 재산몰수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의 경향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은 친나치 경력자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나 반나치 운동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휴머니즘에 벗어난 나치세력과 다양한 형태의 인간적 반응을 통한 반나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내는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기존의 전쟁의 잔재 청산적 단순한 정책적 판단에서 벗어나 깊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찰을 통한 고차원적인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승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적 노력은 다시 영화산업과 연결한 결과로서 <선들러리스트 쇼크>등의 문화적 충격으로 전 세계에 인류에게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혹성과 조국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적 가치를 연결하는 성공적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국민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최근의 예술적 접근 정책은 단순한 정책에 의한 국민계몽을 넘어서 예술로의 승화를 통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석승·김현기(2003),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한국보훈학회
 고휘주(1997), 독일의 보훈제도, 보훈연수원
 국가보훈처(2000),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국가보훈처(2005), 외국보훈제도종합비교연구: 미국·독일·프랑스·호주·대만편
 국가보훈처(2005), 외국의 보훈제도(대만·호주)
 국가보훈처(2005), 외국의 보훈제도(독일·프랑스)
 국가보훈처(2005), 외국의 보훈제도(미국)
 국가보훈처(2006),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국가보훈처(2006), 보훈연감
 국가보훈처(2008), 2008년도 보훈사업개요
 국가보훈처(2008), 국가보훈법령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4),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법제사법위원회정책연구 04-1
 김수봉·김진수·김상철·정찬미(2008),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김상철·김유경·김종성·김용하·이주연(2007), 한국의 국가보훈체계 개편
 연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종성(2005),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노상희·전성훈(2003), 보훈의료복지의 효율적 전달방안에 관한 연구, 보훈학술논문

집 제5회 국가보훈처

대한병원협회(2003), 보건의료분야 정책대안

문형표(2004), 보훈보상 및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안연구, 한국개발연구원·국가보훈처

백동현(20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그 의미, 역사비평 통권 75호(2006 여름), pp.20-28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역사와 기억 <http://past.snu.ac.kr>

선우진(2002), 보훈행사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연구, 보훈학술논문집 제4회

오일환(2004), 보훈보상의 현황과 개선책, 한국보훈학회편 홍익재

유영옥(2004), 보훈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보훈학회편, 홍익재

이승우(200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1호, 2009.4, pp.177-207

이용우(2005), 프랑스 과거 청산 푸른역사, 세계의 과거사청산

이용우(2008),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역사와 비평

이종호(2004),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숙청과 친일파청산>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장성구(2006),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광석(2003)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국가보훈기본법연구자료

정태현(2007), 불완전하지만 의미있는 '역사정리'의 첫걸음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에 관하여-, 한국역사연구회 2007. 7 기고문

주섭일(1999), 프랑스의 대숙청, 중심

주섭일(2004),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7),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 청산법령I

표경애(2000),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2002), 국가보훈기능강화 및 보훈행정조직발전방안연구

- Henry Rousso(1991), *Le Syndrome de Vichy*; 이학수(2006) 번역본
- Martin Polaschek(2006), *Justice and Nazi Collaborators in Austria*,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 과거청산의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 P.A. Huhler und H.F. Zacher, *Ein Jahrhundert Sozialversicherung*,
Schriftenreihe fuer Interantionales und Vergleichendes Sozialrecht, Band
6. 1981.
- Luc Huyse, "The Criminal System as a Political Actor in Regime Transitions:
the Case of Belgium, 1944-1950," *The Politics of Retribution i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인터넷자료>

- <http://www.mpva.go.kr/>(국가보훈처)
- <http://www.minjok.or.kr/>(민족문제연구소)
- <http://www.pcic.go.kr/>(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 <http://www.icjcp.go.kr/>(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http://www.kostat.go.kr/>(통계청)
- <http://www.kedi.re.kr/>(한국교육개발원)

부 록

부 록

[부 록 1] 국민의식 조사표 (독립유공자 후손)

ID

| | | | |
|--|--|--|--|
| | | | |
|--|--|--|--|

친일귀속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식 조사 (독립유공자 후손)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가 보훈처의 의뢰를 받아 “친일귀속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 김 용 하

담당부서 :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실

(02-380-8250)

* 주의사항 *

조사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거나 연로하여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조사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응답하여야 합니다.

| | | | | |
|-----------|--------|------------------------------|------|-------|
| 응답자 정보 | 응답자 성명 | | 전화번호 | Tel) |
| | 응답자 주소 | 구 동 | | |
| 면접원 정보 | 면접원 성명 | | 면접장소 | |
| | 면접일시 |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분간) | | |
| 검증원 정보 | 검증원 성명 | | 검증결과 | (,) |
| | 검증항목 | | | |

Part 1. 일반사항

SQ1. (면접원☞목소리 듣고 체크)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SQ2. 실례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① 0~9세 ① 10~19세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이상

SQ4.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본인제외)
 명

SQ5.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이상

165

부
록

Part 2.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문1. 귀하는 본인이 독립 유공자의 후손임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문1-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2번으로 이동)

문1-1.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부모님에게 들어서 ② 이번 조사를 계기로

문1-2. 귀하는 독립유공자의 몇 대 손이십니까?

- ① 손자녀(3대) ② 증손자녀(4대) ③ 고손자녀(5대) ④ 기타

문2. 귀하의 현재 혼인 여부는 어떠하십니까?

-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별거
⑤ 별거 ⑥ 기타 (사망 등)

문3.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가구형태)

-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 단독 : 1인 가구
- 모자 : 어머니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부자 :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소년소녀가장 :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단, 만 65세 이상인 할아버지/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며, 이 경우도 소년소녀 가장으로 구분한다.
- 기타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문4.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5.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예 (⇒문5-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문6번으로 이동)

문5-1.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문5-2. 현재 귀하가 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써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성적부진 ② 또래관계 ③ 교사와의 관계 ④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 ⑤ 학비부담 ⑥ 기타 ⑧ 없다 ⑨ 모름/무응답

문6.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임금근로자 (⇒문6-1번으로 이동) ②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종사가 포함)(⇒문6-1번으로 이동)
- ③ 실업자 ④ 비경제활동인구

문6-1. 귀하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_____ 만원

문7. 귀하의 경제수준은 생활하시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 (⇒문9번으로 이동)
④ 여유있는 편이다 (⇒문9번으로 이동) ⑤ 매우 여유있다 (⇒문9번으로 이동)

문8. (문7에 ①, ②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생활이 곤란하시다면 생계 곤란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고령, 불구폐질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렵다
- ② 질병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다
- ③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의 비용이 많이 든다
- ④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이 감소됐다
- ⑤ 기타 ()

Part 3. 후손의 의식 및 욕구에 관한 사항

문9. 귀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자랑스럽다 (⇒문9-1번으로 이동) ② 자랑스러운 편이다 (⇒문9-1번으로 이동)
 ③ 자랑스럽지 않다 (⇒문9-2번으로 이동) ④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문10번으로 이동)

문9-1. 어떤 때 자랑스럽게 느끼십니까?

- ① 독립운동관련 기념행사가 열리거나 행사에 초청받았을 때
 ② 주변 사람들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낼 때
 ③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때
 ④ 독립기념관과 같은 기념시설이나 현충시설을 견학할 때
 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자체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

문9-2.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독립운동을 한 댓가로 그 후손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②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이나 사회적 인식이 별로 높지 않아서
 ③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없어서
 ④ 기타

문10. 귀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반국민보다는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문11. 정부에서는 현재 일반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교육·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처럼 손자녀까지가 타당하다 ② 증손자녀(4대)까지 확대해야 한다
 ③ 고손자녀(5대)까지 확대해야 한다 ④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문12. 귀하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장학금, 학자금 저리대출 등 교육지원 ② 의료 지원

- ### ③ 주택 지원

- ④ 기타

문13.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 국가에서 제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손자녀나 고손자녀대까지 제수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가 적당하다 ② 증손자녀대까지 지원해야 한다 ③ 고손자
녀대까 지원해야 한다

Part 4. 친일환수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문14. 정부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② 그저그렇다 ③ 잘못된 일이다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문15. 환수한 친일재산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정신을 기리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 지원 사업
- ②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
- ③ 독립정신을 후세에 기억시킬 수 있는 상징시설 건립
- ④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연구

문16.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을 실시한다면 어떤 지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① 손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제수비(연 25만원)를 증손자녀까지 확대
- ②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 인상(현행 월 35만원)
- ③ 4~5대 후손(증, 고손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④ 해외 거주 후손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
- ⑤ 기타 ()

문17.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 어떤 것이 적당하다

고 보십니까? 2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기념식 규모 확대
- ② 위대한 독립유공자를 알리는 기념사업 확대·다양화(예: 안중근의사 기념사업,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 등)
- ③ 젊은 세대에게 독립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상시 캠페인 시행
- ④ 많은 국민에게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추진
- ⑤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같은 상징시설물 건립
- ⑥ 기타 ()

문 18.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사업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술회의·문헌발간 사업 강화
- ②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실시
- ③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책, 영상물 등)
- ④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교육 실시
- ⑤ 기타 ()

-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ID

친일귀속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식 조사 (일반국민)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가 보훈처의 의뢰를 받아 “친일귀속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 김 용 하

담 당 부 서 :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실

(02-380-8250)

* 주의사항 *

조사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 | |
|-------------------|-----------|-----------------------------------|------|-----------|
| 응답 자 정 보 | 응답자 성명 | | 전화번호 | Tel) 핸드폰) |
| | 응답자 주소 | 구 동 | | |
| 면접 원정 보 | 면접원 성명 | | 면접장소 | |
| | 면접일시 |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 시 분 (분간) | | |
| 검증 원 정 보 | 검증원 성명 | | 검증결과 | (,) |
| | 검증항목 | | | |

Part 1. 일반사항

SQ1. (면접원☞목소리 듣고 체크)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SQ2. 실례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59세 ⑤ 60세이상

SQ4.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본인제외)
 _____ 명

SQ5.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이상

Part 1. 경제활동

문1.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임금근로자 (⇒문1-1번으로 이동) ②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종사가 포함)(⇒문9-1번으로 이동)
 ③ 실업자 ④ 비경제활동인구

문1-1. 귀하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_____ 만원

문2. 귀하의 경제수준은 생활하시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③ 청소년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책, 영상물 등)
- ④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실시
- ⑤ 기타 ()

-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